연구보고 2018-25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이윤진 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8-25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연구책임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양 미 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 문 정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8-25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정인애드 02) 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84-8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 리 / 말

2017년 5월 조기대선으로 현 정부가 출범하였다. 통상적인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좀 더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초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육아정책과제에 대한 현 정부의 추진 의지를 분석, 평가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현 정부의 육아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정책입안자 및 정책집행자들과 소통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수행하는 연속과제로 현 정부의 육아정책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보고서가 첫 번째 결실이다. 현 정부의 육아정책 슬로건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이다. 육아정책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 뿐 아니라, 부모(주양육자)의 노동권도 보장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정책도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의 범위를 기존의 유아교육, 보육 정책에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 원장, 교사, 학계 전문가, 공무원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 차

요약 1

Ⅰ.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2. 연구내용 ····· 24
3. 연구방법 ····· 25
4. 연구범위 ····· 32
5. 연구추진과정 ····· 33

Ⅱ. 연구배경 35

1. 현 정부 국정과제와 육아정책 ····· 37
2. 국내외 육아정책 선행연구 ····· 55
3. 국외 육아정책 관리 우수사례: 핀란드 ····· 65

Ⅲ. 본 연구의 육아정책 과제 선정 및 정책수요자 인식 79

1. 본 연구의 육아정책 과제 선정 ····· 81
2.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 90
3. 2018년 신규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 115
4. 소결 ····· 122

Ⅳ. 정책수요자의 결혼·출산 인식 및 육아 실태 129

1. 저출산에 대한 인식 ····· 131
2.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 143

3. 영유아 가구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실태 ····· 150
4. 초등학교 저학년 가구 초등학교 이용 실태 ····· 155
5.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생 가구 사교육 실태 ····· 165
6. 소결 ····· 170

Ⅴ. 현 정부 육아정책 추진방안 173

1. 추진방향 및 전략 ····· 175
2. 추진방안 ····· 178

참고문헌 185

Abstract 189

부록 193

부록 1. 영유아부모 면담설문지 ····· 195
부록 2. 초등자녀부모 면담설문지 ····· 198
부록 3. 예비부모 면담설문지 ····· 201
부록 4. 비혼성인 면담설문지 ····· 204
부록 5. 원장 및 교사 면담설문지 ····· 206
부록 6. 전문가조사 설문지 ····· 209
부록 7. 일반국민조사 설문지 ····· 232
부록 8. 기관조사 설문지 ····· 248

표 목차

〈표 Ⅰ-3-1〉 영유아 부모 면담 대상 특성 ····· 26
〈표 Ⅰ-3-2〉 초등학생 부모 면담 대상 특성 ····· 26
〈표 Ⅰ-3-3〉 예비부모 면담 대상 특성 ····· 27
〈표 Ⅰ-3-4〉 비혼성인 면담 대상 특성 ····· 27
〈표 Ⅰ-3-5〉 어린이집 교직원 면담 대상 특성 ····· 28
〈표 Ⅰ-3-6〉 전문가조사 대상 특성 ····· 28
〈표 Ⅰ-3-7〉 설문조사 내용(가구) ····· 29
〈표 Ⅰ-3-8〉 조사 참여자 특성(일반국민) ····· 30
〈표 Ⅰ-3-9〉 설문조사 내용(원장·교사) ····· 30
〈표 Ⅰ-3-10〉 조사 참여자 특성(원장·교사) ····· 31
〈표 Ⅰ-3-11〉 설문조사 개요(전문가, 가구, 원장·교사) ····· 31
〈표 Ⅰ-4-1〉 기존연구와 차별화한 본 연구의 육아정책 ····· 33
〈표 Ⅱ-1-1〉 100대 국정과제 투자계획 ····· 40
〈표 Ⅱ-1-2〉 현 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목표-전략-과제 ····· 41
〈표 Ⅱ-1-3〉 현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별 추진체계 ····· 43
〈표 Ⅱ-1-4〉 현 정부 육아정책 대목표, 세부목표, 정책과제 ····· 44
〈표 Ⅱ-1-5〉 육아정책 관련 입법계획 ····· 51
〈표 Ⅱ-2-1〉 한국의 육아지표 - 기초, 유아교육·보육 분야 ····· 55
〈표 Ⅱ-2-2〉 주요 유아교육 지표 ····· 57
〈표 Ⅱ-2-3〉 보육정책의 주요 성과 지표(2010~2014) ····· 58
〈표 Ⅱ-2-4〉 보육정책의 성과 평가 지표(2015) ····· 59
〈표 Ⅱ-2-5〉 누리과정 정책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 60
〈표 Ⅱ-2-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률 ····· 61
〈표 Ⅱ-2-7〉 국외 육아정책 분석 사례 ····· 64
〈표 Ⅱ-3-1〉 Kela에서 수행한 육아 관련 주요 연구 프로젝트들 ····· 72
〈표 Ⅱ-3-2〉 THL 조직도 및 업무 ····· 74
〈표 Ⅱ-3-3〉 THL에서 최근 수행한 육아 및 아동 관련 연구들 ····· 75

〈표 Ⅲ-1-1〉 3개 중목표 간 상대적 중요도 ····· 82
〈표 Ⅲ-1-2〉 8개 세부목표 간 상대적 중요도 ····· 83
〈표 Ⅲ-1-3〉 8개 세부목표 종합 우선순위 ····· 83
〈표 Ⅲ-1-4〉 중목표1(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 84
〈표 Ⅲ-1-5〉 중목표2(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 84
〈표 Ⅲ-1-6〉 4개 세부목표별 핵심과제 수 ····· 85
〈표 Ⅲ-1-7〉 10대 핵심정책과제 목록 ····· 86
〈표 Ⅲ-1-8〉 유아교육 혁신방안 5개년 계획 정책과제 중요도 ····· 87
〈표 Ⅲ-1-9〉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정책과제 중요도 ····· 88
〈표 Ⅲ-1-10〉 선정한 15대 핵심육아정책 목록 ····· 89
〈표 Ⅲ-2-1〉 선정한 2대 중목표 중요도(일반국민) ····· 91
〈표 Ⅲ-2-2〉 선정한 4대 세부목표 중요도(일반국민) ····· 93
〈표 Ⅲ-2-3〉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일반국민) ····· 95
〈표 Ⅲ-2-4〉 유아교육·보육 정책 중요도(일반국민) ····· 97
〈표 Ⅲ-2-5〉 선정한 2대 중목표 중요도(원장) ····· 98
〈표 Ⅲ-2-6〉 선정한 4대 세부목표 중요도(원장) ····· 100
〈표 Ⅲ-2-7〉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원장) ····· 102
〈표 Ⅲ-2-8〉 유아교육·보육 정책 중요도(원장) ····· 103
〈표 Ⅲ-2-9〉 선정한 2대 유아교육정책 중요도(원장) ····· 104
〈표 Ⅲ-2-10〉 선정한 3대 보육정책 중요도(원장) ····· 106
〈표 Ⅲ-2-11〉 선정한 2대 중목표 중요도(교사) ····· 107
〈표 Ⅲ-2-12〉 선정한 4대 세부목표 중요도(교사) ····· 109
〈표 Ⅲ-2-13〉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교사) ····· 110
〈표 Ⅲ-2-14〉 유아교육·보육 정책 중요도(교사) ····· 111
〈표 Ⅲ-2-15〉 선정한 2대 유아교육정책 중요도(교사) ····· 113
〈표 Ⅲ-2-16〉 선정한 3대 보육정책 중요도(교사) ····· 114
〈표 Ⅲ-3-1〉 아동수당 수급 여부 ····· 115
〈표 Ⅲ-3-2〉 아동수당 비수급 이유 ····· 116
〈표 Ⅲ-3-3〉 아동수당제도 발전방향 ····· 117
〈표 Ⅲ-3-4〉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현황(원장) ····· 118
〈표 Ⅲ-3-5〉 보육교사 휴게시간 비보장 이유(원장) ····· 118

〈표 Ⅲ-3-6〉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장안착 위한 지원 필요사항(원장) ····· 119
〈표 Ⅲ-3-7〉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현황(교사) ····· 120
〈표 Ⅲ-3-8〉 보육교사 휴게시간 비보장 이유(교사) ····· 121
〈표 Ⅲ-3-9〉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장안착 위한 지원 필요사항(교사) ····· 121
〈표 Ⅲ-4-1〉 선정한 복합·혁신 과제의 중요도 결과 ····· 125
〈표 Ⅳ-1-1〉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전문가) ····· 132
〈표 Ⅳ-1-2〉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일반국민) ····· 132
〈표 Ⅳ-1-3〉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원장) ····· 133
〈표 Ⅳ-1-4〉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교사) ····· 134
〈표 Ⅳ-1-5〉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전문가) ····· 136
〈표 Ⅳ-1-6〉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일반국민) ····· 137
〈표 Ⅳ-1-7〉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원장) ····· 138
〈표 Ⅳ-1-8〉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교사) ····· 138
〈표 Ⅳ-1-9〉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전문가) ····· 139
〈표 Ⅳ-1-10〉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일반국민) ····· 141
〈표 Ⅳ-1-11〉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원장) ····· 141
〈표 Ⅳ-1-12〉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교사) ····· 142
〈표 Ⅳ-2-1〉 향후 결혼 계획(비혼성인) ····· 143
〈표 Ⅳ-2-2〉 추가 출산 계획(영유아 부모) ····· 144
〈표 Ⅳ-2-3〉 추가 출산 불투명 이유(영유아 부모) ····· 145
〈표 Ⅳ-2-4〉 추가 출산 계획(초등 저학년 부모) ····· 146
〈표 Ⅳ-2-5〉 추가 출산 불투명 이유(초등 저학년 부모) ····· 146
〈표 Ⅳ-2-6〉 향후 출산 계획(무자녀 성인) ····· 148
〈표 Ⅳ-2-7〉 출산 불투명 이유(무자녀 성인) ····· 148
〈표 Ⅳ-3-1〉 영유아 재원 기관 유형 ····· 150
〈표 Ⅳ-3-2〉 재원 기관 등하원 시간 및 이용시간 ····· 152
〈표 Ⅳ-3-3〉 기관 비이용 이유 ····· 153
〈표 Ⅳ-3-4〉 재원 기관 이용비용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비용 ····· 154
〈표 Ⅳ-3-5〉 재원 기관 만족도 개요 ····· 155
〈표 Ⅳ-4-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및 재학시간 ····· 156
〈표 Ⅳ-4-2〉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여부 ····· 157
〈표 Ⅳ-4-3〉 방과후 돌봄교실 시작·종료시간 및 이용시간 ····· 158
〈표 Ⅳ-4-4〉 방과후 돌봄교실 미이용 이유 ····· 159

〈표 Ⅳ-4-5〉 방과후 자녀 돌봄 성인 ····· 160
〈표 Ⅳ-4-6〉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비용 ····· 161
〈표 Ⅳ-4-7〉 방과후 돌봄교실 만족도 ····· 162
〈표 Ⅳ-4-8〉 온종일 돌봄정책 저해요인 ····· 163
〈표 Ⅳ-4-9〉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 의견 ····· 164
〈표 Ⅳ-5-1〉 사교육 수 ····· 165
〈표 Ⅳ-5-2〉 월평균 사교육비 ····· 167
〈표 Ⅳ-5-3〉 사교육비의 가구 경제 부담 정도 ····· 168
〈표 Ⅳ-5-4〉 초등 저학년 이하 유아 영어교육 금지 의견 ····· 169
〈표 Ⅴ-1-1〉 육아정책 수요자 분류틀(일반국민) ····· 176
〈표 Ⅴ-2-1〉 복합·혁신 핵심과제(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원안 ····· 178
〈표 Ⅴ-2-2〉 복합·혁신 핵심과제(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개정안 ····· 179
〈표 Ⅴ-2-3〉 선정한 복합·혁신 핵심정책과제 추진방안 ····· 181
〈표 Ⅴ-2-4〉 선정한 유아교육·보육 정책과제 추진방안 ····· 183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그림 목차

[그림 Ⅰ-5-1] 본 연구 추진과정 ····· 34
[그림 Ⅱ-1-1]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 39
[그림 Ⅱ-1-2] 육아정책 관련 복합·혁신과제 주요 내용 ····· 45
[그림 Ⅱ-1-3] 정책기획위원회 구성도 ····· 47
[그림 Ⅱ-1-4] 국정과제협의회 조직도 ····· 47
[그림 Ⅱ-1-5]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조직도 ····· 48
[그림 Ⅱ-1-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도 ····· 49
[그림 Ⅱ-1-7]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복합·핵심과제 추진전달체계(잠정) ····· 50
[그림 Ⅱ-1-8]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비전 및 추진과제 체계도 ····· 53
[그림 Ⅱ-1-9] 보건복지부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체계도 ····· 54
[그림 Ⅱ-3-1] Kela의 조직도 ····· 67
[그림 Ⅱ-3-2] 켈라가 지급한 가족수당(2017) ····· 68
[그림 Ⅱ-3-3] 핀란드 영유아 연령별 기관 이용(2015) ····· 70
[그림 Ⅱ-3-4] 핀란드 육아정책 우선 순위조사(2004-2010-2014) ····· 71
[그림 Ⅲ-1-1] 중목표와 세부목표 위계구조 ····· 82
[그림 Ⅲ-2-1]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자녀 유무) ····· 95
[그림 Ⅲ-2-2]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성별) ····· 96
[그림 Ⅲ-4-1] 2개 중목표 집단 간 비교 ····· 123
[그림 Ⅲ-4-2] 4개 세부목표 집단 간 비교 ····· 124
[그림 Ⅲ-4-3] 현 정부 주요 유아교육·보육 정책 집단 간 비교 ····· 126
[그림 Ⅲ-4-4] 현 정부 주요 유아교육 정책 집단 간 비교(유치원) ····· 127
[그림 Ⅲ-4-5] 현 정부 주요 보육교육 정책 집단 간 비교(어린이집) ····· 127
[그림 Ⅳ-1-1]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 비교 ····· 131
[그림 Ⅳ-1-2]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 비교 ····· 135
[그림 Ⅳ-1-3]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에 대한 인식 비교 ·· 139
[그림 Ⅳ-2-1] 자녀수에 따른 추가 출산 계획 비교 ····· 149
[그림 Ⅳ-2-2] 생애주기에 따른 향후 출산 계획 비교 ····· 150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역대 정부에서도 육아정책은 중요한 국정과제였음. 막대한 예산을 육아정책에 투입해서 많은 관련 정책들을 발굴, 수립, 추진해 옴.

□ 한편, 정부정책은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이 있는가 하며 그렇지 않는 정책은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을 진단, 평가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정책이 전자에 해당하며 누리과정 정책이나 많은 유아교육 정책, 보육 정책들이 후자에 해당함.

□ 육아정책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분석을 해왔으나, 정책 효과는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는 육아정책과 정책수요자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육아정책의 모니터링, 평가, 분석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 정책평가의 대부분이 산식을 통한 정량평가로 이루어짐. 정량평가에서 저출산 정책 목표 달성률 100%를 상회하는 정책과제가 대부분임. 정책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실제 정책 효과는 저조한 것이 현실임.

□ 본 연구의 목적은 5년(2018년~2022년) 연속과제의 1년차 연구로서,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아정책들 중에서 향후 본 연구에서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육아정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및 정책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음.

- 향후 5년간 진행하는 본 연구는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목표치, 수치 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육아정책의 범위를 조작적으로 정의함.

□ 국내·외 육아정책을 분석 또는 평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함.

□ 육아정책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핀란드의 정책관리 사례를 고찰함.

□ 현 정부의 다양한 육아정책들 중에서 앞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육아정책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룰 육아정책을 선정함.

□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해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파악함. 아울러 정책수요자들의 실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과 육아 실태를 조사함.

□ 현 정부의 육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면담조사(영유아·초등자녀를 둔 학부모, 무자녀 성인: 기혼, 비혼 포함, 어린이집 원장·교사)

□ 전문가 의견조사

- 목적: 현 정부 주요 정책 집약체라 할 수 있는 4대 복합·혁신과제 중 육아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 노동, 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해소” 정책에서 본 연구에서 다룰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함. 38개 정책과제에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함.
- 교육, 노동, 복지 각 분야별(유아교육·보육 12명, 노동·경제 11명, 사회복지 10명 등 총 33명) 전문가를 선정함.
  -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12명에게는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 다룰 정책과제를 추가로 선정하도록 함. 5대 정책과제를 선정함.
- 방법: AHP 기법(쌍대비교)

□ 설문조사

- 가구조사: 영유아 자녀 및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 무자녀 기혼 성인(예비 부모 포함) 및 비혼 성인 500명 총 1,500명 대상으로 실시함.
  -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선정한 현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저출산의 심각성, 원인, 대응책, 그리고 결혼, 출산, 육아 실태를 질문함.

- 원장·교사 조사: 한 기관에서 원장과 교사를 1명씩 선정해서 실시함(쌍표집). 본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어린이집 159개원, 유치원 150개원 등 총 309개원임.
  -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선정한 현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저출산의 심각성, 원인, 대응책 등을 질문함.

□ 국외출장

- 목적: 육아정책의 대표적인 선진국인 핀란드 수도 헬싱키를 방문하여 육아정책 현황 및 정책의 형성·수립, 이행, 성과 및 평가, 피드백 등 일련의 정책 관리 체계를 파악하기 위함(9월 2일~7일, 4박 6일 일정).
  - 양육수당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켈라(Kela),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보건복지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THL), 공사립 유치원 및 데이케어 센터, 최근에 설립한 가족지원센터(Family Center)를 방문함.

라.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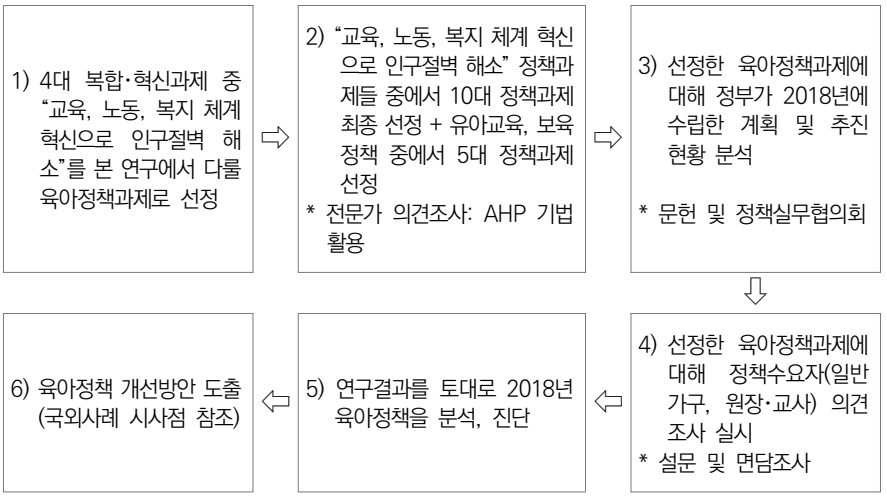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다룰 육아정책의 범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 중의 하나인 "교육, 노동, 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로 한정함.

- 4대 복합·혁신과제란 "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로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추진할 과제"로서, 현 정부가 가장 주력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과제임.

□ 본 연구에서 다룰 육아정책은 유아교육, 보육, 가정 내 양육 등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7: 3) 개념으로 확장하되, 출산 이후 지원정책에 초점을 둠.

- 현 정부 육아정책 모토(moto)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임.
  - 초저출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아이키우기(육아)는 '일'(노동)과 결부된 넓은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마. 연구추진과정



2. 연구배경

가. 현 정부 국정과제와 육아정책

□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국가비전 하에, 5대 국정목표를 수립함.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로 핵심 정책으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함.

□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육아정책과 가장 관련된 국정전략은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해당되는 국정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과 전략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임.

- 국정전략 2에 속하는 7대 국정과제 중 육아 관련 국정과제는 ①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②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③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④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등 4개 과제임.
- 국정전략 4에 속하는 4대 국정과제 중에서는 ①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와 ②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등 2개 과제가 해당됨.

□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4대 복합·혁신과제**를 제시함. 선정 기준은 ①핵심공약과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 ②예산·인력 등 정책 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③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임. 이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복합·혁신과제는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임.

- 해당 복합·혁신과제의 세부목표는 크게 ①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 시스템 구현, ②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③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등 3개임.
- 하위목표로는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주거 공공성 강화, 일·가정 양립 일상화, 성평등 문화 정착,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이 포함됨.
- "교육, 노동, 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복합·혁신과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담당함.

나. 국외 육아정책 관리 우수사례: 핀란드

□ 핀란드의 육아정책은 정치나 경제와 같은 외부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 옴. 이에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음.

- 모든 수당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Kela는 의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회보장기구로서, 정부로 부터는 독립된 관리 체계와 자금 운영을 하고 있음.

□ THL(국립보건복지연구소)은 핀란드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연구 및 관찰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연구기관임.

- 연구와 통계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정보와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현장전문가, 일반국민 등등 다양한 정책고객들을 지원함.
- 주로 특정 주제(예: 약물과 임신, 조산, 비만 등)의 중장기 연구, 출생코호트 연구 등 다년간 연속 연구를 수행함.

□ 국가 수준의 정책연구소의 연구를 기반으로 육아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핀란드의 육아정책 목표는 명료함.

- "비용과 서비스의 조화로운 지원을 통한 보편주의와 소득보전"임.
- 우리나라 정책목표는 행복추구, 공공성 강화 등 다소 추상적인 것에 비해 핀란드의 육아정책은 어떠한 방법(비용과 서비스의 조화로운 지원)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겠다(보편주의와 소득보전)는 내용이 목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3. 육아정책 과제 선정 및 정책수요자 인식

가. 본 연구의 육아정책 과제 선정

□ “교육, 노동, 복지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복합·핵심과제의 3개 중목표, 8개 세부목표, 38개 세부과제의 중요도에 대해 AHP방법을 활용하여 2018년 육아정책 과제를 선정함.

- 3개 중목표 간 쌍대비교(1단계)를 통하여 산출한 상대적 중요도와 8개 세부목표 간 쌍대비교(2단계)를 통하여 산출한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개 세부목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함.
  - 5순위 안에 든 세부목표 중 출산이후의 육아정책과 관련한 세부목표 4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함: ①일·가정 양립 일상화, ②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③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④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선정한 4개 세부목표 간의 상대적 가중치와 세부목표별 하위 정책과제 수를 반영하여 종합가중치를 산출하여 각 세부목표별로 선정할 핵심정책과제 수를 정함.
- 선정한 4개 세부목표별로 배분된 핵심과제 수에 따라 각 세부목표별 하위과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10대 핵심정책과제를 선정함.

□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노동, 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복합·혁신과제에 누락되어 있는 유아교육·보육정책을 추가로 선정함.

- 유아교육 혁신방안 5개년 계획의 6대 추진과제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1,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추진과제를 2개를 선정함: ①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②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을 통한 공공성 강화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13개 추진전략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1,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추진과제를 3개를 선정함: 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②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③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요약 표 1 선정한 15대 핵심육아정책 목록

분야	핵심정책과제
복합·혁신과제 10대 과제 (저출산정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유아교육·보육정책 5대 과제	•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나.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 2개 중목표에 대한 집단 간 비교

- 중목표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과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은 일반국민과 원장·교사 모두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표 2 참조).

□ 4개 세부목표에 대한 집단 간 비교

- 일반국민과 원장·교사 모두 4개 세부목표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자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중에서 **"자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을 1순위로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을 4순위로 꼽음(표 2 참조).
- 그러나 일반국민은 이들 4개 세부목표의 중요도 점수 차이가 거의 없음. 즉, 4개 세부목표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함.
- 2순위에서 의견이 갈렸는데, 일반국민은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를, 원장·교사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2순위로 꼽음.

- 일반국민은 "자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자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에 해당하는 하위 정책과제가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달성임. 이를 종합하면, **자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공교육 강화로 실현될 수 있다고 봄.**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에 대해 돌봄을 담당하는 원장의 점수가 가장 낮음. 돌봄의 주체를 가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됨.

□ 10대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집단 간 비교

- 일반국민, 원장·교사 모두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의 하위 세부과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재원 확보방안"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3개 과제가 상위 3순위를 차지함(표 2 참조).
  - 육아와 노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육아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 또는 일시·잠정적 중단 등의 정책이 필요함.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각 목표별(위계별)로 1순위 중요도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음(표 2 참조).

- 현 정부의 저출산 복합·혁신과제의 체계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중목표, 세부목표, 핵심정책과제가 일관되게 1순위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는 특정 또는 일부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시사

요약 표 2 선정한 복합·혁신과제 중요도 결과

중목표	세부목표	핵심정책과제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주: 굵은 선은 일반국민, 원장·교사 공통으로 1순위로 나옴.

□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에 대한 일반국민 조사 결과,

- “일·가정 양립 재원 확보”가 5.88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5.74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72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5.65점 등 순으로 나타남.
- 유자녀 성인이 무자녀 성인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핵심정책과제의 점수가 높게 나옴(표 3 참조).
-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이며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구조가 여전히 견고함을 의미함.

요약 표 3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일반국민)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유자녀 성인	무자녀 성인	*t*	남성	여성	*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72	5.77	5.62	4.833*	5.57	5.87	23.853***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일·가정양립 재원 확보	5.88	5.90	5.84	1.004	5.78	5.99	12.994***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5.74	5.76	5.69	1.441	5.57	5.92	35.339***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52	5.57	5.40	5.402*	5.53	5.50	.125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달성	5.65	5.73	5.50	11.595**	5.60	5.70	2.220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5.41	5.44	5.35	1.634	5.33	5.50	6.960**
만0~5세 월10만원 아동수당 도입	5.12	5.18	5.02	3.391	5.08	5.17	.993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5.47	5.51	5.38	3.408	5.45	5.49	.368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5.52	5.56	5.45	2.155	5.45	5.60	5.271*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5.49	5.57	5.35	11.287**	5.45	5.54	2.435
사례수	1,500	1,000	500		767	733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원장 조사 결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5.87점으로 1순위, “일·가정양립 재원 확보” 5.86점으로 2순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5.59점으로 3순위로 나옴(표 4 참조).
  - 순위 차이는 있으나, 이 3개 핵심정책과제는 전문가 의견조사 및 일반국민 설문조사에서도 3위권에 들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할 정책임.
- “국공립 유치원 및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은 각각 4.79점, 4.76점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옴. 특히, 사립유치원(3.55점), 민간/가정어린이집(4.44점)이 낮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요약 표 4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원장)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F*
		국공립	법인/직장	민간/가정	국공립	사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87	5.86	5.74	5.66	6.05	5.96	1.297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일·가정양립 재원 확보	5.86	5.56	5.69	5.62	6.27	5.95	4.199**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5.59	5.53	5.46	5.38	5.99	5.49	2.807*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39	5.28	5.74	5.04	5.43	5.60	1.698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달성	4.79	4.98	5.21	4.36	6.16	3.55	27.537***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5.31	5.19	5.74	5.00	5.70	5.07	4.398**
만0~5세 월10만원 아동수당 도입	4.19	5.14	5.36	4.82	5.59	5.05	6.749***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5.17	5.14	5.36	4.82	5.59	5.05	3.086*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4.81	4.86	5.03	4.68	5.11	4.49	1.697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4.76	4.91	5.28	4.44	5.52	3.97	11.097***
사례수	309	43	39	77	75	75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교사 조사 결과,

- 일반국민과 원장의 조사결과와 상위권 3개 핵심정책과제가 일치함. 아동수당 도입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앞서 일반국민, 원장과 동일하게 가장 점수가 낮음(표 5 참조).
- 주목해야 할 점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40% 달성"에 대해 각각 5.19점, 5.04점으로 원장의 4.79점, 4.76점보다 높음. 즉, 원장보다 이 정책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음.
- 사립 및 민간보다 국공립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가 국공립 확충 정책을 더 지지함.

요약 표 5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교사)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F*
		국공립	법인/직장	민간/가정	국공립	사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12	6.37	6.33	5.75	6.21	6.16	3.498**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일·가정양립 재원 확보	6.14	6.30	6.31	5.79	6.24	6.23	3.12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6.03	6.30	6.31	5.79	6.24	6.23	2.173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36	6.23	6.15	5.77	6.16	6.00	1.783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F
		국공립	법인/직장	민간/가정	국공립	사립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달성	5.19	5.30	5.67	4.69	6.29	4.31	18.755***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5.35	5.14	5.69	5.03	5.49	5.49	2.238
만0~5세 월10만원 아동수당 도입	4.79	4.44	4.79	4.56	5.00	5.03	1.455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5.47	5.60	5.59	5.21	5.72	5.36	1.812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5.06	5.33	5.41	4.92	4.77	5.16	1.532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5.04	5.23	5.46	4.71	5.36	4.73	3.821**
사례수	309	43	39	77	75	75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 2대 유아교육정책으로 선정된 "국공립기관 취원율 확대"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전자를, 원장·교사는 후자는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 일반국민이 희망하는 "국공립기관 취원율 확대"에 대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4.91점)과 사립유치원 원장(3.59점)의 점수가 평균 5.00점보다 낮음.

□ 3대 보육정책으로 선정된 "적정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에 대해서 원장과 교사,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원장은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교사는 적정 처우 보장을 1순위로 꼽음.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가 적정보육료 지원보다 중요하다고 봄.
-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적정보육료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다. 2018년 신규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받고 있다" 82.0%, "받고 있지 않다" 18.0%로 나옴.

- 받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연령이) 대상이 아니어서"(36.1%) "고소득 가구라서"(27.8%) 순으로 나왔으나, "아동수당을 몰라 신청조차 못해서"도 23.1%로 세 번째로 많이 나옴.
-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초등학생까지 연령확대,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 금액 지원,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순으로 나옴.

□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일일 1시간 보장 실태를 알아본 결과, “보장 안함”이 원장 응답 3.8%, 교사 응답 20.1%로 동일 기관에서 쌍표 집임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사의 응답 차이가 컸음.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의 “보장 안함” 응답이 많이 나온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0.0%이라 했지만, 교사는 각각 20.9%, 12.8%로 나옴.
  - 원장은 휴식시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영유아의 특성상 마음 놓고 휴식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장과 교사의 응답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임.
- “보장 안함” 이유로 원장은 “담당 반을 교사 혼자 보육하므로 휴식할 수 없다”를 교사는 “영유아 발달 특성상 휴식할 수 없다”를 더 많이 꼽음.
- 개선방안으로는 원장과 교사 모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1시간 일찍 퇴근”을 가장 희망하였으며 보육교사는 “유치원과 동일하게 운영시간 변경”도 공동 1순위로 꼽음.

4. 정책수요자의 결혼·출산 인식 및 육아실태

가. 저출산에 대한 인식

□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해결 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정책수요자들 간의 차이가 있음.

- 저출산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보다 사회적인 요인들(불안정한 고용,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 젠더 불평등)을, 국민들은 보다 경제적인 요인들(낮은 임금, 높은 물가)을 더 크게 봄.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저출산 요인으로도 국민들은 사회적 요인들보다 비싼 주거비, 높은 양육비를 꼽음.

- 자녀가 없는 경우 주거 문제 해결을 더 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비와 일·육아 병행 문제 해결을, 남성은 양육비 문제를 여성은 일·육아 병행 문제 해결을 더 시급하다고 봄.

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 결혼과 출산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경제적 기반 마련과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며 이는 경제적 여건(소득, 주택소유 여부)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짐.

- 비혼 성인은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기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결혼 계획이 있는 경우도 소득이 300~500만원인 경우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막내 자녀가 초등저학년인 경우는 자녀 수에 따라 출산계획의 차이가 없었으나, 영유아인 경우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음. 즉,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 영유아일 때 이들 가구의 특성에 맞게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이들의 추가 출산은 더 많아질 것임.
-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어머니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이유로 선택하였음.

다. 영유아 가구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실태

□ 기관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 17.3%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놀이학교, 영어학원 등을 다니고 있음.

- 도시지역일수록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에 다니는 아동이 많고, 읍면지역일수록 미이용 아동이(20.2%) 많음.
- 소득이 적을수록 미이용 아동이 많아서 300만원 미만 가구는 27.6%에 달함. 기관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기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
- 기관을 보내지 않는 이유로는 “아직 어려서” 60.6%, “부모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14.4% 이며 “비용이 부담되어서”는 5.8%에 그침.

□ 다니고 있는 기관의 일일 이용 시간은 전체 평균 435.7분(7시간 16분 정도)임. 영아는 평균 7시간 20분 정도이고, 유아는 7시간 13분으로 영아가 조금 더 김. 이용기관 별로는 어린이집 7시간 22분, 유치원이 7시간 6분, 놀이학교/영어학원이 6시간 6분 순임.

□ 다니는 기관에 기본비용(특별활동프로그램·방과후특성화활동 비용 제외)을 내는 경우는 73.6%이고(안 내는 경우 26.4%), 월 평균 56,429원을 냄.

□ 다니는 기관의 특별활동프로그램·방과후특성화활동의 경우, 91.1%가 비용을 내고 소수만 내지 않음.

- 내는 경우 아동 1인당 월평균 65,939원임. 유아 80,091원, 영아 44,994원으로 유아가 내는 비용이 더 많음. 이용기관별로는 놀이학교/영어학원이 150,000원, 유치원 77,475원, 어린이집 58,307원 순임.

□ 다니는 기관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교통편이 5.30점(7점 만점)이 가장 높고, 비용이 4.52점으로 가장 낮음.

- 유치원은 교통, 교육과정, 교사, 환경, 원장 순이며 어린이집은 교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 교육과정, 급간식과 환경 순으로 나와서 이용기관에 따라 만족도 항목의 차이가 있음.

라. 초등학교 저학년 가구 초등학교 이용 실태

□ 등하원 시간으로 일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전체 평균 5시간 17분임. 대도시 5시간 14분, 중소도시 5시간 15분, 읍면지역 5시간 35분으로 읍면지역일수록 길어짐.

- 미취학 아동의 기관 일일 이용시간 7시간 16분에 비해 약 2시간 빠른 하교를 함.

- 하교 후 자녀를 돌보는 주양육자는 전업주부를 제외하고는 조부모가 가장 많았고, 취업모의 자녀의 경우 “없음” 응답이 높게 나옴(사무/관리/전문직 모의 경우 “없음” 18.4%).

□ 초등저학년 자녀의 33.5%가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함. 어머니가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등 육아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 주로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업주부의 경우 15.1%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돌봄교실 이용비용에 대해 “내지 않음”이 20.1%이며 내는 경우는 월 평균 비용은 55,436원임.

□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우선 대상이 아니어서” 42.5%로 가장 많았고, “아이가 원치 않아서” 18.4%,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3.9%,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서” 8.3% 순으로 나옴.

□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참여의 온종일 돌봄정책”의 저해요인으로는 부모의 늦은 퇴근시간이 돌봄기관 운영시간과 맞지 않아서가 32.3%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18.3%, 하교 후 학원 이용 15.8%, 하교 후 지역사회 내 돌봄기관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안전문제 15.0% 순으로 나옴.

□ 초등학교 이른 하교시간을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오후 3시 이후로 늦추려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알아본 결과, “찬성” 51.8%, “반대” 45.6%로 찬성이 다소 우세하게 나옴.

- 찬성하는 이유로는 일·가정 양립 36.5%, 사교육 경감 15.3%이며, 반대하는 경우는 아이가 힘들어서 38.8%를 주로 꼽음.
- 취업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찬성하는 응답이 높은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가 힘들어서 반대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마.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생 가구 사교육 실태

□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사교육을 하는 비율이 커짐. 사교육을 안하는 비율이 영아 60.0%, 유아 27.7%, 초등저학년 9.0%로 초등학생만 되어도 거의 대부분이 사교육을 함.

- 사교육 개수는 평균 1.45개이며 초등저학년생은 2.09개임. 사교육 특성상,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수도 많아짐.
- 월평균 사교육비는 235,487원이며 자녀 연령이나 가구소득, 모 학력에 따라 사교육비가 높아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5.16점(7점 만점)로 “부담된다”는 비율이 73.6%임. 초등저학년 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모학력 고졸이하, 전업주부에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옴.

□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특별활동 프로그램) 금지 관련해서는 찬성(39.1%)보다는 반대(59.7%)가 더 많았음.

- 금지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한글 습득이 더 중요해서”,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해서”를 많이 꼽음.

5. 현 정부 육아정책 추진 방안

가. 추진방향 및 전략

□ 육아정책 목표(기조)의 명료화

- 핀란드 육아정책의 목표인 “비용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통한 보편주의와 소득보전”과 같이 우리의 육아정책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진술함.
  - 지금의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모토는 추상적임.
-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 진술에 따라 육아정책 추진 전략과 방법이 달라짐. 지금과 같이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데 합당한 전략과 방법인지 고민해야 할 것임.

□ 육아정책 다양한 수용자들의 유목화(grouping)

- 육아정책 범위(교육, 노동, 복지 등)를 확대함에 따라 정책수요자들의 범주로 다양해짐.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 본 연구에서 면담한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육아정책을 잘 모르거나 체감하지 못했음.
  - 동일한 기혼 여성 집단에서도 자녀 유무에 따라, 자녀수에 따라, 직업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주거 소유에 따라, 가구소득에 따라 필요로 하는 육아정책이 다름.

□ 유목화에 따라 기존 육아정책 재정비

- 새로운 육아정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육아정책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누릴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내실있게 정비함.

나. 추진방안

□ 복합·혁신과제에서 육아정책 부문 재조직화

□ 선정한 10대 복합·혁신 핵심정책과제 추진방안

요약 표 6 복합·혁신 핵심과제(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개정안

10대 복합·혁신 핵심정책과제	추진방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이 3개 정책은 육아정책의 우선 추진정책으로 선정함.** • 부모(주양육자)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육아시간을 확보토록 함. **•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 정책과 병행해서 추진** ***하교 연장 정책에 대해 찬성(51.6%) 〉 반대(45.6%)** • 관련 법 조항 제정 및 보완 등 •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매년 실시 • 자영업자 부모 육아휴직급여 지원 **• 영아 부모의 추가출산 의지가 높게 나옴. 따라서 영아 육아기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지원을 집중함.**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 한부모 가구 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확대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 • 출산장려 정책으로 추진 제안;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본 조사에서는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의 응답비율이 높지 않았으나, 이는 자녀수가 많지 않기 때문임. •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 저소득 가구 우선으로 지원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비용지원을 강화함.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 월 30만원으로 증액 • 어린이집 지원 재원(財源)을 법적으로 명문화함.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발생으로 조기 추진 필요 • 공영형 보다는 국공립 확대로 추진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옴. • 그러나 운영학급 수를 늘리고, 이용 가구의 조건을 완화함 (*우선대상이 아니어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초등돌봄은 사교육 완화 기제로 추진(학원 대체재 역할 수행)**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 계획대로 추진함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국공립 기관 확대로 추진

□ 선정한 5대 유아교육·보육 정책과제 추진방안

요약 표 7 선정한 유아교육·보육 정책과제 추진방안

5대 유아교육·보육정책과제	추진방안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발생으로 조기 추진 필요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함 • 사인유치원 설립 금지 •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유도

5대 유아교육·보육정책과제	추진방안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요구가 높게 나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정 수준을 마련하되, 전문가에 의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전문가가 직접 공시할 것을 법으로 제정함.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원장, 교사 모두 높게 나옴. 보육 정책 중 우선 정책으로 추진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완화 정책 일환으로 동일 조건의 유치원 교사 평균 급여 수준 보장

□ 중장기 육아연구 기반으로 육아정책 수립

- 육아정책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는 즉흥적이고 포퓰리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정책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음.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육아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 수립될 수 있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범위
5. 연구추진과정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기화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의 대응전략으로서 생애초기 교육·보육을 포함한 육아정책의 기조와 방향, 전략과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 5월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현 정부의 육아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 정부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현 정부의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향후 5년의 육아정책은 인구절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전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해야 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b: 154)고 밝히고 있다.

역대 정부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육아정책을 중요하게 추진해 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총 3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저출산 대책에만 122.4조원[1] (박종서, 2017: 27)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1.2 수준으로(통계청 e-나라지표)[2] 초저출산율 기준인 합계출산율 1.3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육아정책 수립과 더불어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정부의 육아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3] 및 동법 시행령 4조에 의거하여,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익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1) 1, 2차 계획 80.2조원 및 3차 계획 중 2017년까지 42.2조원을 합산한 금액임.
2) 통계청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2018. 3. 5. 인출)
3)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되어 있다(이삼식·정경희·황나미 외, 2011). 이를 위해 1차, 2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성과를 매년 평가하였다(강은나·이소영·오신휘·기재량, 2015; 선우덕·김현식·김대중·오신휘·안세아, 2012; 이삼식·오영희·이윤경·최효진, 2009; 이삼식·이지혜, 2011; 이삼식·이지혜·김세진, 2014; 이삼식·이지혜·이소영·염주희, 2013; 이삼식·이지혜·최효진·박보미, 2010; 이소영·강은나·기재량 외, 2016; 이삼식·정경희·황나미 외, 2011). 이러한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정책 효과는 미비하다.

저출산 정책과 같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성과분석 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정책들도 있다. 유아교육·보육 정책분야에서 선별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 누리과정 정책성과 분석 또는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들은 주로 정부출연연구원(이하, 정출연)의 정책과제 또는 담당 부처의 수탁과제로 진행되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 정책의 성과분석 또는 성과평가는 2016년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연구(이윤진·김지현·이민경, 2016)에서 비로소 실시되었으나, 일회성 평가로 그쳤다. 다만, 육아정책연구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과제로 「누리과정 정책의 이용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이변화를 매년 분석하였다(권미경·김정숙·이경진·장현실, 2013; 김은설·유해미·엄지원, 2012; 이윤진 외, 2016; 이윤진·이규림·조아라, 2014; 이윤진·이정원·김문정, 2012; 이진화·박창현·윤지연, 2015). 그러나 매년 표집방법과 표집규모가 달랐기에 추이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누리과정 정책 평가를 매년 체계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마다 약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누리과정 정책은 본래 목표인 무상교육·보육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금(유아학비, 보육료)을 매월 지원하고 있지만,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는 추가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이윤진 외, 2016: 184-185). 국공립, 사립, 민간 등 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추가비용의 격차도 큰 것(이윤진 외, 2016: 87)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 일반과제로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권미경·김문정, 2012; 김은설·유해미·김선화, 2010; 김은영·최은영·조혜주, 2011; 최은영·김정숙·송신영, 2013; 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 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와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서문희·김혜진, 2012; 서문희·이혜민, 2013; 서문희·최윤경·김문정, 2011; 서문희·최혜선, 2010; 유해미·강은진·조아라, 2015; 이정원·이혜민, 2014)를 매년 수행하였다.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정책을 분리해서 각각의 정책 현황을 매년 분석하면서 당해 연도의 추가 분석이 필요한 유아교육 정책 및 보육 정책을 별도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을 총망라해서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그동안 육아정책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였고,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왔으나 정책효과는 미흡했다는 것이 오늘날 초저출산인 우리 사회가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육아정책과 정책수요자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왜 이러한 간극이 발생할까? 간극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가? 등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정출연이나 부처에서 실시한 정부 정책성과의 평가 방식은 주로 정량평가이다.[4] 산식을 통해 나온 수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본고의 〈표 Ⅱ-2-6〉을 보면, 저출산 정책의 목표 달성률은 100% 이상을 상회하는 정책과제가 대부분이다. 정책의 목표치는 달성했으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깊어지고 있다(연합뉴스, 2017. 7. 30). 육아정책의 목표치는 달성했지만, 정책효과는 거의 없다 또는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분석의 핵심은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 그 이상의 해석을 요구한다. 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양적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정책평가의 한계를 직시해야 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측정해야 할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지도 반성적으로 고찰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목표치, 수치 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시도는 새 정부의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서” ‘사람중심 정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5]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그동안 수립, 추진해 온 많은 육아정책들에 대해 정출연별로, 부처별로

4) 본고의 〈표 Ⅱ-2-1〉~〈표 Ⅱ-2-6〉 참조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2018. 3. 5. 인출)

쪼개져서 정책성과를 관리하면서 정부의 육아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했다.

셋째,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이행성과 중심으로 부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처별 정책추진 노력,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국민만족도, 기관 간 협업 정도 등을 평가하겠다(국정자문기획위원회, 2017b: 187)는 계획이다. 평가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처 자체 평가 또는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 정도를 자체적으로 관리, 평가할 계획이므로 본 연구는 이와 차별화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5년 연속과제의 1년차 연구로서,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아정책들 중에서 향후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할 육아정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및 정책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실시하는 연속과제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에 수행할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정책의 범위를 조작적으로 정하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본 연구에서 연구범위로 정한 육아정책을 정리, 분석한다.

둘째, 국내외 육아정책을 분석 또는 평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다.

셋째, 육아정책을 비롯한 복지정책이 발달되어 있는 국외(핀란드)의 정책관리 사례를 고찰한다.

넷째, 현 정부의 다양한 육아정책들 중에서 앞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육아정책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룰 육아정책을 선정한다.

다섯째,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해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파악한다.

여섯째, 정책수요자들의 실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과 육아 실태를 조사한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의 육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첫째,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자료들을 분석, 정리한다. 현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간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보완해서 재발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백서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로 분석한다. 아울러, 육아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발간한 통계, 업무보고, 보도자료 및 법령 등을 분석한다. 둘째, 유관 선행연구를 수집, 분석한다.

셋째, 육아정책 관련한 정부 유관 부처 및 조직, 위원회, 해외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

육아정책 분석 및 평가를 했거나 타 분야의 정책 평가와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한다. 지금까지 육아정책, 보육, 교육, 경영 분야의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다. 면담조사

현 정부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은 설문문항 개발에 참조한다. 즉, 면담조사의 주된 목적은 설문지 문항 구성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육아정책 내용별로 해당하는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정책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온종일 초등돌봄 정책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정책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주거지 안정화 정책을 포함한 저출산 정책은 자녀가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공통 질문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정책의 체감도 및 만족도, 직접 수혜 정도 등이다.[6]

6) 부록 1~5 면담설문지 참조

1)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5사례를 면담하였다. 30대 중후반으로 최종학력은 전문대 2명, 4년제 대학교 졸업 3명이었다. 자녀수는 1~2명이며 외벌이 가정 3사례, 맞벌이 가정 2사례이다. 월 가구소득도 세전기준으로 170만원부터 650만원까지 편차가 있었다.

표 Ⅰ-3-1 영유아 부모 면담 대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학력	본인직업	남편직업	자녀수	가구소득(세전)
1	여	만33세	4년제대졸	전업주부	회사원	2 (만3세, 9개월)	250만원
2	여	만37세	전문대졸	전업주부	자영업	2 (만5세, 만3세)	650만원
3	여	만39세	전문대졸	프리랜서 강사	회사원	1 (만5세)	500만원
4	여	만34세	4년제대졸	회사원	목회자	2 (초2, 만3세)	300만원
5	여	만32세	4년제대졸	전업주부	요리사	1 (26개월)	170만원

2)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 1의 경우, 둘째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였다. 이 학교는 2학년 대상으로는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서 현재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자녀는 방과 후 어머니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혼자 학원을 다니거나 형이랑 지낸다고 한다. 사례 2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하교 후 돌봄을 담당하고 있었다.

표 Ⅰ-3-2 초등학생 부모 면담 대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학력	본인직업	남편직업	자녀수	가구소득(세전)
1	여	만39세	4년제대졸	회사원 (일일 6시간근무)	회사원	2 (초5, 초2)	750만원
2	여	만34세	4년제대졸	회사원	목회자	2 (초2, 만3세)	300만원

3) 무자녀 성인(기혼 및 비혼)

무자녀 성인은 크게 기혼과 비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 Ⅰ-3-3〉은 지금까지 면담한 기혼성인(예비부모)이며 〈표 Ⅰ-3-4〉는 비혼성인 현황이다. 기혼성인 모두 올해 결혼한 신혼 가구로서, 피면담자(여자)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가구소득은 배우자 소득과 합산이다. 두 사례 모두 임신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이상 자녀수"는 2명이라고 응답했다.

표 Ⅰ-3-3 예비부모 면담 대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학력	본인직업	남편직업	결혼시가	가구소득(세전)
1	여	만29세	대학원졸	회사원	군인	2018년 8월	500만원
2	여	만30세	4년제대졸	회사원	회사원	2018년 4월	600만원

비혼성인은 여성 3명, 남성 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비혼성인의 저출산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설문문항 구성에 참조하였다.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는 1사례뿐이고, 나머지는 같이 살고 있었다. 여성들은 모두 결혼을 희망하나, 결혼상대자는 현재 없었다. 남성은 독신은 아니지만, 결혼할 계획은 아직 없었다.

표 Ⅰ-3-4 비혼성인 면담 대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세전)	부모님과 동거여부	형제자매수
1	여	만31세	전문대졸	기간제 유치원교사	60~120만원	독립	4
2	여	만32세	대학원 이상	기간제 유치원교사	-	동거	2
3	여	만33세	전문대졸	유치원교사	300만원	동거	2
4	남	만31세	4년제대졸	유학준비	-	동거	2
5	남	만32세	4년제대졸	영화제작사 근무	200만원	동거	2

4) 어린이집 원장·교사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정책이 7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를 면담하였다. 일일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 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정책 등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면담내용은 설문 문항 구성에 활용하였다.

표 Ⅰ-3-5 어린이집 교직원 면담 대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근무기관 유형	직위	학력	전공	담당 학급	총 경력	근무시간
1	여	만48세	국공립	원장	대학원 이상	아동학	-	13년8개월	9:00-18:00
2	여	만54세	민간	원장	대학원 이상	유아교육	-	30년	8:30-18:00
3	여	만55세	국공립	교사	4년제 대졸	아동학	만1세반	5년	9:00-18:00
4	여	만30세	국공립	교사	4년제 대졸	유아교육	시간제반	8개월	9:00-18:00

라. 전문가 의견조사

현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된 목적은 본 연구에서 다룰 육아정책을 선정하는 것이다. 육아정책과 관련된 분야(유아교육·보육, 복지, 노동, 가족 등)별로 균형있게 선정하여 최종 3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에게는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 다룰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추가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현 정부 육아정책에 대한 쌍대비교이며(AHP 기법), 이외에도 가구 및 기관조사와 동일하게 저출산의 심각성 정도, 원인, 대응책 등을 질문하였다.

전공별로는 유아교육·보육 12명, 사회복지 10명, 노동·경제 11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학교수가 26명으로 주를 차지하였다. 조사 진행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하되, 웹 설문 응답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다.

표 Ⅰ-3-6 전문가조사 대상 특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비율)	구분	사례수(비율)
전공		근무기관유형	
유아교육·보육	12(36.4)	대학	26(78.8)
사회복지	10(30.3)	공공기관	1(3.0)
노동·경제 등	11(33.3)	연구소	6(18.2)
계		33(100.0)	

마. 설문조사

1) 가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선정한 현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및 결혼, 출산, 육아 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영유아 자녀 및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00명, 무자녀 기혼 성인(예비 부모 포함) 및 비혼 성인 500명 총 1,500명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Ⅰ-3-7 설문조사 내용(가구)

조사대상(표집수)	공통질문	대상별 조사내용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영아 300, 유아 300)	• 저출산의 심각성, 원인, 대응책 •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한 중요도	• 일반적 특성(지역, 학력, 소득, 직업 등)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 사교육 이용 현황 • 현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영유아 가구 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예: 아동수당,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등)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400)		• 사회경제적 특성(지역, 학력, 소득, 직업 등) •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하교 후 주양육자 • 방과후 돌봄 이용 현황 • 사교육 현황 • 현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초등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예: 온종일동봄정책, 하교시간 늦추는 정책,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등)
자녀가 없는 성인 (500)		• 사회경제적 특성(지역, 학력, 소득, 직업 등)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계획 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국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남성이 51.1%, 여성이 48.9%로 유사하고, 주택 소유 형태도 자기소유가 50.3%, 전세, 월세 등은 49.7%로 유사하다. 월평균 가구 또는 개인 소득은 20대 비혼 성인 포함으로 300만원 미만이 32.5%로 가장 많고, 3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소득 구간에서는 구간별로 19~20% 정도로 유사하게 분포하고, 700만원 이상은 10.2% 이다.

표 Ⅰ-3-8 조사 참여자 특성(일반국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응답자 구분			응답자 성별		
영아 부모	300	20.0	남성	767	51.1
유아 부모	300	20.0	여성	733	48.9
초등 저학년 부모	400	26.7	주택 소유형태		
무자녀 성인	500	33.3	자가	755	50.3
자녀 유무			비자가	745	49.7
유자녀 성인	1,000	66.7	월평균 (가구)소득		
무자녀 성인	500	33.3	300만원 미만	488	32.5
지역규모			300-400만원 미만	279	18.6
대도시	644	42.9	400-500만원 미만	277	18.5
중소도시	651	43.4	500-700만원 미만	303	20.2
읍면	205	13.7	700만원 이상	153	10.2
			계	1,500	100.0

2) 원장·교사조사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유치원 현황자료와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표준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직접 기관 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 기관에서 원장과 교사를 1명씩 선정하는 쌍표집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Ⅰ-3-9 설문조사 내용(원장·교사)

조사대상	조사내용
원장·교사	• 사회경제적 특성(지역, 학력, 직위 등) • 저출산의 심각성, 원인, 대응책 •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한 중요도 •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선정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중요도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 운영시간 등 • 현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보장에 대한 의견조사(어린이집에 한정)

본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총 309개원이다. 이 중 어린이집 159개원, 유치원 150개원이 참여하였다.[7]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 가장

7) 조사 실시 중에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치원 참여가 저조함.

많고,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직장어린이집 순으로 표집되었다. 대도시가 가장 많고, 중소도시, 읍면 순이다. 이는 유형별 비교를 위하여 유형별 균등할당 후 유형 내에서 지역별로 비례배분한 결과이다. 기관당 원장 1명, 교사 1명이 응답했기 때문에 원장과 교사의 사례수는 동일하다. 관련 교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취득한 기관을 질문한 결과, 원장은 4년제 대학교가 가장 많고, 교사는 전문대가 가장 많았다. 총 경력은 해당 직책의 경력에 한해서 질문한 결과이다. 원장은 10~15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교사는 이보다 적은 5~10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표 Ⅰ-3-10 조사 참여자 특성(원장·교사)

단위: %(명)

구분	기관	구분	원장	교사
계	100.0(309)		100.0(309)	100.0(309)
기관 구분		교사자격증 최초취득기관		
어린이집	51.5(159)	보육교사교육원	14.2(44)	17.2(53)
유치원	48.5(150)	2-3년제전문대	32.7(101)	41.4(128)
기관 유형		4년제대학교	43.0(133)	35.9(111)
국공립어린이집	13.9(43)	대학원	10.0(31)	5.5(17)
법인/직장어린이집	12.6(39)	총 경력		
민간/가정어린이집	24.9(77)	5년 미만	22.3(69)	22.7(70)
국공립유치원	24.3(75)	5-10년 미만	19.7(61)	30.7(95)
사립유치원	24.3(75)	10-15년 미만	20.7(64)	23.9(74)
지역 규모		15-20년 미만	12.6(39)	11.7(36)
대도시	43.7(135)	20년 이상	24.6(76)	11.0(34)
중소도시	35.3(109)			
읍면	21.0(65)			

이상으로 본 설문조사의 표집수, 설문방법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Ⅰ-3-11 설문조사 개요(전문가, 가구, 원장·교사)

구분	조사대상별		
	전문가 조사	기관 조사	일반국민 조사
표본규모	33표본	241표본	1,000표본
조사방법	웹 설문조사 (오프라인 조사 병행)	면접원 방문에 의한 1:1타계식 면접조사 (조사대상 여건에 따라 유치 방식의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기 구축된 웹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지역	전국(16개 시도)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바. 국외출장

육아정책 선진국의 육아정책 현황 및 정책의 형성·수립, 이행, 성과 및 평가, 피드백 등 일련의 정책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자 육아정책의 대표적인 선진국가인 핀란드 수도 헬싱키를 방문하였다. 양육수당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켈라(Kela),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보건복지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THL)[8]을 방문하여 육아정책을 비롯한 핀란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공사립 유치원 및 데이케어 센터, 최근에 설립한 가족지원센터(Family Center)를 방문해서 육아정책의 운영 현황을 알아보았다. 출장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4박 6일이었다.

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육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공무원 대상으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4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다룰 육아정책은 현 정부가 5년(2018~2022) 동안 추진하려는 육아정책이다. 그리고 현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보다는 4대 복합·혁신과제에서 육아정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Ⅱ장에서 상술하겠지만, 4대 복합·혁신과제 중의 하나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이다. “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b: 143) 중에서 “정책 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추진할 과제”(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b: 143)로 4대연구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한 만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육아정책

8) 핀란드의 공공기관에서는 해외 방문자들이 급증하면서 기관 방문비(기관 소개 및 질의응답 포함)를 받기 시작함. 방문비가 약 150EUR(한화 200만원)에 달해서 공식적인 방문 요청을 하지 못하고 간단한 기관 방문과 자료 수집 정도로 그침.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육아정책의 핵심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부처 저출산 정책인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복합·혁신과제들 중에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선정한 주요 육아정책들을 매년 면밀히 분석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5일자로 발표한 첫 저출산 정책의 모토(moto)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이다. 저출산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일’(노동)과 ‘아이키우기(육아)’를 설정한 것이다. 초저출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아이키우기(육아)는 ‘일’(노동)과 결부된 넓은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육아정책은 유아교육, 보육, 가정 내 양육 등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7: 3)으로 확장하되, 출산 이후 지원정책에 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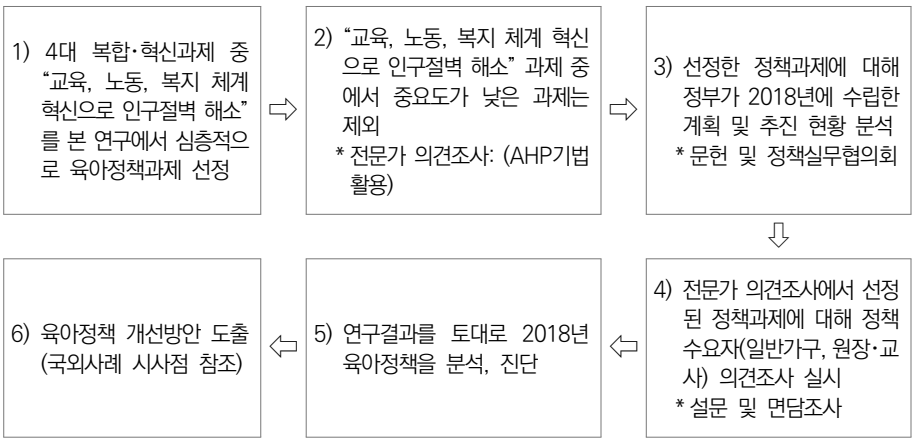
표 Ⅰ-4-1 기존연구와 차별화한 본 연구의 육아정책

기존 연구	본 연구
국정과제들 중에서 부처별로 수행하는 육아정책을 선정해서 분석함. 특히, 유아교육(교육부), 보육(복지부) 정책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처가 계획한 목표 달성 여부 중심으로 분석함.	육아정책을 포괄적, 총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부처별 국정과제보다는 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복합과제에서 육아정책을 선정 ※ 4대 복합·혁신과제 중에서 “교육, 노동, 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현 정부 첫 저출산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와 동일)

5 연구추진과정

본 연구의 추진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5-1 본 연구 추진과정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II

연구배경

1. 현 정부 국정과제와 육아정책
2. 국내외 육아정책 선행연구
3. 국외 육아정책 관리 우수사례: 핀란드

Ⅱ. 연구배경

1 현 정부 국정과제와 육아정책[9)]

가. 현 정부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5대 국정목표를 수립하였다. 5대 국정목표는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다. 국정비전 및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20개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다시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화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b: 14).

1)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b: 10-11).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며,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변화시키고,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며,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하고자 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을 의미한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가장 우선하는 원칙이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이다.

9) 본절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무조정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pmo/inform/inform01_02a.jsp에서 2018. 6. 11. 인출)을 기초로 작성함.

2) 5대 국정목표

현 정부의 국가비전에 따른 5대 국정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국정전략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4대 국정전략을 설정하였다: ①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②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③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④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나) 더불어 잘사는 경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5대 국정전략을 설정하였다: ①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②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③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④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⑤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5대 국정전략을 설정하였다: ①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②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③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④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⑤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3대 국정전략을 설정하였다: ①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②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③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사회가 놓인 대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3대 국정전략을 설정하였다: ①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②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③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그림 Ⅱ-1-1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b).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 15.(국무조정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pmo/inform/inform01_02a.jsp에서 2018. 6. 11. 인출)

한편, 국정목표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하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볼 수 있다. 육아정책을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시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상세 내용을 보면, 기초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23.1조원), 0~5세 아동수당 지급(10.3조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5조원),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주거급여 확대(5.4조원) 등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a: 213).

표 Ⅱ-1-1 100대 국정과제 투자계획

단위: 조원

구분	2017년	2017년 대비 추가 소요	
		2018~2022 합계	연평균 소요
[합계]	81.2	178.0	35.6
①더불어 잘사는 경제	17.4	42.3	8.5
②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3.4	77.4	15.5
③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8	7.0	1.4
④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의 한반도	2.7	8.4	1.7
※지방이전재원 및 제도 설계 후 추진	5.8	42.9	8.5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a).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p. 213.

나. 현 정부의 육아정책 목표·전략·과제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육아정책과 가장 관련된 국정전략은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해당되는 국정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과 전략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이다.

국정전략②에 속하는 7대 국정과제 중 육아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①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48번), ②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49번), ③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50번), ④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54번) 4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국정전략②에 속한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부처는 복지부와 교육부이다.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은 국정전략②에서 추진된다고 하겠다.

국정전략④에 속하는 4대 국정과제 중에서는 ①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65번)와 ②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66번) 2개 과제가 해당될 수 있다. 국정전략④에 속한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부처는 여가부로서, 가족정책이 여기에서 추진된다.

표 Ⅱ-1-2 현 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목표-전략-과제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담당부처)	주요내용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보육·양육 지원 강화) •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저출산 대책) •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 25%→'22년 40%)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개편 추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 부처 간,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17년~)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 '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18년) •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초등 생존수영 교육 연차적 확대 운영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담당부처)	주요내용
	전략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한부모가족 자립)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 확대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자립 도모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 성평등 교육 강화, 언론 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b).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p. 80-83, 87, 100-101.(국무조정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pmo/inform/inform01_02a.jsp에서 2018. 6. 11. 인출)

다. 현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4대 복합·혁신과제를 제시하였다. 선정 기준은 ①핵심공약과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 ②예산·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③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복합과제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b: 143).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4대 복합·혁신과제는 ①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②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③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④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또한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관리하고 있다. 4대 과제별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이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복합·혁신과제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이다.

현 정부는 육아정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육아정책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복합·혁신과제는 육아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표 Ⅱ-1-3 현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별 추진체계

복합·혁신과제	추진체계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민간, 간사-일자리수석)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민간, 부위원장-미래부장관·정책실장, 간사-과학기술보좌관)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복지부장관)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 (위원장-국무총리)

주: 굵은 선 부분은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임.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b).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 186.(국무조정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pmo/inform/inform01_02a.jsp에서 2018. 6. 11. 인출)

라. 4대 복합·혁신과제 중 육아정책 과제

1) 선정이유

정부는 앞으로 5년은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 하에, 합계출산율을 1.4로 회복하기 위하여[10] 해당 과제를 복합·혁신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추진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첫 저출산 정책이 지난 7월 5일 발표되었다. 이 날 발표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특정 분야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추세 완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생애 주기 전반에 종합적 정책 마련 필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7: 3)성을 밝혔다. 이는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복합·혁신 과제의 목표와 일치한다.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육아정책은 이에 맞춰 선정하였다.

10) 지난 7월 2일에 발표한 문재인정부 첫 저출산 정책계획에서는 출산율·출생아 수의 양적 목표 달성은 지양하고 2040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7: 4-5).

2) 과제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현 정부의 육아정책 대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는 크게 ①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②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③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등 3개로 구분된다.

각 세부목표와 그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Ⅱ-1-4 현 정부 육아정책 대목표, 세부목표,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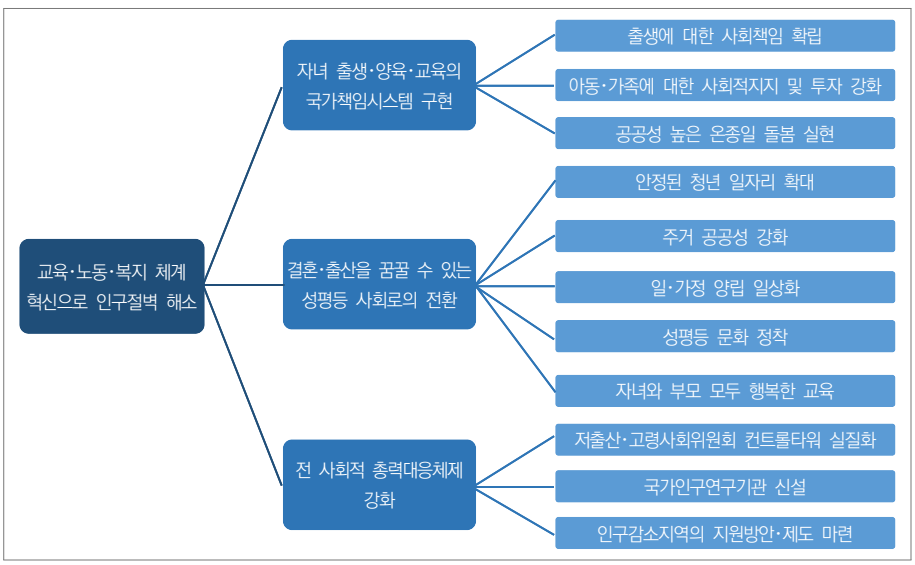
구분	내용		
대목표	중목표	세부목표	정책과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 **배우자 출산휴가 단계적 확대(유급 3일→10일, ’21년)** •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17년) • 산모·신생아 (방문형)건강관리서비스 확대(’19년)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17년) • 공공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18년)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 아동재활병원 확충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운영**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 미혼모 ‘출산-양육-자립’패키지 지원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22년)** • 초등돌봄 전 학년 확대 •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18년)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구직 촉진 수당 신설(’17년) • 공공기간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민간 확산(’18년) •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차별 해소 포함 등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로드맵(’17년)
		주거 공공성 강화	•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18년) •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신설(’18년) •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대 등 지원 강화(’17년)

구분	내용		
대목표	중목표	세부목표	정책과제
		일·가정 양립 일상화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17년)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17년) •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확대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성평등 문화 정착	• 학교 내 성평등·인권교육 강화 • 성평등 임금공시제('18년)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누리과정 국가책임 확대('18년) •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22년) •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17년)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실질화 • 국가인구연구기관 신설 • 인구감소지역의 지원방안·제도 마련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b).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p. 154~156. 중에서 중·고등교육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이상의 내용을 조직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Ⅱ-1-2 육아정책 관련 복합·혁신과제 주요 내용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b).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p. 154-156.(국무조정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pmo/inform/inform01_02a.jsp에서 2018.6.11. 인출)

마. 현 정부 국정과제 및 육아정책 추진 체계

1) 정책기획위원회

100대 국정과제를 점검·보완·평가(국정기획위원회, 2017a: 225)를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정책기획위원회'를 2017년 12월에 신설하였다.[11] '정책기획위원회'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또한,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대통령령)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법적 기구이다. 본령에 따르면,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제2조 설치)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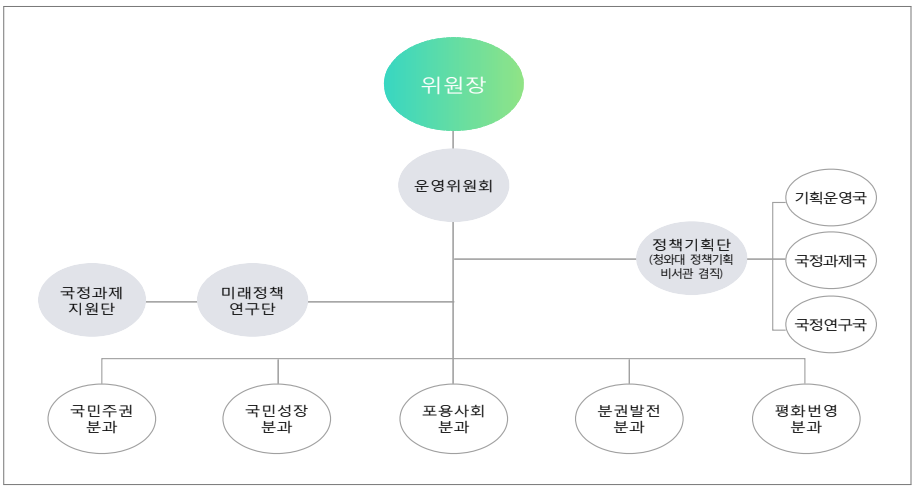
정책기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국정과제의 조정 등 국정과제 추진 및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 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④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가 주요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⑤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정책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화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12]

정책기획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국정과제지원단, 미래정책연구단, 정책기획단 등 3개의 단과 운영위원회 산하의 국민주권 분과, 국민성장 분과, 포용사회 분과, 분권발전 분과, 평화번영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산하에 정책기획단을 두고 청와대 정책실(정책기획비서관)이 총괄·운영하며,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국정기획위원회, 2017a: 225).

---

11)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http://pcpp.go.kr/post/seminar/seminarView.do?post_id=67&board_id=6& (2018. 6. 18. 인출)
12)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http://pcpp.go.kr/planning/coFunctionPage.do (2018. 6. 1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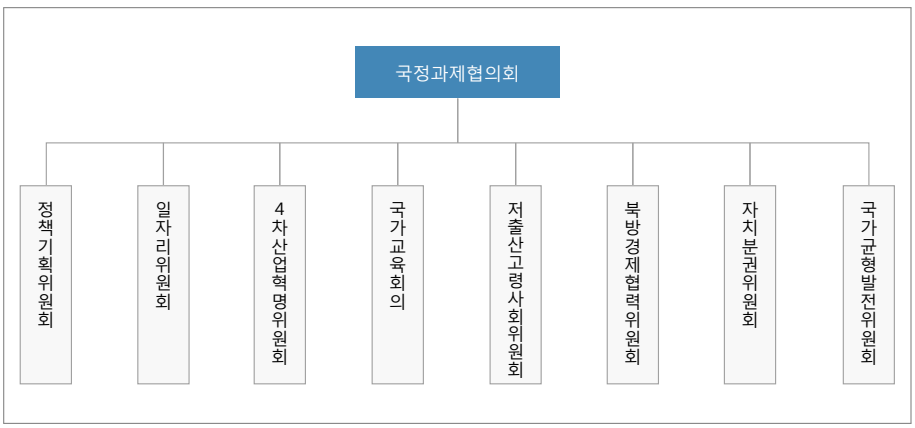
그림 Ⅱ-1-3 정책기획위원회 구성도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http://pcpp.go.kr/planning/coIntroductionPage.do, 2018. 6. 11. 인출)

한편,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는 **국정과제 위원회 간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의회의 의장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위원은 각 국정과제위원회[13]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림 Ⅱ-1-4 국정과제협의회 조직도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http://pcpp.go.kr/nationaltask/nationaltask_01Page.do, 2018. 6. 1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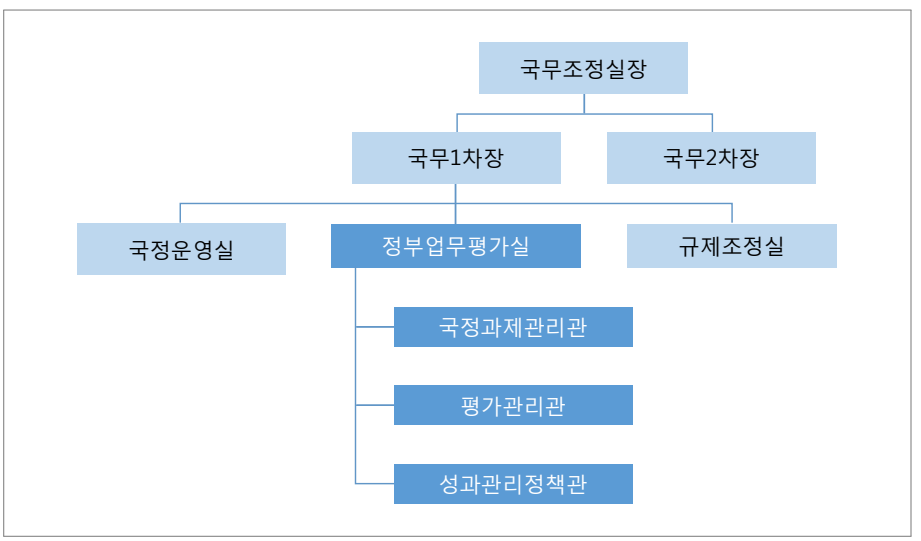
13) 국정과제위원회란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임(동령 제4조 구성)

2)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해당 위원회에서 담당하지만(표 Ⅱ-1-2 참조), 현장점검 및 쟁점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한다(국정기획위원자문회, 2017a: 226). 따라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과제의 현장점검 및 쟁점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 한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은 국정과제관리관, 평가관리관, 성과관리정책관 등 3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과제관리관에서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 등을 총괄한다. 평가관리단은 집중관리과제 관리 및 국민만족도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성과관리정책관은 성과관리 제도 및 운영, 자체평가 제도 및 운영, 국정과제 평가제도·지원평가제도 등을 총괄한다.[14]

정리하면, 국정과제를 전체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는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한다. 한편, 부처별 국정과제는 해당부처가 평가를 실시한다(국정기획위원자문회, 2017a: 226).

그림 Ⅱ-1-5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조직도



자료: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pmo/office/office02_03.jsp 재구성, 2018. 6. 11. 인출)

14)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http://opm.go.kr/pmo/office/office02_03.jsp (2018. 6. 2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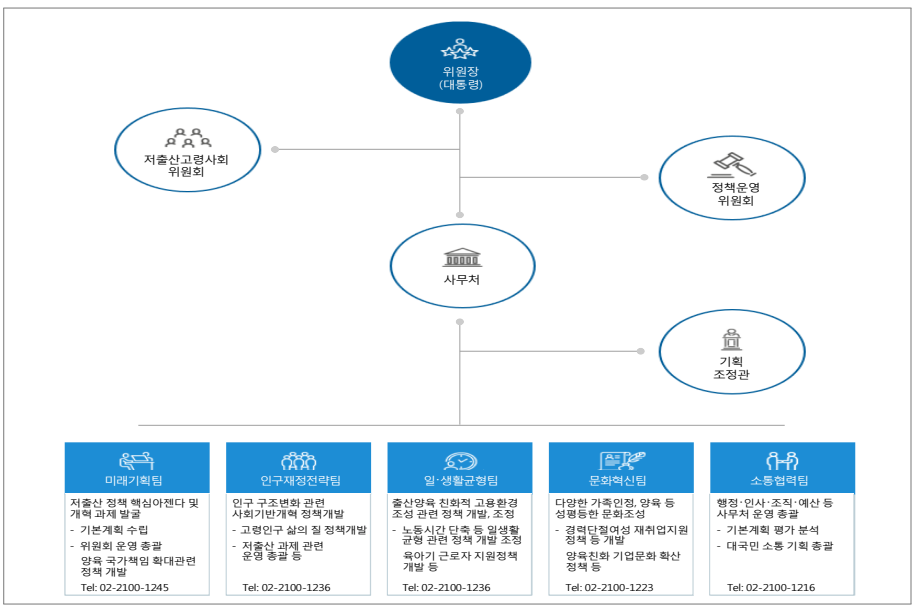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15)]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복합·혁신과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담당한다(국정기획위원자문회, 2017a: 225).

본 위원회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을 책임지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이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수많은 과제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본 위원회의 역할을 1)민간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민간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혁신적이고, 2)다부처 협업과제와 지역 협력과제, 개혁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조율해 저출산 문제를 관성적인 접근에서 탈피하고, 3)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는 현장과 소통 중심으로 강화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위원은 7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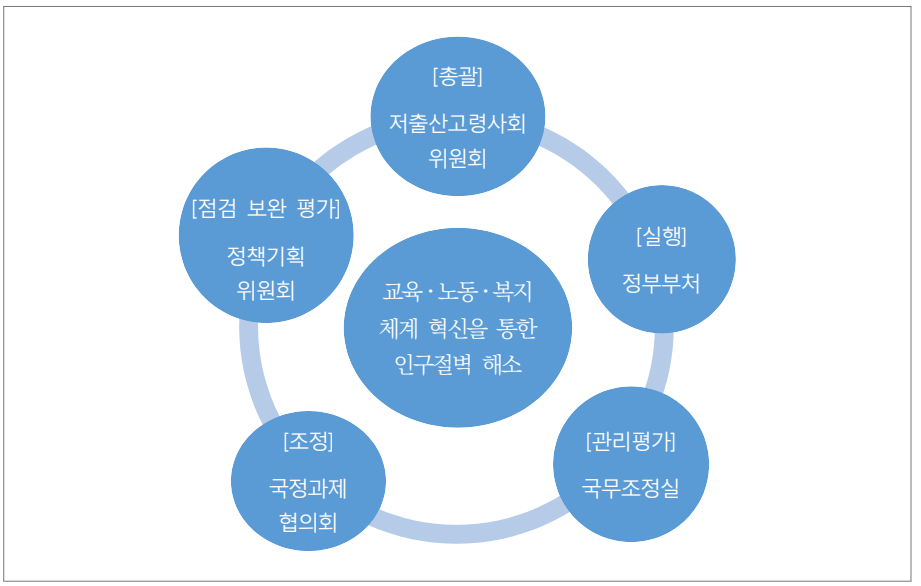
그림 Ⅱ-1-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도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betterfuture.go.kr/pc/org/org3.php, 2018. 6. 11. 인출)

15) 해당 본문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발췌, 정리함 (http://www.betterfuture.go.kr/pc/org/org2.php, 2018. 6. 20. 인출)

그림 Ⅱ-1-7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복합·핵심과제 추진전달체계(잠정)



바. 육아정책 연도별 이행 계획[16)]

1) 1단계(2017~2018)

주요 대책을 시행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사무국을 설치한다.

1단계의 주요 대책은 청년구직수당,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아동수당 도입, 초등완전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이다.

2) 2단계(2019~2020)

주요 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단계의 주요 대책은 민간협력이 필요한 청년고용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늘려나가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현장에서 일상적인 형태로 정착시켜 나간다.

16)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a).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p. 194.

3) 3단계(2021~2022)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바탕으로 초저출산에서 탈피하는 것이 목표다. 이 단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등 청년고용대책 보완,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확충, 공교육·유아교육 40% 달성,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 개편을 완료한다.

사. 육아정책 이행을 위한 입법 계획

정부정책이 동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법적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이행이 가능한 국정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며 저출산 등 복합·혁신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의 경우 2018년까지 국회제출 및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a: 220-221)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복합·혁신과제 추진, 달성을 위해 입법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이 중에서 근로기준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계획대로 2018년에 개정되었다.

표 Ⅱ-1-5 육아정책 관련 입법계획

내용	비고	참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계류 중	개정됨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 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부령)** 개정	2017년 하반기 개정	개정됨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2019년 국회 제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2017년 하반기 국회 제출	개정됨

주: 참조는 2018년 해당 법 개정 결과임.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a).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p. 194.

한편, 정부는 과제 이행 법률안을 점검, 관리하기 위하여 "입법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요 국정과제의 단계별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연 사유에 따라 적절한 입법 지원을 제공하며, 국회제출 일정, 제·개정 성과 등을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a: 223).

아. 교육부·보건복지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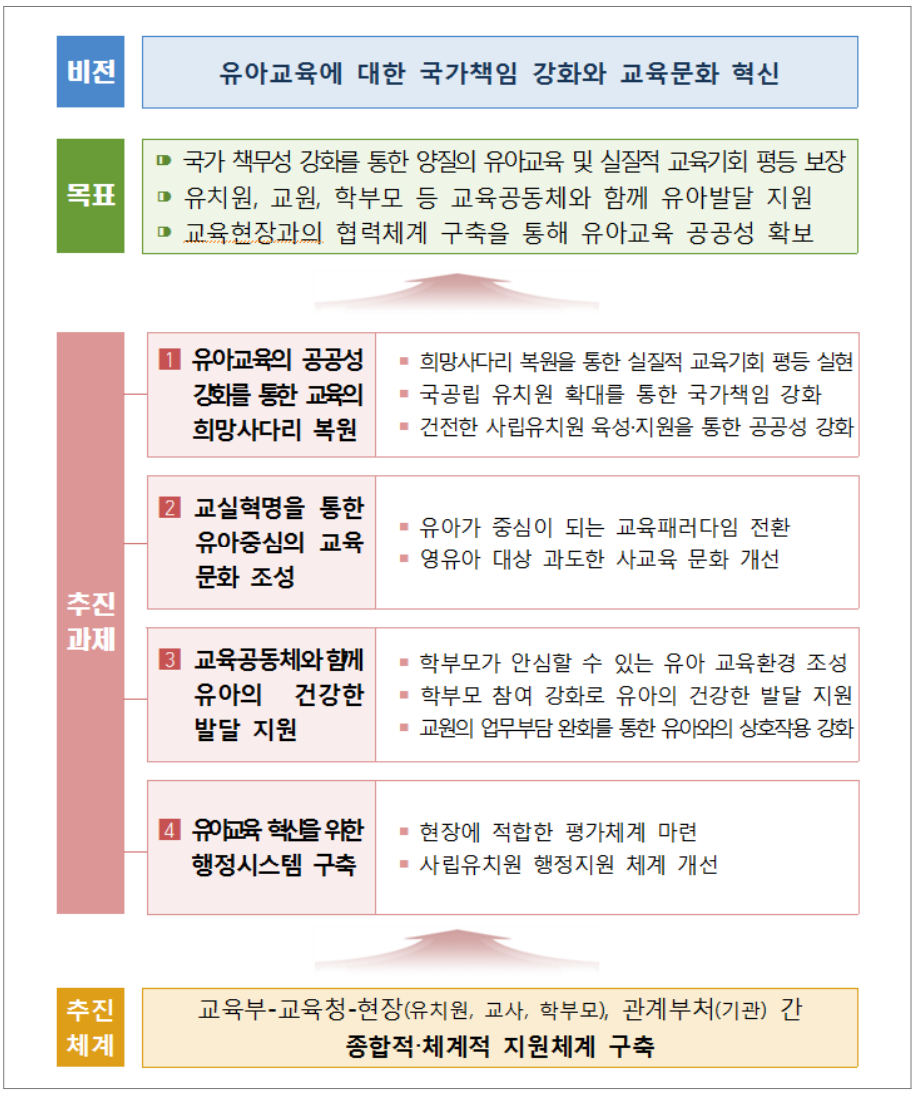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관련법(「유아교육법」 제3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5년마다 각각 유아교육·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아교육·보육 기본계획은 유아교육·보육분야와 관련하여 더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17)]

교육부는 2017년 12월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유아교육 혁신방안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비전으로 3대 목표(①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보장, ②유치원,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발달 지원, ③교육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수립하였다. 목표에 따른 4대 추진과제는 1)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2)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 문화 조성, 3)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4)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이다. 각 추진과제 하위에는 2~3개의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총 10개의 세부과제가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7) 교육부의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발표」 보도자료(2017.12.27.)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2017)에 기초하여 작성함.

그림 Ⅱ-1-8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비전 및 추진과제 체계도



자료: 교육부(2017).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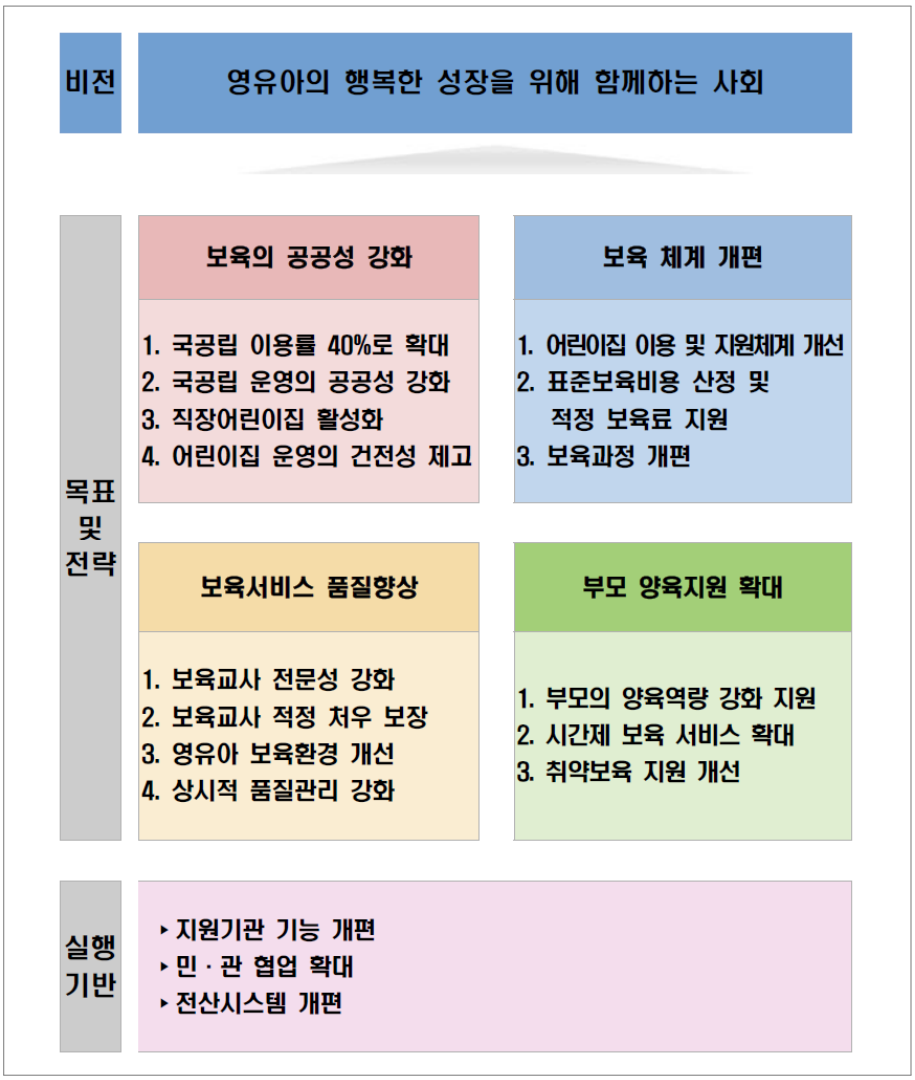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8)]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18) 보건복지부(2017)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 기초하여 작성함.

4대 목표(①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보육 체계 개편, ③보육서비스 품질향상, ④부모 양육지원 확대)를 수립하였다. 4대 목표 하위에는 각각 3~4개의 추진전략이 포함되어 있어 총 14개의 추진전략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1-9 보건복지부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체계도



자료: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p. 14.

2 국내외 육아정책 선행연구

가. 국내

1) 육아지원 정책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

육아정책 성과 분석은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및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을 수행해 왔으며, 저출산 정책 성과 분석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2007년 장명림·이재연·김영옥 등(2007)은 우리나라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 정립, 추진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육아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중심의 유아교육·보육 발전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 양육과 영유아의 복지 측면을 포괄하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장명림 외, 2007: 124) 전체 지표는 기초지표 6개,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58개, 자녀양육 및 영유아복지 분야 지표 46개로 총 1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다(장명림 외, 2007: 81). 110개 지표 중 기초지표와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2-1 한국의 육아지표 - 기초, 유아교육·보육 분야

영역	항목	지표
기초 지표	영유아 인구 및 양육현황	합계출산율, 0-5세 영유아 인구 비율, 장애영유아 인구 비율,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의 형태별 비율, 영유아의 양육형태, 0-5세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유아교육·보육 분야 지표	기관 현황	유치원·보육시설 취원율, 설립유형별 기관 비율, 국가수준의 기관평가(인증) 수임 기관 비율, 종일반 운영 기관 비율, 종일반 참여 유아 비율
	교직원 및 종사자	교원(종사자)의 연령·성별·학력·자격·경력별 구성 비율, 교사 1인당 영유아수, 연간 근무일수, 1일 근무시간, 연간 연수시간, 최저 임금 대비 교사의 급여 수준,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관 비율, 교직원 보험(연금) 가입 기관 비율, 퇴직금 지급 기관 비율
	물리적 환경	영유아 1인당 교사 면적,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 실외 놀이터 보유 기관 비율
	교육·보육 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보육과정 활용 기관 비율, 교육·보육 계획안 작성 비율, 교육·보육과정 운영 자체평가 실시 기관 비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관 비율, 장애영유아 통합 교육·보육 실시 기관 비율

영역	항목		지표
	건강·안전		연간 시설·설비 안전점검 횟수, 연간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 연간 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 연간 안전사고 발생 건수,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기관 비율,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기관 비율, 질 높은 급·간식을 제공하는 기관 비율
	부모교육		부모교육·참여 실시 기관 비율, 운영위원회 구성 기관 비율
	교육·보육의 효과	영유아	신체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효과 인식 부모 비율, 언어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효과 인식 부모 비율, 인지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효과 인식 부모 비율, 정서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효과 인식 부모 비율, 사회성발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효과 인식 부모 비율, 유치원·보육시설 경험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도
	교육·보육의 효과	교직원	근무에 만족하는 교사 비율,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교사 비율
		가정	유아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교사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기관장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육아비용 지원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 비율
	국가재정 투자 및 유아교육·보육 비용		중앙정부 교육·여성가족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교육·보육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유아교육·보육 관련 연구·개발비, 영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 예산, 무상교육·보육비 수혜 영유아 비율, 차등교육·보육비 수혜 영유아 비율, 가정의 연간 영유아 1인당 유아교육·보육료 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연간 유아교육·보육료 지출 비율, 유아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모 분담 비율, 영유아 1인당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

자료: 장명림 외(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81-83(이윤진 외, 2016: 53-54에서 재인용).

2) 유아교육·보육 정책 성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2010년부터 6년간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왔다. 유아교육 정책 성과 분석 과제(2010~2015)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첫째, 중앙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사업 분석, 둘째 유치원 기관 및 원아 현황 분석, 셋째, 유아교육재정 분석, 넷째,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사업 분석, 다섯째, 해당 연도 주요 유아교육 사업 심층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내용인 중앙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사업 분석에 대해서는 2010~2011년에는 정부의 유아교육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유아 학비지원, 교원 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력 제고, 유치원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2012년에는 2009년 12월 수립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 포함된 25개 핵심 과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2013~2015년에는 유아교육 주요 사업을 6개(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교원, 유치원 평가, 방과후 과정 운영, 유아교유진흥원 운영,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운영)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다음의 표와 같이 주요 지표를 구성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표 Ⅱ-2-2 주요 유아교육 지표

구분	지표 영역	세부 지표
김은설 외 (2010)	유아교육 학비지원	5세 무상교육비지원 유아비율, 학비지원 유아비율
	유아교육 재정	총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재정 비율, 유아1인당 유아교육예산
	유치원 이용	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종일제 이용률
김은영 외 (2011)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수, 국공립 유치원 이용 유아 비율
	유아교육 재정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치원 학비 정부 분담 비율,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규모
김은영 외 (2011)	교육비 지원	유치원 학비 지원 유아 비율
	종일제 운영	종일제 운영 유치원 비율, 종일제 교육 유아 비율, 특성화 프로그램 활용 비율
	유치원 평가	유치원 평가 참여 비율
	교사 근무환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사립 교사 처우 개선 수당 지급 교사 비율
	기타 인프라	유아교육 진흥원 수,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비율,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참여 유치원 비율
권미경 외 (2012), 최은영 외 (2013), 최은영 외 (2014), 최은영 외 (2015)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수, 학급 수, 유치원 이용률(만3, 4, 5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 수
	유아교육 재정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
	유아 학비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율, 3, 4세 유아학비 지원율
	교사 근무환경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교사 급여(공립, 사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사립교사처우개선수당지급교사 비율
	방과후 과정 운영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방과후 과정 이용률
	유치원 평가	유치원평가 참여 비율
	유아교육지원 체계	유아교육 진흥원 수, 체험교육원 수,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참여 유치원 비율

자료: 1) 김은설 외(2010). 2010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42.
2) 김은영 외(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90.
3)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47.
4) 최은영 외(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75-76.
5) 최은영 외(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73-74.
6) 최은영 외(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57-58.

보육정책 성과 분석 과제(2010~2015)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정책 성과 분석 과제와 유사하게 크게 첫째 정부의 보육사업 현황 분석, 둘째, 어린이집 기관 및 원아 현황 분석, 셋째, 보육재정 분석, 넷째,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 시책 분석, 다섯째, 해당 연도 주요 보육 사업 심층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내용인 중앙정부의 보육사업 분석에 대해서는 2010년에는 7개 정책(보육비용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보육정보센터 운영,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가정내 파견보육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여기에 2013~2014년에는 1개정책(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추가하였다. 2011년에는 2009년 발표한 '아이사랑 플랜'에 포함된 6대 추진 과제(양육비용 부담 경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보육정책의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보육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다음의 표와 같이 주요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표 Ⅱ-2-3 보육정책의 주요 성과 지표(2010~2014)

평가영역	평가지표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전체 보육료 지원 아동, 보육료 소득대비 비율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 가정양육수당 지원액
보육재정	GDP 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GDP 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 GDP 대비 총 보육·유아교육재정 비율, 아동 1인당 보육예산
공급 및 이용	어린이집 공급률, 어린이집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 보육아동 비율
평가인증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 평가인증 어린이집 유지율
교사 근무환경	월 수당액(농어촌), 수당 지급 교사비율, 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 근무환경개선비(0-4세), 누리과정 수당(5세)

자료: 유해미 외(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9(이윤진 외, 2016: 57에서 재인용).

한편, 2015년 유해미 등(2015)은 2010년부터 수행되어 온 정부 보육사업 분석 틀을 5개 분야(보육인프라 공급, 중앙정부 비용 재원, 서비스 질 관리, 보육인력 관리 및 처우 개선, 맞춤형 보육 지원)로 새롭게 고안하여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와 연동되어 성과 평가 지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Ⅱ-2-4 보육정책의 성과 평가 지표(2015)

평가영역	평가지표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재정 투입, 공급·이용 아동 현황, 서비스 접근성 인식 및 만족도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재정 투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재정 투입, 공급·이용아동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정 투입, 공급·이용 현황, 서비스 접근성 인식 및 만족도
양육비용 부담 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부모 양육비 부담 인식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 자녀 양육시 도움 정도
서비스 질 제고	평가인증제도	평가인증 통과 시설 비율, 평가인증 유지율
	부모모니터링단	제도 도입 및 추진 현황, 부모 인지도/도움 정도
	정보공시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열린어린이집	
	교직원 양성 관리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증 발급 건수, 보육교사 배치 현황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대비 대체인력 비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수준
부모 선택권 보장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율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실시 기관수, 부모인지도/도움정도
	장애아 보육지원	장애아 보육 기관수/아동수
	다문화가족 보육지원	다문화 영유아 기관수/아동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기타	가정양육수당의 선택권 보장 수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자료: 유해미 외(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21(이윤진 외, 2016: 57-58에서 재인용).

3) 누리과정 성과분석 연구

이윤진, 김지현, 그리고 이민경(2016)은 누리과정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발굴하였다. 공공부문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BSC 모델(Balanced scorecared: 균형적 성과평가시스템)을 본 연구의 성과지표 개발의 이론적 틀로 채택하였다(이윤진 외, 2016: 10). 이에 BSC 모델의 이론적 틀에 따라 누리과정 비전, 관점,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표 Ⅱ-2-5 누리과정 정책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고객	유아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가구 확대 (소득하위 70%→전계층)	연도별 누리과정 지원 수혜 유아수 비율 변화
		누리과정 보편적 지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체감도
			기관에 지불하는 추가 비용 변화
		방과후 과정비(누리과정운영지원비) 보편적 지원	학부모 만족도
	보편적이고 질높은 유아교육·보육 제공	누리과정 대상 유아 확대	정부 계획에 따른 유아 연령별 확대 현황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기관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정도
			현 근무 기관의 재직기간
			이전 교육·보육과정 대비 공통과정의 질 향상
재무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성	재원의 충분성	재원 확보 및 편성현황
		지원금 확대	정부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현황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적절성
내부 프로세스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	공통과정 제정 및 시행계획의 적절성	공통과정 계획 대비 제정 시행 여부
			공통과정 제정 소요 기간의 적절성
		누리과정 전달체계의 합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상설기구(운영위) 설치 유무
		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협의회 개최 실적
	누리과정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	누리과정 운영·관리의 적절성	누리과정 운영 시간 준수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어린이집) 사용 지침 준수
학습 및 성장	누리과정 정책의 제도화	법령 및 재정의 안정화	누리과정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여부
			누리과정 재정 일원화의 적절성
	인적자원 역량 강화	유아의 역량 강화	누리과정이 유아발달의 도움 정도
			취학 후 누리과정의 도움 정도
		교사의 역량강화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 강화 수준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처우 개선 정도
			누리과정 교사 연수 이수 여부
			누리과정 교사 연수의 적절성(내용, 방법, 대상범주)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확대	공립 유치원 확충 및 수용 능력 확보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공립병설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기관 선택권 확보 강화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 수 확대
			학부모의 기관선택권에 대한 인식
			1순위 지원 기관 선택 여부

자료: 이윤진 외(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p. 78-79.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지표 개발 연구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분석은 1차부터 법령에 의거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해 왔고 이를 근거로 매년 실시하는 등 정책성과 평가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다. 지면관계상 본고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지표 개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총 231개 정책과제 중에서 합목적성, 보편성, 충분성, 시급성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최종 45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45개 정책과제 중 저출산 분야는 18개(고령사회분야 17개, 성장동력분야 10개)이며 이에 대한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Ⅱ-2-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률

핵심과제	성과지표 및 산식	목표치	달성률(2015)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률 =육아휴직자수 ÷ 산전후 휴가자수 × 100(%)	2015년까지 70.0% (2011년 60.6%)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률 =이용자수 ÷ 산전후휴가지수 × 100(%)	2015년까지 5.0% (2011년 0.5%)	161.5%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스마트 오피스 설치 지역수	2015년까지 90개(누적수) (2011년 10개)	100.0%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보육시설 설치, 보육수당, 위탁보육이행 사업장 수) ÷ 설치의무대상 사업장 수 × 100(%)	2015년까지 88.5% (2011년 65.5%)	100.0%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2015년까지 80개 (2011년 42개)	301.0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비율 =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호수 + 임대주택의 우선공급호수 + 신혼부부전세임대호수) ÷ 연간초혼건수 × 100(%)	2015년까지 10.0% (2011년 9.0%)	100.0%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 (건강가정지원센터)	2015년까지 521.2천명) (2011년 356.0천명)	118.3%

핵심과제	성과지표 및 산식	목표치	달성률(2015)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임신·출산 취약지역 수	2015년까지 25개 (2011년 11개)	10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수혜율 = 연간수혜자수 ÷ 연간 출산모수 × 100(%)	2015년까지 21% (2011년 14%)	111.9%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 영유아보육비·교육비수혜자 ÷ 0~5세 아동수 × 100(%)	2015년까지 62.0% (2011년 42.4%)	100.8%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수) ÷ 전체 어린이수) × 100(%)	2015년까지 97% (2011년 81%)	106.0%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 (야간돌봄 유치원수 +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수) ÷ (유치원수+ 어린이집수) × 100(%)	2015년까지 34% (2011년 22%)	*어린이집 : 97.4% *유치원 : 100.6%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	2015년까지 180만건 (2011년 135만건)	106.8%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수 = 초등돌봄 이용 아동수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수	2015년까지 180만건 (2011년 135만건)	132.9%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수 ÷ 취약계층 아동수 × 100(%)	2015년까지 30% (2011년 11%)	135.3%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수	2015년까지 760개소 (2011년 728개소)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0~14세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 ÷ 0~14세 아동수 × 100,000	2015년까지 3.80(10만명당) (2011년 4.83)	117.9%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 0~17세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 0~17세 아동수 × 1,000(0/00)	2015년까지 3.0(0/00) (2011년 1.0)	111.7 %

자료: 1) 핵심과제, 성과지표 및 산식, 목표치: 이삼식 외(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 및 pp. 22~78 중에서 해당 내용 발췌함.
2) 달성률: 이소영 외(2016).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국외

국외 저출산 및 육아정책 관련한 최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19] 육아정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Bauernschuster, Hener 그리고 Rainer(2013)는 공공 보육시설 이용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역내 공공 보육 확대와 출산율과의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aizán(2009)은 1994년~2001년까지의 EU가구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3세 미만 아동의 공공 보육 시설 이용률이 개인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Luci-Greulich와 Théveneon(2013)은 OECD 18개국의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유급휴가, 보육서비스는 재정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örk, Sjögren, 그리고 Svaleryd(2013)는 모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보육료가 저렴하며, 보육서비스 이용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보육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보육 비용이 추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다자녀 출산에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Hener, Bauernschuster 그리고 Rainer(2016)는 독일의 보육 정책 개혁 이후 공보육시설 이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이용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sai, Kambayshi, 그리고 Yamaguchi(2015)는 1990년부터 2010년의 일본 5년마다 수행하고 있는 인구조사 데이터(1990-2010)를 활용하여 모의 취업률과 보육이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보육 시설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였을 때 모의 취업률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r와 Guest(2011)는 대규모 종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교육수준, 수입, 직업, 결혼상태, 연령 등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베이비보너스, 보육환급제도 등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Kaufman과 Bernhardt(2012)는 스웨덴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장 문화와 출산계획과 전이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이나 파트 타임이 가능한 남성의 경우 출산 의사가 있고, 여성은 배우자의 직업이 좋을수록 출산 확률이 높았다.

19) 국외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관리, 점검, 분석하는 지를 분석한 연구들을 수집, 분석하려고 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선행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음.

표 Ⅱ-2-7 국외 육아정책 분석 사례

연구자	대상국가	분석자료	분석방법	종속변수	정책변수	결과
Bauernschuster, Hener, & Rainer(2013)	독일	행정구별 데이터 (1998~2009)	DID	출산율	3세 미만 아동의 공보육시설 이용률	+
Baizán(2009)	스페인	EU 가구패널 (1994-2001)	다수준 분석	첫째, 둘째 이상 출산확률	3세 미만 아동의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
Luci-Greulich & Théveneon(2013)	OECD 18개국	1982~2007 국가별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tempo-adj TFR	3세 미만 영아 보육기관 이용율	+
Mörk, Sjögren, & Svaleryd (2013)	스웨덴		회귀분석	출산 확률	보육비용	+
Bauernschuster, Hener, & Rainer(2016)	독일	출생신고 데이터	회귀분석	출산 확률	3세 미만 공보육시설 이용률	+
Asai, Kambayashi, & Yamaguchi(2015)	일본	일본 인구조사 패널데이터 (1999-2010)	회귀분석	취업율	보육시설 이용률	+
Parr & Guest(2011)	호주	종단조사 데이터	시계열 분석	출산율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 특성, 보육보조금제도 (CCB, CCR)	효과 미미
Matysiak & Szalma(2014)	헝가리, 폴란드		회귀분석	모 취업률 둘째자녀 출산확률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수급액	모 (재)취업 - 둘째자녀 출산 +
Rindfuss, Guilkey, Morgan & Kravdal(2010)	노르웨이	종단데이터	회귀분석	모 출산율	보육시설 이용률	+
Kaufman & Bernhardt(2012)	스웨덴	스웨덴 패널데이터 (1999-2003)	경로분석	출산계획	가족친화정책	+

자료: 1) Bauernschuster, S., Hener, T., & Rainer, H. (2013). Does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 Care Increase Birth Rates? Evidence from a Low-Fertility Country. Leibniz-Informationszentrum Wirtschaft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Conference Paper.
2) Baizán, P. (2009). Regional child care availability and fertility decisions in Spain. Demographic Research, 21, 803-842.
3) Luci-Greulich, A., & Thévenon, O. (2013). The Impact of Family Policy Packag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9(4), 387-416.
4) Mörk, E., Sjögren, A., & Svaleryd, H. (2013). Childcare costs and the demand for children—evidence from a nationwide reform.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6(1), 33-65.

5) Bauernschuster, S., Hener, T., & Rainer, H. (2016). Children of a (Policy) Revolution: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Care and Its Effect on Fertility.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4(4), 975-1005.
6) Asai, Y., Kambayashi, R., & Yamaguchi, S. (2015). Childcare availability, household structure, and maternal employment.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38, 172-192.
7) Parr, N., & Guest, R. (2011). The contribution of increases in family benefits to Australia''s early 21st-century fertility increase: An empirical analysis. Demographic Research, 25, 215-244.
8) Matysiak, A., & Szalma, L. (2014). Effects of Parental Leave Policies on Second Birth Risks and Women's Employment Entry. Population, 69(4), 599-636.
9) Rindfuss, R. R., Guilkey, D. K., Morgan, S. P., & Kravdal, Ø. (2010). Child-Care Availability and Fertility in Norwa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4), 725-748.
10) Kaufman, G., & Bernhardt, E. (2012). His and Her Job: What Matters Most for Fertility Plans and Actual Childbearing? Family Relations, 61(4), 686-697.

3 국외 육아정책 관리 우수사례: 핀란드

핀란드는[20] 2013년도에 국제기구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서 발표한 엄마지수(mother's index)에서 최고점을 받아서 176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영국의 한 여성단체는 '나는 차라리 핀란드에서 엄마가 되고 싶다'는 캠페인을 실시하기도(이윤진·정도상, 2015: 5) 할 정도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또한, 핀란드는 영아보육을 기관보다는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휴직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핀란드 특유의 육아정책이라 할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s)'는 3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이윤진·정도상, 2015: 33). 핀란드 부모들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직접 양육하거나 또는 기관에 맡길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이윤진·정도상, 2015: 34). 우리나라의 많은 육아전문가들은 영아보육은 기관보다는 가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가정내 양육과 기관 양육이 균형 있게 발달한 핀란드 육아정책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판단, 출장을 계획하였다.

20) 핀란드 국외출장은 2017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승인된 사안임.

가. Kela[21)]

1) 개요

Kela는 핀란드 의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직으로, 독립적인 관리 체계와 자금을 운영하는 사회보장기구이다. 즉,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공기관이다. Kela는 생애주기에 따라 핀란드 거주민(외국인 포함)과 재외핀란드인 모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Kela는 의회에서 임명한 12명의 이사들과 그 이사들이 임명한 8명의 회계 감사원들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Kela의 운영과 개발은 1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담당한다.

Kela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으로는 가족수당(family benefits), 의료보험(health insurance), 재활(rehabilitation), 기본실업보장(basic unemployment security), 기본공공부조(basic social assistance), 주택수당(housing benefits), 학자금 지원(financial aid for students), 장애수당(disability benefits), 기초연금(basic pensions) 등 한 개인이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Kela는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매년 Kela 고객이 고객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횟수는 약 2백만 번, 전화 상담 횟수는 약 160만 번에 이른다. 또한,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

- Kela의 조직 강령
  : Kela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촉진하며, 시민들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 Kela의 가치: 인간 존중, 전문성, 협력, 개선

2) 조직도

Kela 조직은 고객상담(customer relations), 보조수당서비스(benefit services), ICT 서비스센터(center for ICT services),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 경영지원부(management support unit), 보도부(communication unit) 등 6 개

21) 면담조사와 홈페이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Kela 홈페이지. https://www.kela.fi/web/en/operations-kela-in-brief1, 2018. 10. 27. 인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Kela의 내부감사는 Kela 소장의 책임 하에 있다.

가) 보험 지구(Insurance Distri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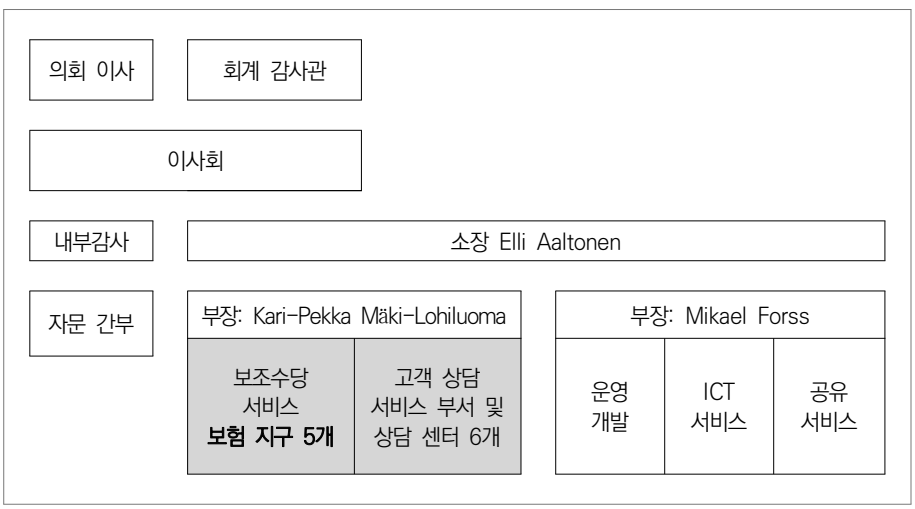
보조수당서비스 사업은 보조수당 신청자 중 수혜자를 선별하는 일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을 기획하고 보조수당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일을 한다. Kela의 사업을 지역 단위로 보면 총 5개의 보험 지구(남부, 동부, 중앙, 서부, 북부)로 나뉘는데, 이는 보조수당서비스 사업부 업무의 일부이자 지역 단위로 보조수당 수혜자를 결정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고객서비스부서(Customer Service Units)

고객상담 사업부는 모든 서비스 경로를 통해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들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고객상담 사업부는 6개의 고객서비스 부서(남부, 동부, 중앙, 서부, 헬싱키)로 나뉘어 각기 다른 서비스 경로를 통해 지역 단위의 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컨대, 헬싱키는 작은 수도인데 고객의 접근성이 높이고자 지역을 동서남북 및 중앙으로 구분해서 5개의 보험지구와 6개의 고객서비스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Ⅱ-3-1 Kela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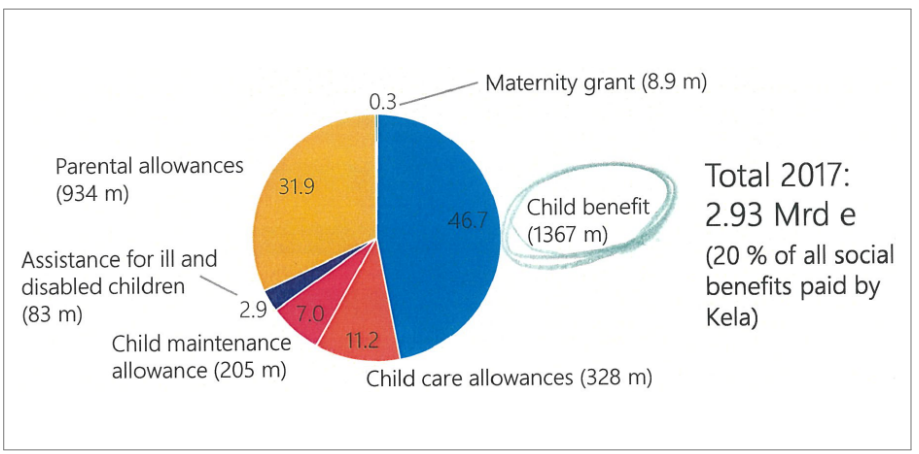
출처: Kela 홈페이지. https://www.kela.fi/web/en/operations-kela-in-brief1(2018. 10. 27. 인출)

3) 다양한 고객을 위한 수당들

고객들은 대개 자녀 출산, 학업, 질병, 실업, 은퇴와 같은 상황에서 Kela를 찾게 된다. 고용주 고객이 Kela를 방문하는 이유는 주로 피고용인의 병가, 육아휴직, 산재보험과 관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과 관련된 일로 Kela를 찾으면 개인 고객으로 간주되지만,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Kela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 고용주 고객으로 간주된다. Kela는 다양한 고객들(유자녀 가구, 학생, 실업자, 퇴직자, 저소득자, 군인,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Kela에서는 지급하는 모든 사회수당(social benefits) 중에서 가족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이다(Kela, 2018: 13). 이 중 아동수당이 가장 많고, 부모 수당(출산 및 육아휴직수당 등),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s)' 순이다(그림 Ⅲ-3-2 참조).

그림 Ⅱ-3-2 Kela가 지급한 가족수당(2017)



출처: Kela(2018). Families and family benefits in Finland. p. 13.

2015년 기준으로 가족과 아이들에게 지급한 모든 사회수당들의 분포를 보면, 데이케어(ECEC)에 지급한 비용이 2.25Mrd로 가장 많고, 아동수당 1.38Mrd, 부모 육아휴직 1.22Mrd 순서로 많이 차지합니다(Kela 면담조사 결과).

가) 아동수당(Child benefit)

Kela는 1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제공하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한다. 한부모 가정에게는 아동 1명당 월 53EUR를 더 지원한다.

>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의 18.5%가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수당은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핀란드의 가족정책의 기본 철학은 재정지원과 서비스를 통한 소득보전(compensation of earnings)과 보편주의(universalism) 복지 실현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고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가정에게는 과세를 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핀란드 Kela 면담자료, 2018.9.)

나) 산모 보조금(maternity grant)

산모 패키지(maternity package) 와 170EUR의 비과세 현금수당 중 선택할 수 있다. 산모 패키지는 우리에게 '엄마상자(mother's box)'로 잘 알려져 있다. 산모 패키지는 신생아를 위한 옷과 관리용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1년 단위로 업데이트한다. 전반적인 품목 구성은 대체로 동일하나 색이나 패턴 등이 변경되고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기도 한다. 총 50 종류의 품목이 포함된다.

산모패키지를 상업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핀란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혜택으로만 제공된다. 산모패키지의 품목들은 EU법을 준수한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다.

> 보통 첫째아 때에는 현금보다는 산모 패키지를 대부분 선택합니다. 95% 이상이 선택합니다. 둘째를 낳으면 첫째 때 쓴 물건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때는 현금 신청자가 많습니다. 산모 패키지는 1938년부터 지급해 온 역사가 오래된 정부서비스입니다. 산모는 이 패키지를 받으려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우리는 정기적으로 이 패키지를 받는 고객(산모)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미흡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산모)들은 아주 만족해 하고 있으나, 옷 사이즈, 색깔, 다른 품목들의 요구 등의 불만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서 더 나은 산모 패키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핀란드 Kela 면담자료, 2018.9.)

다) 아버지 출산휴가와 아버지 수당(paternity leave & allowance)

아버지의 출산휴가는 54 영업일 혹은 9주까지 가능하다. 아버지는 배우자가 산모수당이나 육아수당을 받는 동안 배우자와 같은 시기에 1일~18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휴가는 육아수당 지급이 완료된 후 사용할 수도 있다.

출산휴가는 한 번에 쓸 수도 있고 짧게 여러 번 나누어 쓸 수도 있다. 배우자와 함께 하는 1일~18일의 휴가 기간은 최대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

Kela는 아버지 출산휴가 중 아버지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주가 출산휴가 중에 임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여 아버지 수당을 신청할 때 확인서를 같이 제시해야 한다. 고용주에게는 출산휴가 사용을 최소 2달 전에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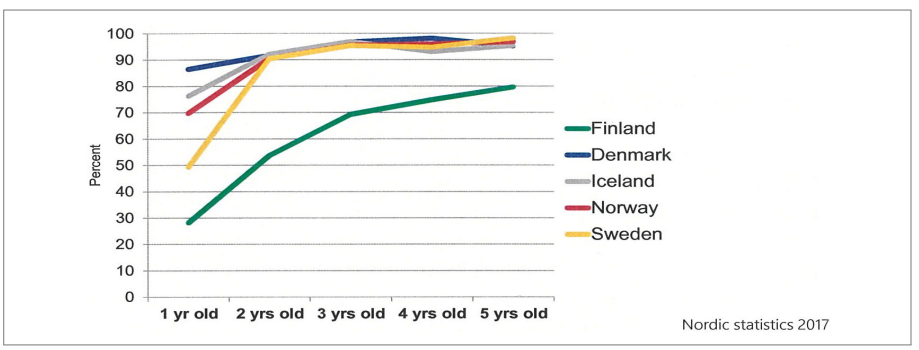
자영업자, 실업자, 학생인 경우에도 아버지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어머니와 동거 중인 경우, 아동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아버지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업무 등의 이유로 잠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면담조사를 통해 핀란드는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핀란드의 아버지 휴가는 이웃 나라인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보다 사용률이 낮습니다. 아버지 휴가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2010년에 6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2013년에는 자녀가 2살때까지 9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배우자와 동거하지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했습니다. (핀란드 Kela 면담자료, 2018.9.)

부모는 서로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할지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고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할 수도 있다. 다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명이 하나 혹은 두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육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핀란드는 이웃 노르딕 국가들보다 기관 이용률이 낮다(그림 Ⅲ-3-3 참조).

그림 Ⅱ-3-3 핀란드 영유아 연령별 기관 이용(2015)



출처: Kela(2018). Families and family benefits in Finland. p.11

라)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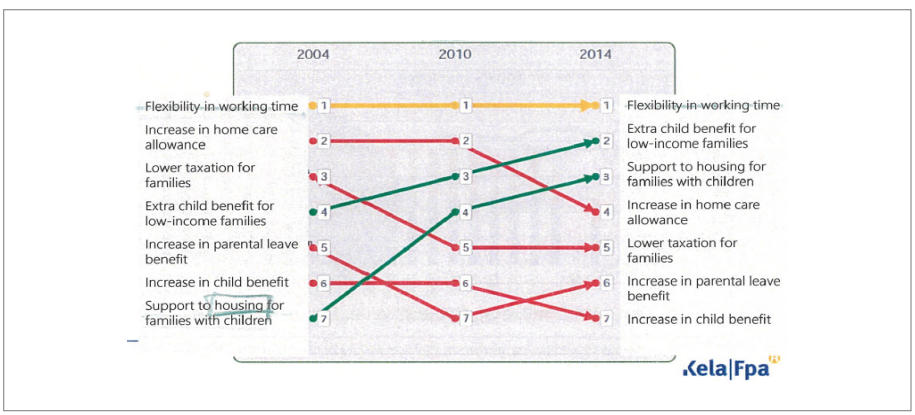
Kela는 전일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는 장학금, 정부 보증의 학자금 대출, 주거비 보조 등이 있다. 핀란드에서 집을 임대한 학생의 경우 일반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Kela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다른 수당의 예로는 통학 교통비 보조금, 학자금 대출 보상금, 식사비 보조 등이 있다. 상위중등학교나 고등학교, 직업학교,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나 따로 명시된 학업을 완료한 학생들 또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핀란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을 보러 다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신들이 살 집을 보러 다니는 거죠. 남학생이나 여학생 상관없이요. 졸업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거비가 지원되니까 가능한 일이죠.(핀란드 Kela 면담자료, 2018.9.)

4) 연구(Research)

Kela는 사회보장 수당 지급뿐 아니라 관련 연구들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목적은 사회보장 개발과 실행을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공유하는 것이다. Kela에서 시행된 연구들은 Kela에서 관리하는 임금보장제도와 Kela의 자체 운영, 보건복지, 재활 등을 다루고 있다. 핀란드에서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보육실태조사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기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추진 정책을 정한다고 한다. 매년 1순위로 나오는 정책은 '유연한 노동시간'이다.

그림 Ⅱ-3-4 핀란드 육아정책 우선 순위조사(2004-2010-2014)



출처: Kela(2017). Families and family benefits in Finland. p. 22.

Kela에서 수행하는 육아관련 주요 연구 프로젝트들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Ⅱ-3-1 Kela에서 수행한 육아 관련 주요 연구 프로젝트들

연구주제	연구목적	비고(연구내용, 조사방법 등)
유자녀 가정 (Families with children)	① 육아휴직 개혁과 육아휴직 분포 양상의 상호연결성 및 육아휴직 개혁이 부모의 노동시장 내 지위에 미친 영향 정도 규명 ② 표본수 부족으로 이전에는 거의 혹은 전혀 연구가 되지 않았던 유자녀는 가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생산 ③ 회사 특성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및 유급휴가 할당량 파악	*본 프로젝트는 2000년대에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그의 가정을 다각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임. *1999년~2009년에 출산한 여성 관련 데이터를 생산함. 데이터는 핀란드 통계청에서 실시한 노동인구조사로부터 수집한 Kela의 보조수당, 보조기간, 배경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표본은 대략 매해 33,000명의 출산 여성임. *Kela와 핀란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배우자 정보도 수집, 분석가능함. 대표 표본은 횡단연구와 종단연구 모두 사용되고 있음. 각 가정은 10~11년 동안 추적 예정임.
2013 육아휴직 인구조사 (Family leaves 2013-a population survey)	① 본 프로젝트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의 육아휴직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 ② 부모 육아휴직과 가정내육아휴직,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 유 자녀 가정의 일가정 균형과 관련 부모의 경험 및 의견을 알아봄.	*2011년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함. *설문조사 응답자는 Kela 등록부 등을 활용해서 표집함. *본 연구는 2006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연구의 후속연구이며, 국립보건복지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THL)와 공동 실시
다출산가정조사 (multiple-birth families)	2011년에 쌍둥이 혹은 세쌍둥이를 출산한 여성 대상으로 실시	2013년 인구조사 실시하면서 특별 설문조사라고 해서 추가로 실시함.
어린 어머니조사 (young mothers)	2011년에 출산한 여성 중 22세 미만의 여성 대상으로 실시	
2010년 헬싱키 유자녀 가정의 보육실태조사 (Child care arrangements in families with children in Helsinki in the 2010s (HELA)	① 아동 초기 교육서비스 실태 관련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실시함. ② 아동 초기 교육서비스 이용 가구 수는 어느 정도이며 가족구조와 교육서비스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③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경험하는 보육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 ④ 아동이나 부모의 장기적 질환이 보육서비스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⑤ 가정 내 자녀 수 증가 또는 부모가 실직했을 때, 혹은 자발적으로나 정규 근무의 어려움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형태의 아동 보육이 이루어질까?	두 번째 연구목적은 아동 초기 교육 서비스의 이용과 가정 내 기타 보육방법에 대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료들을 수집함. 연구자료는 헬싱키시 영유아 교육 및 보육과(Department of Early Education and Care of the City of Helsinki)로부터 취득한, 2008-2015년 동안 주간 데이케어센터 내 아동의 자료와 헬싱키 내 유자녀 가정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구성함.

출처: Kela 홈페이지, https://www.kela.fi/web/en/research-projects(2018. 10. 27. 인출)

나. THL[22)]

1) 개요 및 주요 업무

국립보건복지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THL)는 핀란드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연구 및 관찰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산하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 THL은 연구와 통계를 기반으로 실증적인 정보를 수집 및 생산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이나 기타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적인 정보와 정책방안들을 제시합니다.(핀란드 THL 면담자료, 2018.9.).

THL은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현장전문가, 일반국민 등등 다양한 대상들을 지원한다. 중점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복지사회(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ociety)
-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 감소(reducing inequality and social exclusion)
- 질병 스펙트럼 변화(changing spectrum of disease)
- 건강 위협 요소에 대한 대비(preparing for health threats)
- 서비스제도의 변화(transition of the service system)

THL가 생산하는 정보들은 모두 개방되어 있다. 공공기관, 기업들은 경영관리나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 THL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THL은 핀란드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체계 개혁(social and health service system, SOTE reform)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을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THL은 개혁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SOTE 개혁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22) 간단한 질의응답 및 홈페이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THL 홈페이지, https://thl.fi/en/web/thlfi-en, 2018. 10. 29. 인출)

2) 조직도

먼저, 복지부서에서는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더불어 다양한 인구 집단통합 등을 연구한다. 공중보건부서는 국가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핀란드 사회의 다양한 정책대상들에게 보다 나은 공중보건 정책을 제시한다.

의료보장 부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감염병과 환경적 위험요소들을 예방·처치·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요자들에게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들을 제시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한다.

보건복지 부서는 사회복지구조뿐 아니라 보건관리체계와 사화관리체계, 보건 및 사회경제를 평가·개발·연구한다.

정보서비스 부서는 THL의 지식 자원과 최신 생산품을 편리한 경로를 활용해서 한 최고의 조건으로 제공하며, IT 경영과 서비스 업무도 담당한다.

표 Ⅱ-3-2 THL 조직도 및 업무

<table>
<tr><th colspan="10">경영</th></tr>
<tr><td colspan="2">보도부 보도부장
PäiviVäryrnen</td><td colspan="3">보건관리 및 사회서비스 평가 평가부장
Pekka Rissanen</td><td colspan="3">소장 Juhani Eskola
부소장 Marina Erhola</td><td colspan="2">해외협력 및 연구지원 사무소
Viveca Bergman</td></tr>
<tr><th colspan="2">복지</th><th colspan="2">공중보건해결책</th><th colspan="2">의료보장</th><th colspan="2">보건 및 사회관리 체계</th><th colspan="2">정부서비스</th></tr>
<tr><td colspan="2">부장
Tuire Santamäki-Vuori</td><td colspan="2">부장
Terhi Kilpi</td><td colspan="2">부장
Mika Salminen</td><td colspan="2">부장
Markku Pekurinen</td><td colspan="2">부장
Anneli Pouta</td></tr>
<tr><td colspan="2">노화, 장애, 기능</td><td colspan="2">음주, 약물, 중독</td><td colspan="2">환경 위생</td><td colspan="2">보건 및 사회 경제학</td><td colspan="2">법의학</td></tr>
<tr><td colspan="2">아동, 청소년, 가정</td><td colspan="2">유전체학 및 생물지표</td><td colspan="2">전문 미생물학</td><td colspan="2">개혁</td><td colspan="2">법의유전학</td></tr>
<tr><td colspan="2">평등과 통합</td><td colspan="2">정신건강</td><td colspan="2">감염 질환 관리와 예방 접종</td><td colspan="2">사회정책 연구</td><td colspan="2">법의독물학</td></tr>
<tr><td colspan="2">복지와 건강 증진</td><td colspan="2">공공 보건 평가와 추정</td><td colspan="2"></td><td colspan="2">사회 및 보건 체계 연구</td><td colspan="2">기타 특수서비스</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공공 보건 개선</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h colspan="10">정보서비스</th></tr>
<tr><td colspan="10">부장 Pekka Kahri</td></tr>
<tr><td colspan="2">정보자원서비스</td><td colspan="2">정보체계서비스</td><td colspan="2">IT경영서비스</td><td colspan="2">운영관리</td><td colspan="2">생산품</td><td colspan="2">통계 및 등록</td></tr>
<tr><th colspan="10">행정 및 개발</th></tr>
<tr><td colspan="10">부장 Kari Saarinen</td></tr>
<tr><td colspan="3">재정</td><td colspan="4">인사</td><td colspan="3">지원서비스</td></tr>
</table>

출처: THL 홈페이지, https://thl.fi/en/web/thlfi-en/about-us/organisation(2018. 10. 28. 인출)

3) 연구물[23)]

THL은 핀란드 내에서 국제적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는 연구기관 중 하나입니다. THL은 국내외 연구의 훌륭한 파트너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연구에도 강점을 보입니다. 매년 THL에서 작성한 800편 이상의 논문이 학술지에 기재되며 이 중 절반 정도는 국제적으로 협력한 논문들입니다. THL의 참조지수(reference index)를 핀란드 내에서 상위권입니다. THL이 출판한 논문들은 학계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THL 출판물의 80% 이상이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핀란드 THL 면담자료, 2018.9.)

육아 및 아동을 주제로 최근에 수행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3-3 THL에서 최근 수행한 육아 및 아동 관련 연구들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목적 및 내용 등
약물과 임신 (Drugs and pregnancy)	2013.1.1. ~ 2022.12.31.	*약물과 임신 프로젝트는 2008년 초에 시작함. *THL와 핀란드 의약품청(Finnish Medicines Agency, FIMEA), 핀란드사회보험연구소(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f Finland)와의 공동 프로젝트임. 2003년-2007년 본 프로젝트의 예비연구를 실시함. *본 연구의 목적은 임산부들이 임신기간 동안 안전하게 의료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고, 임신기간 동안 약물 사용 기간과 양, 약물 사용이 임신 과정과 신생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주요 기형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것임.
ESTER 조산, 임신, 자녀의 성인기 건강(ESTER Preterm birth, pregnancy and offspring health in adult life)	2008.10.1.-	*조산과 산모의 임신질병(임신성 당뇨, 임신 기간 동안의 고혈압)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하는 연구임. *연구방법: 1985-1989년에 북부 핀란드에서 출생한 1,161명이 상세한 임상검사를 받음. 생애 초기 노출(조산, 어머니의 임신질병, 통제집단)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함. 또한 의료기록을 통해 임신, 출산, 아동기 성장·발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
헬싱키 출생코호트 연구 (Helsinki Birth Cohort Study (HBCS) - Idefix)	1995.4.1.- 2025.1.1.	*연구목적: 장기 종단연구를 통해 초기 성장생활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 *주요 연구 분야는 심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와 심리적 측면, 노화와 암임.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역학조사는 1933-1944년 헬싱키에서 출생한 13,345명임. 출생기록에 근거해서 태아기 성장 자료와 아동복지임상 기록으로 아동기 성장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3) 출처: THL 홈페이지, https://thl.fi/en/web/thlfi-en/research-and-expertwork/projects-and-programmes/drugs-and-pregnancy(2018. 10. 29. 인출)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목적 및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안전개선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Safety Promotion among Children and Youth)	2018-2025	*핀란드에서는 1970년대 이래로 비의도적 상해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의 사망률이 매우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비의도적 상해와 자살은 여전히 핀란드 내 2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주요 사망원인임. *목표는 핀란드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활기차게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임. *본 프로그램은 아동 대상 폭력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상해와 자살, 자해를 예방하고 감소를 위한 활동들을 제안함. *2018-2025 국가행동계획의 구체적 목표와 활동은 여러 부처와 전문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진 중임. 2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6가지 요인(교통사고, 중독, 익사, 스포츠 부상 및 추락, 자살과 자해, 성폭행, 소수자 대상의 폭력)들의 예방에 초점을 둠.
아동의 건강한 체중 개선 - 북유럽 국가 내 아동비만 근절(Promoting Healthy Weight in Children (PromoKids) - Ending Childhood Obesity in the Nordic Countries)	2018.1.1.-2020.12.31.	*연구목적 - 아동의 건강 증진과 비만 예방을 위한 북유럽 연합과 네트워크 강화 - 양질의 실천 방안과 정책 전파 - 조기 예방, 다양한 활동가들의 역할, 주거 환경과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고려한 북유럽 국가 내 아동 건강 증진과 비만 예방 강조 *목표 - 아동의 건강 증진과 비만 예방을 위한 북유럽 연합과 네트워크 강화 - 아동비만근절위원회(Commission on Ending Childhood Obesity) 보고서(WHO)의 권고사항을 실행할 방법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 공유 - 북유럽 영양섭취 권고(Nordic Nutrition Recommendations, NNR) 실천방법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 공유
유자녀 가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 (Welfare and Servic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	본 설문조사는 가족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해 최저생활, 주관적 건강,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 아동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출처: https://thl.fi/en/web/thlfi-en/research-and-expertwork/projects-and-programmes/national-action-plan-for-safety-promotion-among-children-and-youth(2018. 10. 29. 인출)

핀란드의 육아정책은 정치나 경제와 같은 외부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Kela의 위상이 이를 말해 준다. 핀란드 육아정책의 기조는 비용과 서비스의 조화로운 지원을 통한

보편주의와 소득보전이다. 핀란드의 국가 운영원리는 사회민주주의이다. 따라서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지향하지만, 소득, 성별 등의 격차는 존재한다. 이 격차를 비용지원과 서비스 지원으로 메꾼다. 시민들은 동질집단이 아니다. 유자녀 가구, 학생, 실업자, 퇴직자, 저소득자, 군인,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 외국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존재한다. 핀란드는 저마다 다양한 삶을 사는 시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즉 사회적으로 합의한 기준선에 미치지 못한 시민들에게 비용과 서비스 지원을 통해 기준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각 종 수당이 발달되어 있고, 육아휴직제도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아동수당도 모든 유자녀 가구에게 지급하지만,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다르며 한부모 가정에게는 추가 지급을 한다.

핀란드의 평등은 시민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비용,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며 이러한 가치를 정책을 통해 구현하는 핀란드의 육아정책을 통해 우리사회의 “보편주의 복지”를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은 국가 수준의 정책연구소의 연구를 토대로 한다. 정기적인 수요자 니즈(needs)조사뿐 아니라 중장기 종단연구, 장기 코호트 연구 등의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III

본 연구의 육아정책 과제 선정 및 정책수요자 인식

1. 본 연구의 육아정책 과제 선정
2.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3. 2018년 신규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4. 소결

Ⅲ. 본 연구의 육아정책 과제 선정 및 정책수요자 인식

1 본 연구의 육아정책 과제 선정

유아교육·보육, 사회복지, 노동·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3인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의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복합·핵심과제의 3개 중목표, 8개 세부목표, 38개 세부과제의 중요도에 대해 AHP방법[24]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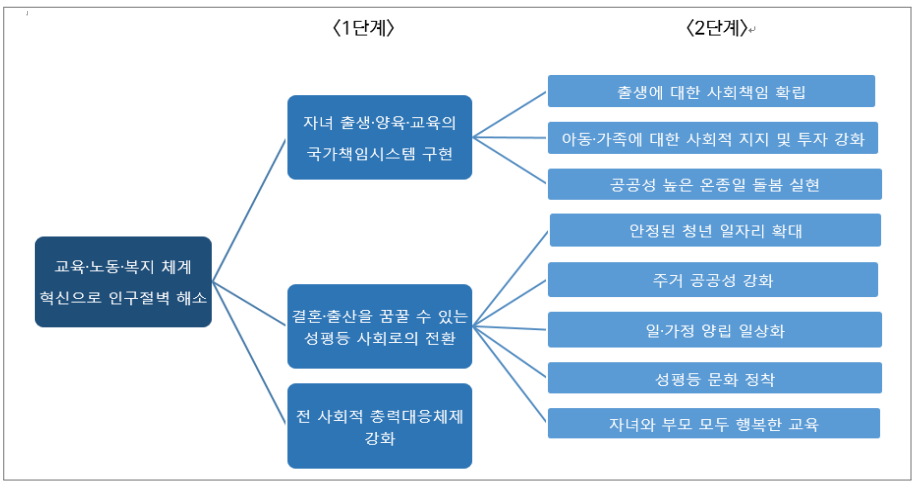
가. 복합·혁신 육아정책 10대 과제 선정

1) 주요 세부목표 선정

3개 중목표 간 쌍대비교(1단계)를 통하여 산출한 상대적 중요도와 8개 세부목표 간 쌍대비교(2단계)를 통하여 산출한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개 세부목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4)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1971년 Saaty가 제창한 것으로서, 문제 분석에 있어서 주관적 판단과 시스템적인 접근을 잘 섞어 놓은 문제해결형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최종목표, 평가기준, 대체안의 계층구조를 만들고, 최종목표에 대하여 평가기준들 간 쌍대비교해서 그 중요도를 구하고 각 평가기준에 대하여 대체안들 사이에 쌍대비교를 해 그 평가치를 구한다. 그 후, 최종목표에 대하여 각 대체안의 종합 평가치를 계산한다. AHP는 그 평가과정에서 총괄적인 쌍대비교를 하는 것이 특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모델화하거나 정량화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키노시타 에이즈·오오야 타가오, 2007/2012; 6-7).

▌그림 Ⅲ-1-1▐ 중목표와 세부목표 위계구조



3개 중목표 간 중요도 쌍대비교 결과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0.388),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0.351),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0.261)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간의 중요도 차이는 근소하였다.

▌표 Ⅲ-1-1▐ 3개 중목표 간 상대적 중요도

구분	내용	CI	중요도	우선순위
3개 중목표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0.005	0.388	1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0.351	2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0.261	3
계			1.000	

3개 중목표 중 2개 중목표(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하위에 속하는 8개 세부목표 간 중요도 쌍대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일상화'(0.199),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0.140),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0.139),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0.124), '성평등 문화 정착'(0.116),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0.104)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0.083)과 '주거 공공성 강화'(0.096)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8개 세부목표 간 상대적 중요도

구분	내용	CI	중요도	우선순위
8개 세부목표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0.006	0.083	8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0.124	4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0.104	6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0.140	2
	주거 공공성강화		0.096	7
	일·가정 양립 일상화		0.199	1
	성평등 문화 정착		0.116	5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0.139	3
계			1.000	

1단계(중목표 간 중요도)와 2단계(8개 세부목표 간 중요도)의 가중치를 종합하여 8개 세부목표의 종합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2단계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일상화'(1순위),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공동 2순위),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4순위),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과 '성평등 문화 정착'(공동 5순위) 순이었다. 5순위 안에 든 세부목표 중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되는 출산 이후 육아정책과 관련되는 세부목표 4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즉 '일·가정 양립 일상화'(1순위),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공동 2순위),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4순위),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5순위)이 이에 해당된다.

표 Ⅲ-1-3 8개 세부목표 종합 우선순위

구분	내용	중요도	우선순위	최종선정
8개 세부목표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0.032	8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0.048	4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0.041	5	○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0.049	2	
	주거 공공성강화	0.034	7	
	일·가정 양립 일상화	0.070	1	○
	성평등 문화 정착	0.041	5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0.049	2	○
계		1.000		

2) 주요 정책과제 선정

8개의 세부 목표 하위에는 각각 2~9개의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총 38개의 정책과제가 있다. 각 세부목표별 해당 정책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쌍대비교 결과를 중목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1-4〉와 〈표 Ⅲ-1-5〉와 같다.

표 Ⅲ-1-4 중목표1(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세부 목표	정책과제	CI	중요도	우선순위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배우자 출산휴가 단계적 확대(유급 3일→10일)	0.006	0.210	2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0.299	1
	산모·신생아 (방문형)건강관리서비스 확대		0.206	3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		0.155	4
	공공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0.130	5
	계		1.000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0.007	0.145	2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0.112	5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0.065	9
	아동재활병원 확충		0.098	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운영		0.071	8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0.154	1
	미혼모 '출산-양육-자립'패키지 지원		0.127	4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0.099	6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0.129	3
	계		1.00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0.001	0.278	2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0.232	3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0.286	1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0.203	4
	계		1.000	

주: 음영부분은 중요도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세부목표 및 정책과제임.

표 Ⅲ-1-5 중목표2(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세부 정책과제 중요도

세부 목표	정책과제	CI	중요도	우선순위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구직 촉진 수당 신설	0.001	0.195	3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민간 확산		0.302	2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로드맵		0.503	1
	계		1.000	

세부 목표	정책과제	CI	중요도	우선순위
주거 공공성 강화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0.001	0.124	5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0.244	1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0.206	4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신설		0.208	3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대 등 지원 강화		0.217	2
	계		1.000	
일·가정 양립 일상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0.009	0.215	2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0.147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218	1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0.083	7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0.100	5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확대		0.094	6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0.143	4
	계		1.000	
성평등 문화 정착	학교 내 성평등 인권교육 강화	0.000	0.566	1
	성평등 임금공시제		0.434	2
	계		1.000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0.000	0.446	1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0.315	2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		0.239	3
	계		1.000	

주: 음영부분은 중요도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세부목표 및 정책과제임.

8개 세부목표 중 선정된 4개 세부목표간의 상대적 가중치(표 Ⅲ-1-3 참조)와 세부목표별 하위 정책과제 수를 반영하여 종합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 최종 선정할 핵심과제 10개를 세부목표별 종합가중치에 따라 4개 세부목표별로 배분하였다. 그 결과 각 세부목표별로 선정할 핵심과제 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Ⅲ-1-6 4개 세부목표별 핵심과제 수

단위: 개

중목표	세부목표	종합가중치	최종선정 핵심과제 수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0.30	3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0.18	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	0.33	3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0.19	2
계		1.00	10

선정된 4개 세부목표별로 배분된 핵심과제 수에 따라 각 세부목표별 하위과제의 중요도(표 Ⅲ-1-4와 표 Ⅲ-1-5 참조)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핵심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Ⅲ-1-7 10대 핵심정책과제 목록

중목표	세부목표	핵심정책과제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나. 5개년 유아교육·보육 정책 5대 과제 선정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복합·혁신과제에 누락되어 있는 유아교육·보육 세부 정책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유아교육 혁신방안 5개년 계획 중 주요정책과제 선정

유아교육 혁신방안 5개년 계획의 6대 추진과제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추진과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와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을 통한 공공성 강화’였다.

표 Ⅲ-1-8 유아교육 혁신방안 5개년 계획 정책과제 중요도

단위: %

세부목표	1+2순위 선택비율	정책과제	CI	가중치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58.3	국공립 유치원 단계적 확대	0.000	0.636
		국공립 유치원 여건 개선		0.364
		계		1.000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58.3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0.005	0.335
		공공위탁을 통한 운영방식 다양화		0.272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활성화		0.393
		계		1.000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보	25.0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0.016	0.123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0.389
		다문화유아(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0.211
		특수유아에 대한 통합교육 확대 운영		0.277
		계		1.000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25.0	유아 중심으로 방과후과정 개편	0.000	0.533
		공교육 혁신을 위한 건전한 유치원 운영 지원		0.467
		계		1.000
유아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	16.7	놀이·유아 중심의 교육과정(누리과정) 혁신	0.000	0.648
		유아와 현장이 중심이 되는 혁신유치원 확대		0.352
		계		1.000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16.7	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0.000	0.414
		국공립-사립 교원 간 임금격차 해소		0.586
		계		1.000
교육 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0.0	학부모안심인증제 도입·운영	0.000	0.161
		학부모 유아교육 참여 활성화		0.159
		행정인력 지원을 통한 교원 업무경감		0.318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0.362
		계		1.000
계	200.0			

주: 음영부분은 중요도 우선순위 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추진과제임.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중 주요정책과제 선정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13개 추진전략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추진전략은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이었다.

표 Ⅲ-1-9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정책과제 중요도

세부목표	1+2순위 선택비율	정책과제	CI	가중치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41.7	표준보육비용 재계측	0.000	0.448
		적정 보육료 지원 및 부모부담 기준 정비		0.552
		계		1.000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41.7	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	0.003	0.620
		보수교육 과정 내실화		0.203
		체계적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종합관리		0.176
		계		1.000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41.7	보육교사의 적정 임금 지급 보장	0.003	0.402
		보육교사 보조인력 지원 확대		0.279
		교사 업무부담 경감		0.319
		계		1.000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33.3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적 역할 확대	0.000	0.471
		민간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등 질 관리체계 운영		0.529
		계		1.000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16.7	어린이집 보육 지원 체계 개선 추진	0.000	0.421
		부모 선택권 보장과 적정 보상체계 마련		0.579
		계		1.000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8.3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0.001	0.252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운영주체 참여 보장		0.209
		어린이집의 관리 역량 강화		0.248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 강화		0.291
		계		1.000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8.3	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0.009	0.313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 개선		0.235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0.286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여건 개선		0.167
		계		1.000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8.3	부모교육 및 양육정보 제공 확산	0.000	0.546
		가정양육 서비스 확대		0.454
		계		1.000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0.0	직장어린이립 직접 설치 확대 및 의무이행률 90%로 확대	0.000	0.442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0.558
		계		1.000
보육과정 개선	0.0	영유아 특성에 맞춰 표준보육과정 개선	0.000	0.673
		특별활동 개선 및 운영 합리화		0.327
		계		1.000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0.0	영유아 반 구성기준 개선	0.000	0.471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		0.529
		계		1.000

세부목표	1+2순위 선택비율	정책과제	CI	가중치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0.0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시간제보육 지원기준 개선	0.000	0.521 0.479
		계		1.000
취약보육 지원 개선	0.0	취약보육 대상 재검토 및 실태조사 취약보육 특성별 보육지원 개선	0.000	0.383 0.617
		계		1.000
계	200.0			

주: 음영부분은 중요도 우선순위 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추진과제임.

다. 15대 핵심육아정책

육아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대상 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15대 핵심 육아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Ⅲ-1-10 선정한 15대 핵심육아정책 목록

분야	핵심정책과제
저출산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유아교육정책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보육정책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2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가. 일반국민

1) 육아정책 중목표에 대한 의견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2개 중목표인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성평등 사회로의 전환)과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국가 책임시스템 구현)이 초저출산 극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각각 7점 척도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아보았다.

결과,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5.01점,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5.88점으로 후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왔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유아 부모(5.09점), 유자녀 성인(5.04점), 대도시(5.03점), 여성(5.41점), 가구소득 500~700만원 미만(5.1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주택 소유형태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주목할 점은 여성이 이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고, 통계적 차이도 가장 유의미하게 나온 점이다. 반대로 남성은 다른 변인에 비해서도 점수가 4.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 정도가 남성과 여성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은 응답자 구분, 자녀 유무, 응답자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먼저, 무자녀 성인에 비해 유자녀 성인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왔다. 이 중 초등저학년 부모는 6.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가구소득 500~700만원 미만 가구에서 점수가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읍면보다는 도시, 자가보다는 비자가가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과 출생, 양육, 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왔다. 이는 우리사회가 여성에게 불리하며 여성이 실제 출산, 양육, 교육을 책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표 Ⅲ-2-1 선정한 2대 중목표 중요도(일반국민)

단위: 점, (명)

구분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사례수)
전체	5.01	5.88	(1,500)
응답자 구분			
영아 부모	4.98	5.95	(300)
유아 부모	5.09	5.86	(300)
초등저학년 부모	5.04	6.00	(400)
무자녀 성인	4.95	5.75	(500)
F	.612	4.012**	
자녀 유무			
유자녀 성인	5.04	5.94	(1,000)
무자녀 성인	4.95	5.75	(500)
t	1.078	9.545**	
지역규모			
대도시	5.03	5.88	(644)
중소도시	4.99	5.93	(651)
읍면	5.01	5.71	(205)
F	.093	2.713	
주택 소유형태			
자가	5.01	5.86	(755)
비자가	5.02	5.90	(745)
t	.018	.417	
응답자 성별			
남성	4.63	5.80	(767)
여성	5.41	5.96	(733)
t	101.485***	8.027**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08	5.79	(488)
300-400만원 미만	4.85	5.92	(279)
400-500만원 미만	5.02	5.93	(277)
500-700만원 미만	5.15	6.01	(303)
700만원 이상	4.79	5.72	(153)
F	2.386*	2.721*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2) 육아정책 세부목표에 대한 의견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에서 두 번째 범주에 있는 세부목표는 총 4개이다. 이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7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자녀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5.85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서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5.78점), “일·가정 양립 일상화”(5.76점),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5.64점) 순으로 나왔다. 저출산과 교육은 가장 긴밀하게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세부목표에 대해 변인별로 분석해 보자.

먼저, 가장 높게 나온 “자녀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변인별로 보면, 유자녀 가구 특히, 영야 가구 및 여성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들 변인에서 행복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이다.

두 번째로 높게 나온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5.78점) 역시, 유자녀와 가구 특히, 영아 가구, 여성에게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영아 부모는 6.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으며 여성 5.86점으로 남성 5.70점보다 높게 나왔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온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지역규모, 주택 소유형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로 높게 나온 “일·가정 양립 일상화”(5.76점)도 유자녀 가구 특히, 영아 가구, 여성에게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남성 5.60점에 비해 여성은 5.92점으로 나와 집단 간 격차가(.32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은 여성의 문제이며 유자녀 가구(5.80점)에서 높게 나온 사실에 비춰 볼 때, 일·가정 양립의 걸림돌은 육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가장 낮게 나온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도 유의한 차이의 정도는 작지만, 유자녀 가구 특히, 영아 가구와 여성에게서 동일하게 높게 나왔다. 온종일 돌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영아 부모에게서 높게 나온 점이 눈에 띈다. 현재 정책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가구소득은 가장 적은 집단(월 300만원 미만)과 가장 높은 집단(월 700만원 이상)의 점수가 낮았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온종일 돌봄의 중요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 주택 소유형태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선정한 4대 세부목표 중요도(일반국민)

단위: 점,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상화	자녀/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사회적 지지/투자 강화	온종일 돌봄 실현	(사례수)
전체	5.76	5.85	5.78	5.64	(1,500)
응답자 구분					
영아 부모	5.87	5.99	6.00	5.81	(300)
유아 부모	5.80	5.88	5.83	5.64	(300)
초등저학년 부모	5.74	5.96	5.90	5.64	(400)
무자녀 성인	5.67	5.67	5.53	5.53	(500)
F	2.213	8.184***	14.136***	3.539*	
자녀 유무					
유자녀 성인	5.80	5.95	5.91	5.69	(1,000)
무자녀 성인	5.67	5.67	5.53	5.53	(500)
t	4.064*	22.889***	38.774***	6.150*	
지역 규모					
대도시	5.69	5.77	5.74	5.65	(644)
중소도시	5.81	5.96	5.85	5.63	(651)
읍면	5.76	5.79	5.70	5.62	(205)
F	1.821	5.291**	2.254	.055	
주택 소유형태					
자가	5.76	5.86	5.80	5.63	(755)
비자가	5.75	5.84	5.77	5.64	(745)
t	.006	.156	.336	.005	
응답자 성별					
남성	5.60	5.73	5.70	5.53	(767)
여성	5.92	5.98	5.86	5.74	(733)
t	31.203***	20.173***	7.608**	11.84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68	5.80	5.68	5.54	(488)
300-400만원 미만	5.76	5.87	5.84	5.63	(279)
400-500만원 미만	5.71	5.79	5.77	5.69	(277)
500-700만원 미만	5.90	5.98	5.94	5.79	(303)
700만원 이상	5.78	5.86	5.70	5.56	(153)
F	1.925	1.594	2.844*	2.481*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3) 육아정책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다음 표는 최종적으로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각각의 대한 중요도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가정 양립 재원 확보”가 5.88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5.74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72점,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5.65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의 증액(현실화) 등 노동환경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유자녀 성인이 무자녀 성인보다 모든 정책과제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그림 Ⅲ-2-1에서 중간 막대가 유자녀 성인임). 유자녀 성인에서도 “일·가정 양립 재원 확보”가 5.90점으로 1순위로 나왔고, 아동수당 도입이 5.18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아동수당 도입 정책과제는 다른 항목과 다르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핵심정책과제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및 공공보육 이용률 40% 확대이다. 초등학교는 공립이 대부분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민간, 사립에 다니는 영유아들이 다수이므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상위 3개 정책과제를 성별 변인을 분석해 보면, “일·가정 양립 재원 확보” 여성 5.99점, 남성 5.78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여성 5.92점, 남성 5.57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여성 5.87점, 남성 5.57점으로 집계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높았다. 상위 3개 정책과제뿐 아니라 나머지 정책과제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 핵심정책과제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와 “출산 양육 친화적 세제개선” 정책과제가 성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가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 및 안정적 지원이란 점에서 세제 지원 등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은 여성의 문제이다.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육아’이며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구조가 여전히 견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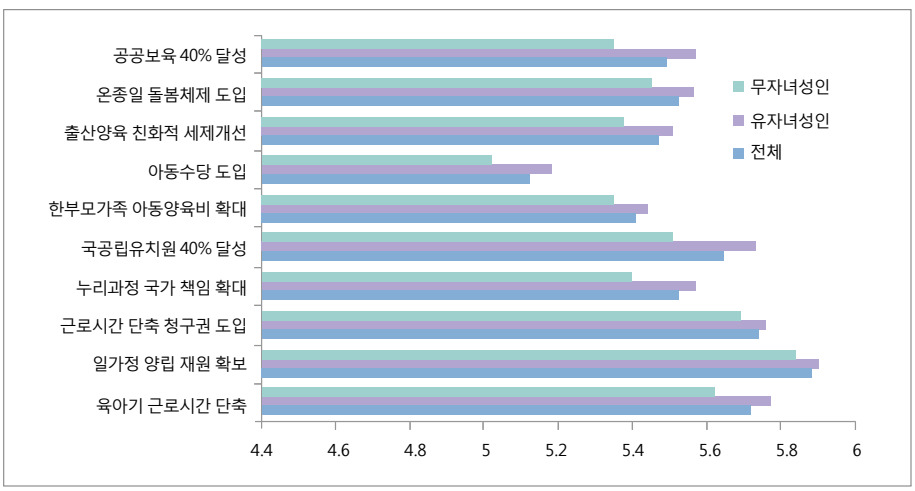
표 Ⅲ-2-3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일반국민)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유자녀 성인	무자녀 성인	*t*	남성	여성	*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72	5.77	5.62	4.833*	5.57	5.87	23.853***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일·가정양립 재원 확보	5.88	5.90	5.84	1.004	5.78	5.99	12.994***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5.74	5.76	5.69	1.441	5.57	5.92	35.339***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52	5.57	5.40	5.402*	5.53	5.50	.125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달성	5.65	5.73	5.50	11.595**	5.60	5.70	2.220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5.41	5.44	5.35	1.634	5.33	5.50	6.960**
만0~5세 월10만원 아동수당 도입	5.12	5.18	5.02	3.391	5.08	5.17	.993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5.47	5.51	5.38	3.408	5.45	5.49	.368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5.52	5.56	5.45	2.155	5.45	5.60	5.271*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5.49	5.57	5.35	11.287**	5.45	5.54	2.435
사례수	1,500	1,000	500		767	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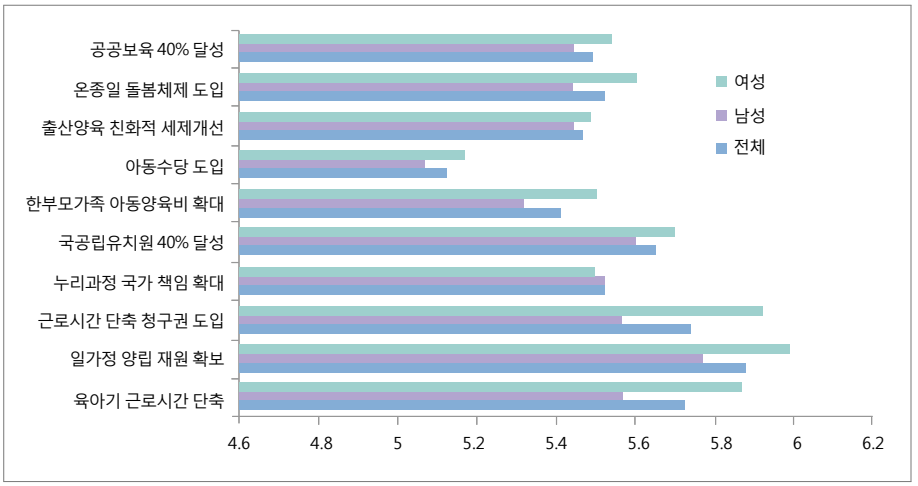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Ⅲ-2-1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자녀 유무)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그림 Ⅲ-2-2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성별)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4)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의견

다음의 두 정책은 현 정부의 주요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이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 확대" 5.53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5.50점으로 근소한 차이로 전자가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자에 대해 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유자녀 가구 특히, 영아 가구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 영아 부모 5.81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유자녀 성인은 5.61점, 무자녀 성인 5.37점으로 0.24점의 차이를 보였다. 자녀 유무에 따라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의견이 가장 확연하게 갈렸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에 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온 변인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유자녀 가구 특히, 영아 부모의 점수가 높게 나왔고, 중소도시, 비자가, 여성, 500~700만원 미만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앞서 질문한 복합·혁신 육아정책과는 달리,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중요도 의견에서는 성별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4 유아교육·보육 정책 중요도(일반국민)

단위: 점, (명)

구분	국공립 기관 취원율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사례수
전체	5.53	5.50	(1,500)
응답자 구분			
영아 부모	5.81	5.67	(300)
유아 부모	5.51	5.44	(300)
초등저학년 부모	5.53	5.49	(400)
무자녀 성인	5.37	5.44	(500)
F	12.134***	2.466	
자녀 유무			
유자녀 성인	5.61	5.53	(1,000)
무자녀 성인	5.37	5.44	(500)
t	18.881***	1.560	
지역규모			
대도시	5.47	5.43	(644)
중소도시	5.58	5.56	(651)
읍면	5.54	5.52	(205)
F	1.251	1.942	
주택 소유형태			
자가	5.53	5.47	(755)
비자가	5.53	5.53	(745)
t	.000	.743	
응답자 성별			
남성	5.49	5.45	(767)
여성	5.57	5.55	(733)
t	1.778	2.23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45	5.53	(488)
300-400만원 미만	5.51	5.40	(279)
400-500만원 미만	5.58	5.48	(277)
500-700만원 미만	5.59	5.56	(303)
700만원 이상	5.60	5.50	(153)
F	.936	.764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01$.

나. 원장·교사

1) 원장

가) 육아정책 중목표에 대한 의견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목표에 해당하는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성평등 사회로의 전환)과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시스템 구현”(국가 책임 시스템 구현)의 중요도를 일반국민과 동일한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국가 책임 시스템 구현”이 5.76점으로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5.49점보다 높게 나왔다. 현장에서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각의 중목표를 변인별로 분석해 보자. “국가 책임 시스템 구현” 중목표의 중요도에 대해 어린이집(5.75)보다 유치원(5.77)이, 이 중에서도 국공립유치원(6.08)이 가장 높았다. 교사자격증 최초취득기관은 대학원이 5.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원장 경력 5년 미만이 6.0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읍면이 6.06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온 점이 눈에 띤다. 이는 읍면이 도시에 비해 자녀를 출산, 양육, 교육하는 여건이 미흡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규모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중목표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5.56점)이 어린이집(5.42점)보다 높았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이 5.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이 5.35점으로 가장 낮았다. 원장 총 경력이 15-20년 미만이 5.7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표 Ⅲ-2-5 선정한 2대 중목표 중요도(원장)

단위: 점, (명)

구분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사례수
전체	5.49	5.76	(309)
기관 구분			
어린이집	5.42	5.75	(159)
유치원	5.56	5.77	(150)
t	.728	.006	

구분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사례수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5.35	5.60	(43)
법인/직장 어린이집	5.56	5.90	(39)
민간/가정 어린이집	5.39	5.77	(77)
국공립 유치원	5.77	6.08	(75)
사립 유치원	5.35	5.45	(75)
F	1.157	2.099	
지역 규모			
대도시	5.39	5.54	(135)
중소도시	5.58	5.85	(109)
읍면	5.55	6.06	(65)
F	.635	3.398*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5.61	5.45	(44)
2-3년제 전문대	5.54	5.79	(101)
4년제 대학	5.36	5.80	(133)
대학원	5.68	5.94	(31)
F	.698	.893	
총 경력			
5년 미만	5.51	6.03	(69)
5-10년 미만	5.62	5.66	(61)
10-15년 미만	5.34	5.88	(64)
15-20년 미만	5.72	5.69	(39)
20년 이상	5.37	5.54	(76)
F	.687	1.306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나) 육아정책 세부목표에 대한 의견

4개 세부목표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일반국민 결과와 동일하게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이 6.11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일반국민 결과에서 3위로 나온 "일·가정 양립 일상화"가 5.93점으로 2순위를 차지했다.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5.89점,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은 5.07점으로 4순위는 일반국민 결과와 동일하였다.

각 세부목표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1순위로 나온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에 대해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읍면,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이 대학원, 15-20년 원장경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기관유형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는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중소도시의 원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자격증 최초 취득기관이 전문대, 원장 경력 15-10년 미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는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중소도시,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대학원, 원장 경력 5년 미만 원장이 상대적으로 중요도 점수를 높게 매겼다.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은 어린이집 원장이 4.94점으로 유치원 원장 5.21점보다 낮게 나온 점이 눈에 띈다. 어린이집은 일일 12시간의 종일제 운영을 기본 전제로 하는 기관이란 점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이 항목에 대해 중요도를 낮게 책정한 점은 의외이다. 이는 현재 일일 12시간 종일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방한 것으로 읽혀진다. 국공립유치원, 중소도시·읍면,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대학원, 원장 경력 15-20년 미만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Ⅲ-2-6 선정한 4대 세부목표 중요도(원장)

단위: 점,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상화	자녀/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사회적 지지/투자 강화	온종일 돌봄 실현	사례수
전체	5.93	6.11	5.89	5.07	(309)
기관 구분					
어린이집	5.87	5.98	5.73	4.94	(159)
유치원	5.99	6.24	6.07	5.21	(150)
t	.983	5.052*	7.549**	2.013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6.14	6.09	5.65	5.05	(43)
법인/직장 어린이집	5.79	5.97	5.77	4.82	(39)
민간/가정 어린이집	5.75	5.92	5.75	4.95	(77)
국공립 유치원	6.15	6.31	6.24	5.31	(75)
사립 유치원	5.84	6.17	5.89	5.11	(75)
F	1.870	1.615	2.948*	.741	

구분	일가정 양립 일상화	자녀/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사회적 지지/투자 강화	온종일 돌봄 실현	사례수
지역 규모					
대도시	5.86	6.01	5.84	4.99	(135)
중소도시	5.99	6.21	5.94	5.14	(109)
읍면	5.97	6.12	5.92	5.14	(65)
F	.475	1.130	.325	.331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5.48	5.66	5.61	4.82	(44)
2-3년제 전문대	6.07	6.25	5.96	5.13	(101)
4년제 대학	5.94	6.11	5.86	5.08	(133)
대학원	6.06	6.26	6.19	5.23	(31)
F	3.184*	3.808*	1.927	.482	
총 경력					
5년 미만	6.01	6.38	6.16	5.22	(69)
5-10년 미만	6.10	6.15	5.85	4.98	(61)
10-15년 미만	5.70	5.97	5.63	4.89	(64)
15-20년 미만	6.23	6.44	6.00	5.26	(39)
20년 이상	5.75	5.78	5.86	5.07	(76)
F	2.370	4.772**	2.171	.501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다) 육아정책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5.87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고, 근소한 차이로 "일·가정양립 재원 확보"(5.86점)가 2순위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5.59점으로 3순위로 꼽았다. 순위 차이는 있으나, 이 3개 핵심정책과제는 전문가 의견조사 및 일반국민 응답에서도 상위 3위권에 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할 육아정책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39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5.31점,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5.17점 순으로 중요도 점수가 매겨졌다. 반면, "국공립 유치원 및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정책과제는 각각 4.79점, 4.76점으로 중요도를 낮게 책정했다. 기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는데,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3.55점), 민간어린이집(4.44점)

원장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동수당 도입"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중요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표 Ⅲ-2-7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원장)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F*
		국공립	법인/직장	민간/가정	국공립	사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87	5.86	5.74	5.66	6.05	5.96	1.297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일·가정양립 재원 확보	5.86	5.56	5.69	5.62	6.27	5.95	4.199**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5.59	5.53	5.46	5.38	5.99	5.49	2.807*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39	5.28	5.74	5.04	5.43	5.60	1.698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달성	4.79	4.98	5.21	4.36	6.16	3.55	27.537***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5.31	5.19	5.74	5.00	5.70	5.07	4.398**
만0~5세 월10만원 아동수당 도입	4.19	5.14	5.36	4.82	5.59	5.05	6.749***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5.17	5.14	5.36	4.82	5.59	5.05	3.086*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4.81	4.86	5.03	4.68	5.11	4.49	1.697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4.76	4.91	5.28	4.44	5.52	3.97	11.097***
사례수	309	43	39	77	75	75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라)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의견

현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보육 정책목표인 "국공립 기관 취원율 증대"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각각 4.74점, 5.68점으로 후자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일반국민 조사 결과와는 반대이다. 앞서 핵심정책과제에서도 확인했듯이 국공립 확충에 대해 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먼저, "국공립 기관 취원율 증대"에 대해 변인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점수가 높았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이 6.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이 3.2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 간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5.20점)이 대도시(4.41점), 중소도시(4.86점)보다 높았으며, 원장경력 5년 미만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 어린이집 원장이 유치원 원장보다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6.23점으로 가장 많이 희망하며 사립유치원 원장은 이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가장 낮은 점수(4.89점)를 주었다. 지역규모,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원장 총 경력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8 유아교육·보육 정책 중요도(원장)

단위: 점, (명)

구분	국공립 기관 취원율 증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사례수
전체	4.74	5.68	(309)
기관 구분			
어린이집	4.80	6.02	(159)
유치원	4.67	5.31	(150)
t	.346	18.453***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5.23	6.23	(43)
법인/직장 어린이집	5.21	6.13	(39)
민간/가정 어린이집	4.35	5.84	(77)
국공립 유치원	6.11	5.73	(75)
사립 유치원	3.24	4.89	(75)
F	34.931***	8.708***	
지역 규모			
대도시	4.41	5.59	(135)
중소도시	4.86	5.69	(109)
읍면	5.20	5.83	(65)
F	4.330*	.569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4.82	5.59	(44)
2-3년제 전문대	4.33	5.70	(101)
4년제 대학	5.04	5.74	(133)
대학원	4.68	5.42	(31)
F	2.853*	.460	
총 경력			
5년 미만	5.52	5.81	(69)
5-10년 미만	4.54	5.85	(61)
10-15년 미만	4.13	5.44	(64)
15-20년 미만	4.49	5.92	(39)
20년 이상	4.83	5.49	(76)
F	5.431***	1.359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1$, *** $p < .001$.

유아교육 정책 5개년 계획에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이 선정한 2대 유아교육 정책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와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을 통한 공공성 강화”이다. 각각의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 후자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 어린이집 원장이 참여하였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읍면, 원장 경력 5년 미만의 원장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을 통한 공공성 강화” 정책 역시,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높고 사립유치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보다 읍면의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이 대학원인 원장 및 원장 경력 5년 미만 원장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Ⅲ-2-9 선정한 2대 유아교육정책 중요도(원장)

단위: 점, (명)

구분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강화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을 통한 공공성 강화	사례수
전체	5.00	5.37	(309)
기관 구분			
어린이집	5.11	5.38	(159)
유치원	4.89	5.35	(150)
t	1.136	.019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5.30	5.40	(43)
법인/직장 어린이집	5.28	5.21	(39)
민간/가정 어린이집	4.91	5.45	(77)
국공립 유치원	6.20	5.48	(75)
사립 유치원	3.59	5.23	(75)
F	29.262***	.430	
지역 규모			
대도시	4.71	5.29	(135)
중소도시	5.04	5.43	(109)
읍면	5.55	5.42	(65)
F	5.193**	.301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5.32	5.23	(44)
2-3년제 전문대	4.57	5.47	(101)
4년제 대학	5.24	5.32	(133)
대학원	4.94	5.45	(31)
F	3.364*	.338	

구분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강화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을 통한 공공성 강화	사례수
총 경력			
5년 미만	5.67	5.68	(69)
5-10년 미만	4.80	5.36	(61)
10-15년 미만	4.56	5.03	(64)
15-20년 미만	4.64	5.41	(39)
20년 이상	5.12	5.34	(76)
F	4.320**	1.511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보육정책 5개년 계획에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이 선정한 3대 보육 정책은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적정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이다.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조사에도 유치원 원장이 같이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가 6.20점으로 1순위로 나왔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6.14점,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보육료 지원" 6.05점 순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국공립과 민간 또는 사립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적정보육료 지원"은 법인/직장어린이집이 6.44점으로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이 대학원인 원장이 6.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원장 경력 5년 미만 원장이 6.2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1순위로 꼽은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6.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6.17점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점수가 가장 높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유치원 제외).

표 Ⅲ-2-10 선정한 3대 보육정책 중요도(원장)

단위: 점, (명)

구분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사례수
전체	6.05	6.20	6.14	(309)
기관 구분				
어린이집	6.31	6.31	6.35	(159)
유치원	5.77	6.07	5.91	(150)
t	17.949***	3.565	11.258**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6.21	6.49	6.58	(43)
법인/직장 어린이집	6.44	6.41	6.38	(39)
민간/가정 어린이집	6.31	6.17	6.19	(77)
국공립 유치원	6.00	6.24	6.12	(75)
사립 유치원	5.55	5.91	5.71	(75)
F	6.308***	2.395	4.968**	
지역 규모				
대도시	5.99	6.18	6.13	(135)
중소도시	6.15	6.19	6.14	(109)
읍면	6.03	6.25	6.14	(65)
F	.605	.082	.001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5.80	5.75	5.73	(44)
2-3년제 전문대	6.08	6.30	6.16	(101)
4년제 대학	6.10	6.26	6.20	(133)
대학원	6.13	6.23	6.35	(31)
F	.860	2.781*	2.417	
총 경력				
5년 미만	6.28	6.33	6.29	(69)
5-10년 미만	6.23	6.25	6.13	(61)
10-15년 미만	6.09	6.28	6.23	(64)
15-20년 미만	6.03	6.21	6.10	(39)
20년 이상	5.68	5.96	5.93	(76)
F	3.049*	1.212	1.017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2) 교사

가) 육아정책 중목표에 대한 의견

본 과제에서 선정한 2대 중목표에 대해 앞서 고찰한 일반국민, 원장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교사도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 시스템 구현”(5.86점)이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5.55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요컨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일반국민, 원장, 교사 3개 집단 모두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보다는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에 방점을 두었다.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중목표를 변인별로 보면,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대도시,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대학원, 교사경력 20년의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중목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없었다. 전문대에서 최초 자격증을 취득 교사를 제외하고는 앞의 중목표와 동일하게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대도시, 교사경력 20면 이상의 교사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표 Ⅲ-2-11 선정한 2대 중목표 중요도(교사)

단위: 점, (명)

구분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사례수
전체	5.55	5.86	(309)
기관 구분			
어린이집	5.37	5.79	(159)
유치원	5.74	5.94	(150)
t	5.679*	.944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5.67	5.88	(43)
법인/직장 어린이집	5.23	5.95	(39)
민간/가정 어린이집	5.27	5.66	(77)
국공립 유치원	5.87	6.01	(75)
사립 유치원	5.61	5.87	(75)
F	2.494*	.714	
지역규모			
대도시	5.64	5.92	(135)
중소도시	5.41	5.92	(109)
읍면	5.60	5.66	(65)
F	.861	.948	

구분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사례수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5.49	5.64	(53)
2-3년제 전문대	5.55	6.09	(128)
4년제 대학	5.50	5.72	(111)
대학원	6.06	5.82	(17)
F	.854	2.127	
총 경력			
5년 미만	5.39	5.73	(70)
5-10년 미만	5.54	5.84	(95)
10-15년 미만	5.61	5.89	(74)
15-20년 미만	5.33	5.67	(36)
20년 이상	6.03	6.35	(34)
F	1.563	1.544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나) 육아정책 세부목표에 대한 의견

선정한 4대 세부목표에 대해서 일반국민, 원장과 동일하게 "자녀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6.1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6.02점,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5.98점, "온종일 돌봄 실현" 5.26점 순으로 원장의 응답 결과와 동일하였다.

각 세부목표를 변인별로 분석하면, 먼저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점수를 높게 주었다. 법인/직장어린이집, 중소도시, 전문대에서 최초 자격증을 취득, 교사경력 20년 이상의 교사 집단의 점수가 높았다.

"자녀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중소도시, 전문대에서 최초 자격증을 취득, 교사경력 20년 이상의 교사 집단의 점수가 높았다.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는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읍면, 최초 자격증을 전문대에서 취득, 교사경력 20년 이상의 교사 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와서 유사한 응답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은 유치원, 법인/직장 어린이집, 대도시, 최초 자격증을 취득을 전문대에서 취득, 교사경력 15년

-20년 미만 교사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2 선정한 4대 세부목표 중요도(교사)

단위: 점,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상화	자녀/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사회적 지지/투자 강화	온종일 돌봄 실현	사례수
전체	6.02	6.16	5.98	5.26	(309)
기관 구분					
어린이집	5.96	6.03	5.84	5.24	(159)
유치원	6.09	6.29	6.13	5.29	(150)
t	1.058	4.713*	5.274*	.072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6.14	5.98	5.74	4.93	(43)
법인/직장 어린이집	6.31	6.21	6.18	5.56	(39)
민간/가정 어린이집	5.68	5.97	5.71	5.25	(77)
국공립 유치원	6.20	6.35	6.32	5.13	(75)
사립 유치원	5.97	6.23	5.93	5.44	(75)
F	3.216*	1.664	3.775**	1.225	
지역 규모					
대도시	5.99	6.13	6.01	5.37	(135)
중소도시	6.06	6.28	5.88	5.22	(109)
읍면	6.02	5.98	6.08	5.11	(65)
F	.151	1.757	.713	.679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5.57	5.98	5.70	5.36	(53)
2-3년제 전문대	6.22	6.24	6.06	5.45	(128)
4년제 대학	6.01	6.15	6.03	4.99	(111)
대학원	6.00	6.06	5.88	5.35	(17)
F	4.421**	.842	1.471	1.801	
총 경력					
5년 미만	5.94	6.06	5.74	5.21	(70)
5-10년 미만	6.06	6.23	6.04	5.16	(95)
10-15년 미만	6.03	6.08	6.07	5.34	(74)
15-20년 미만	5.89	6.19	5.97	5.47	(36)
20년 이상	6.18	6.26	6.09	5.26	(34)
F	.408	.482	1.055	.325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다) 육아정책 핵심정책과제 대한 의견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 일반국민과 원장의 조사결과와 상위권 3개는 일치하였다. 이 중, “일·가정 양립 재원 확보”(일반국민 1순위, 원장 2순위)가 6.14점으로 1순위를 꼽았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반국민 3순위, 원장 1순위)이 6.12점으로 2순위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은 6.03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아동수당 도입은 일반국민, 원장과 동일하게 가장 점수가 낮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40% 달성”에 대해 각각 5.19점, 5.04점으로 원장의 4.79점, 4.76점보다 높게 나온 점이다(일반국민의 경우 각각 5.65점, 5.49점). 그러나 원장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교사는 4.31점으로 국공립유치원 교사 6.29점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가 4.71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5.23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관없이 국공립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가 국공립 확충 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13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요도(교사)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F*
		국공립	법인/직장	민간/가정	국공립	사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12	6.37	6.33	5.75	6.21	6.16	3.498**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일·가정양립 재원 확보	6.14	6.30	6.31	5.79	6.24	6.23	3.12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6.03	6.30	6.31	5.79	6.24	6.23	2.173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36	6.23	6.15	5.77	6.16	6.00	1.783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달성	5.19	5.30	5.67	4.69	6.29	4.31	18.755***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5.35	5.14	5.69	5.03	5.49	5.49	2.238
만0~5세 월10만원 아동수당 도입	4.79	4.44	4.79	4.56	5.00	5.03	1.455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5.47	5.60	5.59	5.21	5.72	5.36	1.812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5.06	5.33	5.41	4.92	4.77	5.16	1.532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5.04	5.23	5.46	4.71	5.36	4.73	3.821**
사례수	309	43	39	77	75	75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라)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의견

원장 질문과 동일하게 교사에게 유아교육·보육 정책 5개년 정책의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가 5.65점으로 “국공립 기관 취원율 증대” 5.20점보다 높게 나와, 두 기관의 격차 해소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장 응답 결과와 동일하고 일반국민 조사결과와는 상반된다.

“국공립 기관 취원율 증대”를 각 변인별로 분석하면,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읍면,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대학원, 원장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국공립유치원이 주로 읍면에 소재되어 있고, 국공립 교사가 고학력, 고경력이므로 이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는 어린이집, 법인/직장어린이집, 대도시, 대학원에서 최초 자격증 취득, 교사 경력 5년-10년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4 유아교육·보육 정책 중요도(교사)

단위: 점, (명)

구분	국공립 기관 취원율 증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사례수
전체	5.20	5.65	(309)
기관 구분			
어린이집	5.18	5.92	(159)
유치원	5.21	5.36	(150)
t	.028	12.765***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5.37	6.09	(43)
법인/직장 어린이집	5.77	6.33	(39)
민간/가정 어린이집	4.78	5.61	(77)
국공립 유치원	6.25	5.43	(75)
사립 유치원	4.17	5.29	(75)
F	23.299***	5.411***	
지역 규모			
대도시	5.07	5.73	(135)
중소도시	5.28	5.50	(109)
읍면	5.32	5.72	(65)
F	.711	.993	

구분	국공립 기관 취원율 증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사례수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5.04	5.66	(53)
2-3년제 전문대	5.03	5.75	(128)
4년제 대학	5.37	5.50	(111)
대학원	5.82	5.76	(17)
F	1.899	.655	
총 경력			
5년 미만	4.90	5.59	(70)
5-10년 미만	5.05	5.87	(95)
10-15년 미만	5.18	5.55	(74)
15-20년 미만	5.22	5.78	(36)
20년 이상	6.24	5.21	(34)
F	4.462**	1.678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1$, *** $p < .001$.

다음 〈표 Ⅲ-2-15〉는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이 선정한 2대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중요도 결과이다.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5.54점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5.41점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다. 원장 응답 결과와 동일하지만, 원장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5.68점,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는 4.74점으로 교사가 매긴 점수보다 낮았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읍면, 대학원, 20년 이상의 교사가 높은 점수를 주었다. 사립유치원 교사는 원장 조사와 동일하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4.53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간의 뚜렷한 의견 차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유치원, 법인/직장 어린이집, 중소도시, 대학원, 15-20년 미만의 교사 집단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

두 정책 간의 변인별 차이를 다소 보였으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변인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15 선정한 2대 유아교육정책 중요도(교사)

단위: 점, (명)

구분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을 통한 공공성 강화	사례수
전체	5.41	5.54	(309)
기관 구분			
어린이집	5.35	5.43	(159)
유치원	5.49	5.65	(150)
t	.566	1.666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5.65	5.44	(43)
법인/직장 어린이집	5.85	5.74	(39)
민간/가정 어린이집	4.92	5.27	(77)
국공립 유치원	6.44	5.65	(75)
사립 유치원	4.53	5.64	(75)
F	18.894***	1.102	
지역 규모			
대도시	5.36	5.50	(135)
중소도시	5.28	5.58	(109)
읍면	5.75	5.55	(65)
F	1.826	.101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5.25	5.40	(53)
2-3년제 전문대	5.27	5.38	(128)
4년제 대학	5.54	5.66	(111)
대학원	6.24	6.35	(17)
F	2.196	2.749*	
총 경력			
5년 미만	5.07	5.44	(70)
5-10년 미만	5.28	5.55	(95)
10-15년 미만	5.38	5.58	(74)
15-20년 미만	5.53	5.64	(36)
20년 이상	6.44	5.50	(34)
F	4.479**	.141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선정한 3대 보육정책 정책에 대해 교사는 "적정한 처우보장"(원장 2순위)을 6.19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성 강화"(원장 1순위), "적정 보육료 지원" 순으로 나왔다. 가장 높게 나온 "적정한 처우보장"을 변인별로 보면, 법인/직장 어린이집 6.69점으로 가장 높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5.9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가 국공립이나 법인, 가정에 비해 처우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나온 점이 특이하다. 그밖에 대도시, 최초 취득기관이 전문대, 15-20년 미만 교사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Ⅲ-2-16 선정한 3대 보육정책 중요도(교사)

단위: 점, (명)

구분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사례수
전체	5.76	6.06	6.19	(309)
기관 구분				
어린이집	5.80	6.08	6.26	(159)
유치원	5.73	6.05	6.11	(150)
t	.228	.026	1.142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5.84	6.21	6.40	(43)
법인/직장 어린이집	5.79	6.38	6.69	(39)
민간/가정 어린이집	5.78	5.84	5.96	(77)
국공립 유치원	5.83	6.17	6.23	(75)
사립 유치원	5.63	5.93	6.00	(75)
F	.282	1.894	3.374	
지역 규모				
대도시	5.69	6.11	6.29	(135)
중소도시	5.88	6.05	6.15	(109)
읍면	5.72	6.00	6.05	(65)
F	.671	.207	1.015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5.79	5.72	5.92	(53)
2-3년제 전문대	5.78	6.20	6.28	(128)
4년제 대학	5.68	6.09	6.18	(111)
대학원	6.06	5.94	6.35	(17)
F	.427	2.146	1.244	
총 경력				
5년 미만	5.63	5.99	6.20	(70)
5-10년 미만	5.79	6.09	6.19	(95)
10-15년 미만	5.78	5.92	6.14	(74)
15-20년 미만	6.00	6.44	6.28	(36)
20년 이상	5.68	6.06	6.18	(34)
F	.516	1.266	.089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3 2018년 신규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3절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새롭게 추진하는 아동수당제도와 보육교사 휴게시간 일일 1시간 보장 정책의 실태를 알아본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아동수당

1) 수급 여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중 82.0%가 아동수당을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않았다.

표 Ⅲ-3-1 아동수당 수급 여부

단위: %(명)

구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계(수)	x^2 *(df)*
전체	82.0	18.0	100.0(600)	
자녀 연령				
영아	90.3	9.7	100.0(300)	28.3(1)***
유아	73.7	26.3	100.0(3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91.4	8.6	100.0(105)	
300-400만원 미만	88.2	11.8	100.0(136)	
400-500만원 미만	82.0	18.0	100.0(128)	27.2(4)***
500-700만원 미만	78.9	21.1	100.0(152)	
700만원 이상	64.6	35.4	100.0(79)	

*** $p < .001$.

자녀연령별로는 영아 가구가 90.3%, 유아가 73.7% 영아 가구가 지원받은 비율이 더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은 91.4%로 높으나 700만원 이상은 64.6%로 떨어진다.

아동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자녀연령이 대상을 아니라서가 36.1%로 많고, 다음으로 고소득가구 27.8%, 아동 수당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23.1%,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아서가 7.4% 순이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 부모는 고소득가구인 경우와 아동수당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각각 41.4%, 37.9%로 다수를 차지하고, 유아 부모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가 49.4%로 절반을 차지한다.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 아동 수당에 대한 정보 부족을 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는 자가인 경우는 고소득 가구, 비자가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표 Ⅲ-3-2 아동수당 비수급 이유

단위: %(명)

구분	대상이 아니라서	고소득 가구	아동수당을 몰라서 신청조차 못함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아서	기타	계(수)	x^2 (df)
전체	36.1	27.8	23.1	7.4	5.6	100.0(108)	
자녀 연령							
영아	0.0	41.4	37.9	10.3	10.3	100.0(29)	22.8(4)***
유아	49.4	22.8	17.7	6.3	3.8	100.0(7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4.4	0.0	44.4	0.0	11.1	100.0(9)	
300-400만원 미만	50.0	6.3	37.5	0.0	6.3	100.0(16)	
400-500만원 미만	47.8	17.4	17.4	17.4	0.0	100.0(23)	31.8(16)*
500-700만원 미만	37.5	28.1	21.9	6.3	6.3	100.0(32)	
700만원 이상	14.3	57.1	14.3	7.1	7.1	100.0(28)	
주택 소유형태							
자가	24.6	41.5	21.5	7.7	4.6	100.0(65)	17.6(4)**
비자가	53.5	7.0	25.6	7.0	7.0	100.0(43)	

* $p < .05$, ** $p < .01$, *** $p < .001$.

2) 아동 수당 관련 정책

다음 〈표 Ⅲ-3-3〉은 아동수당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또는 그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로 높고, 다음으로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금액 지원이 29.7%로 아동수당을 보편복지제도로서 전계층, 전연령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다. 이에 반해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거나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각 24.5%, 13.2%가 찬성하였다.

자녀연령별로는 영아 부모가 유아 부모보다 지원 연령을 늘리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낮을

수록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이거나 자녀 수가 적을수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전계층 지원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표 Ⅲ-3-3 아동수당제도 발전방향

단위: %(명)

구분	지원대상 초등학생 (또는 그 이상)까지 확대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금액 지원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기타	계(수)	x^2 (df)
전체	31.8	29.7	24.5	13.2	0.8	100.0(600)	
자녀 연령							
영아	30.3	31.0	21.0	16.3	1.3	100.0(300)	10.2(4)*
유아	33.3	28.3	28.0	10.0	0.3	100.0(3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4.3	25.7	24.8	15.2	0.0	100.0(105)	
300-400만원 미만	34.6	25.7	26.5	13.2	0.0	100.0(136)	
400-500만원 미만	32.0	28.1	22.7	14.8	2.3	100.0(128)	22.2(16)
500-700만원 미만	35.5	29.6	24.3	9.9	0.7	100.0(152)	
700만원 이상	16.5	44.3	24.1	13.9	1.3	100.0(79)	
주택 소유형태							
자가	32.3	31.1	22.9	12.6	1.1	100.0(350)	2.8(4)
비자가	31.2	27.6	26.8	14.0	0.4	100.0(250)	
자녀수							
1명	32.6	31.4	26.3	8.8	0.9	100.0(331)	
2명	32.8	26.8	23.4	16.6	0.4	100.0(235)	24.0(8)**
3명 이상	17.6	32.4	14.7	32.4	2.9	100.0(34)	

* $p < .05$, ** $p < .01$

나.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방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66.7%는 8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었고, 25.2%는 4시간에 30분(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92%가 보장하고 있었다. 그 외에 1.3%는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고 있었고 3.8%는 보장

하지 않고 있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만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7.8% 있었고 소재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7.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높았다.

표 Ⅲ-3-4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현황(원장)

단위: %(명)

구분	4시간에 30분(이상) 휴게시간 제공	8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 제공	1시간 일찍 퇴근	보장 안함	기타	계(사례수)
전체	25.2	66.7	1.3	3.8	3.1	100.0(159)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27.9	72.1	0.0	0.0	0.0	100.0(43)
법인/직장 어린이집	23.1	74.4	2.6	0.0	0.0	100.0(39)
민간/가정 어린이집	24.7	59.7	1.3	7.8	6.5	100.0(77)
지역 규모						
대도시	18.1	75.0	2.8	1.4	2.8	100.0(72)
중소도시	28.3	61.7	0.0	5.0	5.0	100.0(60)
읍면	37.0	55.6	0.0	7.4	0.0	100.0(27)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30.2	62.8	0.0	4.7	2.3	100.0(43)
2-3년제 전문대	25.0	61.5	3.8	5.8	3.8	100.0(52)
4년제 대학	19.2	75.0	0.0	1.9	3.8	100.0(52)
대학원	33.3	66.7	0.0	0.0	0.0	100.0(12)
총 경력						
5년 미만	36.0	60.0	0.0	4.0	0.0	100.0(25)
5-10년 미만	19.5	68.3	0.0	7.3	4.9	100.0(41)
10-15년 미만	15.8	68.4	5.3	5.3	5.3	100.0(38)
15-20년 미만	25.0	70.8	0.0	0.0	4.2	100.0(24)
20년 이상	35.5	64.5	0.0	0.0	0.0	100.0(31)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11개 어린이집의 이유는 5개 기관이 담당 반을 교사 혼자 보육하기 때문에, 4개 기관이 영유아 발달 특성상이라고 하였다.

표 Ⅲ-3-5 보육교사 휴게시간 비보장 이유(원장)

단위: %(명)

구분	담당 반을 교사 혼자 보육하므로 휴식할 수 없다	영유아 발달 특성상 휴식할 수 없다	기타	계(사례수)
전체	45.5(5)	36.4(4)	18.2(2)	100.0(11)

원장들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35.8%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1시간 일찍 퇴근 하게 하는 것을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과 동일하게 운영시간 변경 25.2%, 보조교사 등 인력(인건비) 대폭 지원 19.5%, 교사 대 아동 비율 작게 조정 11.3%, 투담임제 활성화 7.5%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1시간 일찍 퇴근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1시간 일찍 퇴근을, 법인/직장 어린이집 원장은 유치원과 동일한 운영을, 민간/직장 어린이집 원장은 인력(인건비) 지원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6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장안착 위한 지원 필요사항(원장)

단위: %(명)

구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1시간 일찍퇴근	유치원과 동일하게 운영시간 변경	보조교사 등 인력(인건비) 대폭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작게 조정	투담임 활성화	기타	계(사례수)
전체	35.8	25.2	19.5	11.3	7.5	0.6	100.0(159)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41.9	27.9	18.6	9.3	2.3	0.0	100.0(43)
법인/직장 어린이집	38.5	33.3	12.8	12.8	0.0	2.6	100.0(39)
민간/가정 어린이집	31.2	19.5	23.4	11.7	14.3	0.0	100.0(77)
지역 규모							
대도시	36.1	29.2	19.4	9.7	5.6	0.0	100.0(72)
중소도시	36.7	21.7	20.0	10.0	10.0	1.7	100.0(60)
읍면	33.3	22.2	18.5	18.5	7.4	0.0	100.0(27)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32.6	27.9	23.3	2.3	14.0	0.0	100.0(43)
2-3년제 전문대	32.7	21.2	17.3	19.2	7.7	1.9	100.0(52)
4년제 대학	40.4	26.9	17.3	11.5	3.8	0.0	100.0(52)
대학원	41.7	25.0	25.0	8.3	0.0	0.0	100.0(12)
총 경력							
5년 미만	52.0	20.0	12.0	8.0	8.0	0.0	100.0(25)
5-10년 미만	29.3	31.7	26.8	4.9	4.9	2.4	100.0(41)
10-15년 미만	34.2	28.9	5.3	26.3	5.3	0.0	100.0(38)
15-20년 미만	29.2	25.0	25.0	12.5	8.3	0.0	100.0(24)
20년 이상	38.7	16.1	29.0	3.2	12.9	0.0	100.0(31)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방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9.1%는 8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었고, 14.5%는 4시간에 30분(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74%가 보장받고 있었다. 그 외에 4.4%는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편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20.1%로 원장의 응답(3.8%)에 비하여 많았다.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23.4%, 20.9%로 법인/직장어린이집(12.8%)에 비해 많았다.

표 Ⅲ-3-7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현황(교사)

단위: %(명)

구분	4시간에 30분(이상) 휴게시간 제공	8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 제공	1시간 일찍 퇴근	보장 안함	기타	계(사례수)
전체	14.5	59.1	4.4	20.1	1.9	100.0(159)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11.6	65.1	2.3	20.9	0.0	100.0(43)
법인/직장 어린이집	15.4	61.5	5.1	12.8	5.1	100.0(39)
민간/가정 어린이집	15.6	54.5	5.2	23.4	1.3	100.0(77)
지역 규모						
대도시	11.1	59.7	5.6	19.4	4.2	100.0(72)
중소도시	18.3	60.0	1.7	20.0	0.0	100.0(60)
읍면	14.8	55.6	7.4	22.2	0.0	100.0(27)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13.2	47.2	5.7	34.0	0.0	100.0(53)
2-3년제 전문대	20.0	60.0	3.3	15.0	1.7	100.0(60)
4년제 대학	9.3	72.1	4.7	9.3	4.7	100.0(43)
대학원	0.0	66.7	0.0	33.3	0.0	100.0(3)
총 경력						
5년 미만	8.1	62.2	8.1	21.6	0.0	100.0(37)
5-10년 미만	13.2	60.4	0.0	24.5	1.9	100.0(53)
10-15년 미만	22.0	46.3	4.9	24.4	2.4	100.0(41)
15-20년 미만	17.4	69.6	4.3	4.3	4.3	100.0(23)
20년 이상	0.0	80.0	20.0	0.0	0.0	100.0(5)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35명 교사의 이유는 영유아 발달 특성상이 19명(54.3%)으로 담당반을 교사 혼자 보육하기 때문에(10명, 28.6%)보다 많았다.

표 Ⅲ-3-8 보육교사 휴게시간 비보장 이유(교사)

단위: %(명)

구분	영유아 발달 특성상 휴식할 수 없다	담당 반을 교사 혼자 보육하므로 휴식할 수 없다	기타	계(사례수)
전체	54.3(19)	28.6(10)	17.1(6)	100.0(35)

교사들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1시간 일찍퇴근, 유치원과 동일하게 운영시간 변경, 보조교사 등 인력(인건비) 대폭 지원을 각각 23.3%, 23.3%, 22.6% 응답하여 유사하게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작게 조정 15.1%, 투담임제 활성화 11.9%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인력(인건비) 지원을, 법인/직장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과 동일한 운영을, 민간/직장 어린이집 교사는 1시간 일찍 퇴근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표 Ⅲ-3-9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장안착 위한 지원 필요사항(교사)

단위: %(명)

구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1시간 일찍퇴근	유치원과 동일하게 운영시간 변경	보조교사 등 인력(인건비) 대폭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작게 조정	투담임 활성화	기타	계(사례수)
전체	23.3	23.3	22.6	15.1	11.9	3.8	100.0(159)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23.3	23.3	25.6	7.0	16.3	4.7	100.0(43)
법인/직장 어린이집	20.5	28.2	20.5	20.5	5.1	5.1	100.0(39)
민간/가정 어린이집	24.7	20.8	22.1	16.9	13.0	2.6	100.0(77)
지역 규모							
대도시	20.8	25.0	22.2	15.3	12.5	4.2	100.0(72)
중소도시	31.7	20.0	25.0	13.3	8.3	1.7	100.0(60)
읍면	11.1	25.9	18.5	18.5	18.5	7.4	100.0(27)
교사자격증 최초 취득기관							
보육교사교육원	22.6	13.2	32.1	11.3	15.1	5.7	100.0(53)
2-3년제 전문대	21.7	30.0	16.7	16.7	11.7	3.3	100.0(60)
4년제 대학	25.6	27.9	18.6	18.6	7.0	2.3	100.0(43)
대학원	33.3	0.0	33.3	0.0	33.3	0.0	100.0(3)

구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1시간 일찍퇴근	유치원과 동일하게 운영시간 변경	보조교사 등 인력(인건비) 대폭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작게 조정	투담임 활성화	기타	계(사례수)
총 경력							
5년 미만	24.3	18.9	29.7	16.2	5.4	5.4	100.0(37)
5-10년 미만	30.2	20.8	18.9	15.1	13.2	1.9	100.0(53)
10-15년 미만	19.5	26.8	19.5	17.1	9.8	7.3	100.0(41)
15-20년 미만	13.0	26.1	26.1	13.0	21.7	0.0	100.0(23)
20년 이상	20.0	40.0	20.0	0.0	20.0	0.0	100.0(5)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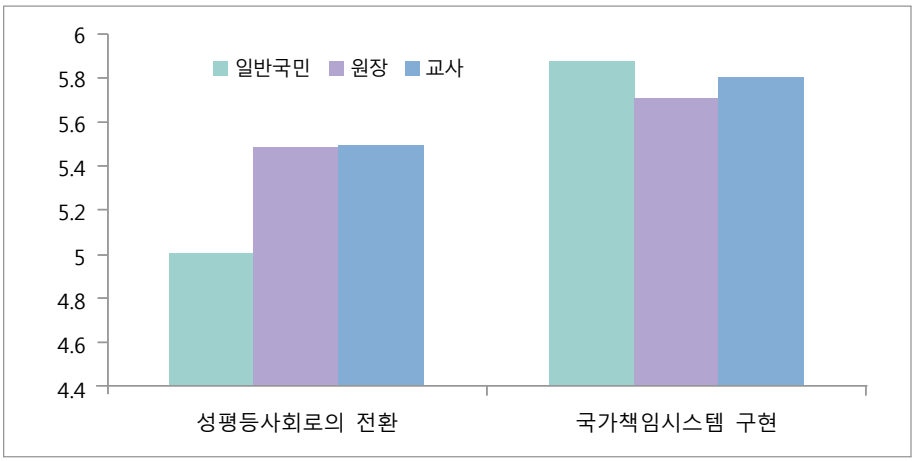
4 소결

지금까지 현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복합·핵심 과제 중에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10대 핵심정책과제를 선정한 과정과 이렇게 선정한 10대 정책과제들에 대해 실제 정책수요자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초등자녀를 둔 부모, 무자녀 성인(기혼, 비혼 포함),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들 중에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이 선정한 5대(유아교육 2개, 보육 3개) 정책과제에 대해 해당 수요자인 원장과 교사에게 의견을 묻은 조사결과도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상위에 있는 2대 중목표인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과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은 일반국민과 원장·교사의 응답 결과가 동일하게 후자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4-1 참조). 일반국민이 5.88점으로 국가책임시스템 구현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였다. 교사 5.81점, 원장 5.71점 순이다.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로는 원장과 교사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반면, 일반국민은 5.0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림 Ⅲ-4-1 2개 중목표 집단 간 비교

단위: 점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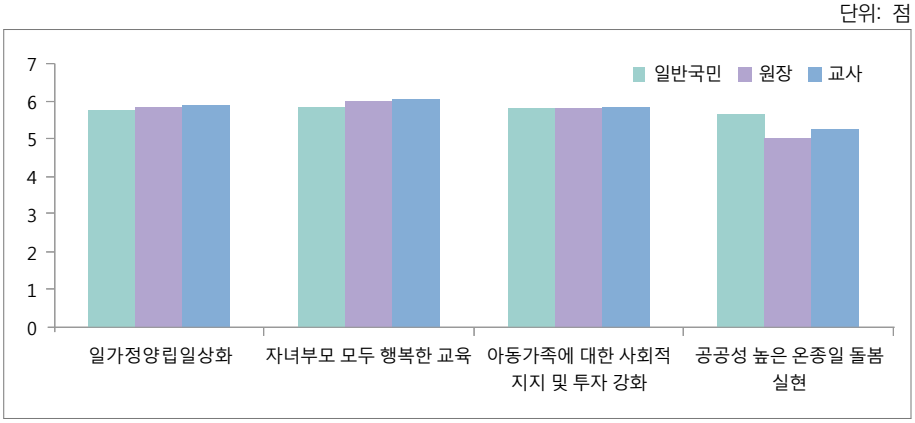
둘째, 중목표 다음인 4개 세부목표인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자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는 두 번째 세부목표인 "자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반국민, 원장·교사 모두 1순위로 꼽았다(각각 5.85점, 6.11점, 6.16점). 그리고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은 4개 집단 공동 4순위로 나왔다.

그런데 일반국민은 이들 4개 세부목표의 중요도 점수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음 〈그림 Ⅲ-4-2〉에서 일반국민의 4개 막대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이를 의미한다. 일반국민은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가 강화"(5.78점)가 2순위로 나온 반면, 원장과 교사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각각 5.96점, 가 2순위로 나왔다.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은 원장의 점수가 현저히 낮게 나왔다. 영유아의 돌봄 기능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이 이 정책의 중요도가 낮게 나온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는 있으나, 돌봄의 사회적 지지보다는 가정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반국민의 수요와 분명 다른 지점이다. 일반국민은 돌봄의 사회적 지지와 투자 강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1순위로 나온 "자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에 해당하는 하위 정책과제가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달성이란 점에서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와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공교육 강화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4-2 4개 세부목표 집단 간 비교

단위: 점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셋째, 세부목표 다음은 10대 핵심정책과제이다. 일반국민, 원장, 교사 모두 10대 과제 중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재원 확보방안"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3개 과제가 상위 3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의 하위 세부과제이다. 세부목표에서는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이 1순위였다면, 핵심정책과제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세부목표를 구성하는 3개 정책과제가 1, 2, 3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중목표는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이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이 아닌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 시스템 구현"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현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으로 제시한 복합·혁신과제의 체계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중목표, 세부목표, 핵심정책과제가 일관되게 1순위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출산 정책은 특정 분야 또는 일부 분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표 Ⅲ-4-1 선정한 복합·혁신 과제의 중요도 결과

중목표	세부목표	핵심정책과제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주: 굵은 선이 각 응답에서 1순위로 나온 과제임.

넷째, 선정한 10대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일반국민 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 재원 확보”가 5.88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5.74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72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5.65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10대 정책과제에서 유자녀 성인이 무자녀 성인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정책과제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육아’(유자녀 가구)이며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구조가 여전히 견고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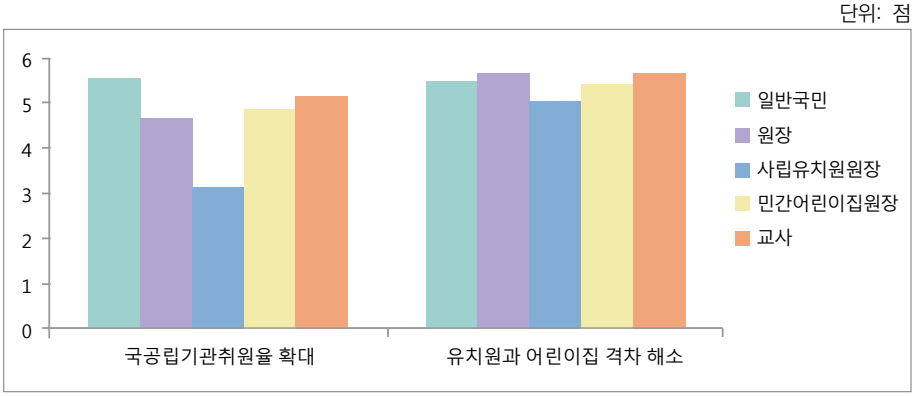
또한, “일·가정 양립 재원 확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 정책과제는 전문가, 원장·교사 설문조사에서도 순위 차이는 있으나, 상위 3순위권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정책이란 점에서 향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보육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국공립기관 취원율 확대”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대해 일반국민, 원장, 교사의 응답에서는 일반국민은 국공립기관 취원율 확대가 두 기관의 격차 해소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원장과 교사는 격차 해소를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반국민은 두 정책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공립 취원율 확대 정책에 대해 일반국민과 원장·교사 특히, 원장 간의 인식 차이는

커 보인다. 그런데 원장은 앞서 4개 세부목표 중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6.11점으로 일반국민보다 높게 나왔다. 일반국민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을 희망한다면, 원장은 달랐다. “국공립기관 취원율 확대”에 대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4.91점)과 사립유치원 원장(3.59점)의 중요도 점수가 전체 평균 5.00점보다 낮았다. 정책수요자 간의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국공립 기관 취원율 확대 정책은 순탄치 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감사 비리 사건이 국공립 기관 확충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림 Ⅲ-4-3 현 정부 주요 유아교육·보육 정책 집단 간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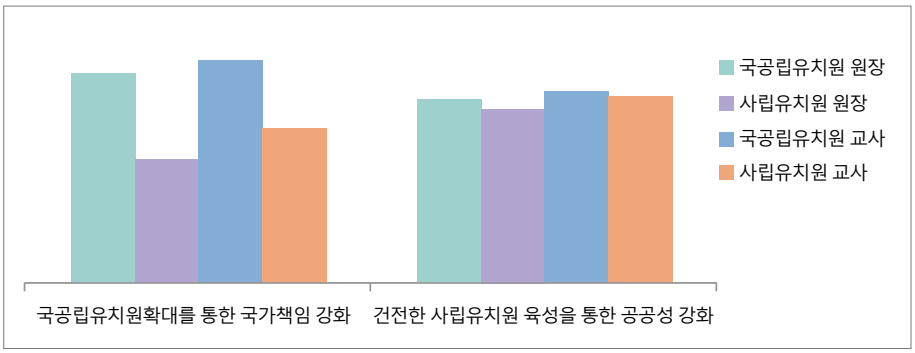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여섯째,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선정한 5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중요도 응답 결과에서도 기관유형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2대 정책인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강화”와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을 통한 공공성 강화”에서 유치원 간의 차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보다 크게 나왔다. 국공립 유치원 원장은 전자 정책에 대해 6.16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사립 유치원 원장은 3.58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사의 응답 경향도 원장과 동일하였다.

그림 Ⅲ-4-4 현 정부 주요 유아교육 정책 집단 간 비교(유치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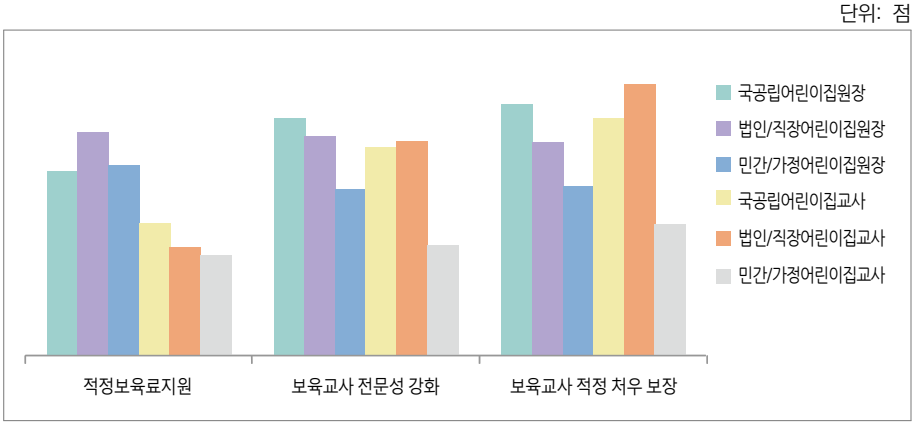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선정한 3대 보육 정책(적정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에 대해서 원장과 교사,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적정보육료 지원보다 중요하다고 했다(그림 Ⅲ-4-5의 가장 왼쪽 막대기). 그러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적정 보육 지원(6.25점)이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6.11점) 및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6.13점)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왼쪽으로부터 세 번째 막대기).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3개 항목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가장 오른쪽 막대기) 가운데, 적정 보육료 지원은 5.75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Ⅲ-4-5 현 정부 주요 보육교육 정책 집단 간 비교(어린이집)

단위: 점



주: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여섯 번째,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 차원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정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또는 그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로 높고, 다음으로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금액 지원이 29.7%로 아동 수당을 보편복지제도로서 전계층, 전연령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었다.

일곱 번째, 보육교사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원장 과 교사의 차이가 컸다. 원장은 3.8%에 불과했으나, 교사는 무려 20.1%가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보장하지 않는다"가 원장과 교사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1시간 일찍 퇴근"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유치원과 동일하게 운영시간 변경"도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Ⅳ

정책수요자의 결혼·출산 인식 및 육아 실태

1. 저출산에 대한 인식
2.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3. 영유아 가구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실태
4. 초등학교 저학년 가구 초등학교 이용 실태
5.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생 가구 사교육 실태
6. 소결

Ⅳ. 정책수요자의 결혼·출산 인식 및 육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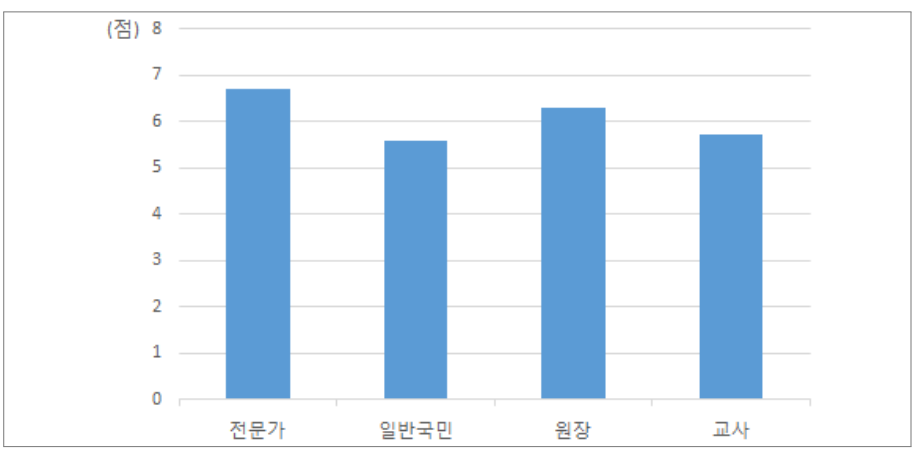
1 저출산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전문가와 정책수요자들의 심각성 인식 정도, 원인, 대응방안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저출산의 심각성

전문가, 일반국민,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교원(원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네 집단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문가들(6.7점)과 원장들(6.3점)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Ⅳ-1-1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 비교



주: 점수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1점)'~'매우 심각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집단별로 세부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면, 먼저 전문가 집단은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전공 분야에 따라서는 노동·경제 분야(6.3점)보다 유아교육·보육(7.0점)과 사회복지 분야(6.8점)의 전문가들이 약간 더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표 Ⅳ-1-1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전문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매우 심각하다	계(사례수)	평균
전체	0.0	0.0	3.0	0.0	6.1	6.1	84.8	100.0(33)	6.70
분야									
유아교육·보육	0.0	0.0	0.0	0.0	0.0	0.0	100.0	100.0(12)	7.00
사회복지	0.0	0.0	0.0	0.0	0.0	20.0	80.0	100.0(11)	6.80
노동·경제	0.0	0.0	9.1	0.0	18.2	0.0	82.7	100.0(11)	6.27

주: 평균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1점)'~'매우 심각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일반국민들도 전문가들보다는 덜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편(5.6점)이었다. 특성별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5.6점), 남성인 경우(5.9점),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5.9점)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거주지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Ⅳ-1-2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일반국민)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매우 심각하다	계(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	1.9	4.9	11.3	23.0	24.9	32.5	100.0(1,500)	5.57(1.39)		
응답자 구분											
영아 부모	2.3	3.7	6.0	10.0	20.3	24.0	33.7	100.0(300)	5.49(1.55)		
유아 부모	2.3	1.7	4.0	7.3	28.0	22.7	34.0	100.0(300)	5.61(1.41)		4.939**
초등 저학년 부모	0.3	1.0	3.5	11.3	20.8	26.5	36.8	100.0(400)	5.78(1.23)		
무자녀 성인	1.6	1.6	5.8	14.4	23.4	25.6	27.6	100.0(500)	5.44(1.40)		
자녀 유무											
유자녀 성인	1.5	2.0	4.4	9.7	22.8	24.6	35.0	100.0(1,000)	5.64(1.39)		7.233**
무자녀 성인	1.6	1.6	5.8	14.4	23.4	25.6	27.6	100.0(500)	5.44(1.40)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매우 심각하다	계(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F
지역규모											
대도시	1.2	2.3	6.1	12.1	22.8	23.9	31.5	100.0(644)	5.51(1.42)		
중소도시	1.8	1.5	4.5	9.2	23.3	26.4	33.2	100.0(651)	5.63(1.38)		1.242
읍면	1.5	1.5	2.4	15.1	22.4	23.4	33.7	100.0(205)	5.60(1.36)		
응답자 성별											
남성	0.9	1.0	2.7	7.8	19.2	27.9	40.4	100.0(767)	5.89(1.24)		83.929***
여성	2.2	2.7	7.1	14.9	27.0	21.8	24.3	100.0(733)	5.24(1.47)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8	1.0	6.1	15.8	24.0	22.3	28.9	100.0(488)	5.42(1.41)		
300-400만원 미만	1.8	2.5	4.7	12.2	19.0	31.2	28.7	100.0(279)	5.52(1.42)		
400-500만원 미만	1.8	3.6	5.8	11.2	24.5	19.9	33.2	100.0(277)	5.45(1.51)		6.633***
500-700만원 미만	0.7	1.3	3.6	5.6	24.1	29.4	35.3	100.0(303)	5.81(1.22)		
700만원 이상	1.3	1.3	2.0	6.5	22.2	22.2	44.4	100.0(153)	5.92(1.28)		

주: 평균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1점)'~'매우 심각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 $p < .01$, *** $p < .001$.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일반국민들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6.3점) 생각하고 있었다. 특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각각 6.53점, 6.51점으로 더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원장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6.54점)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표 Ⅳ-1-3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원장)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매우 심각하다	계(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
전체	1.0	0.3	2.3	3.2	9.4	25.2	58.6	100.0(309)	6.30(1.11)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0.0	0.0	2.3	2.3	4.7	23.3	67.4	100.0(43)	6.51(0.88)		
법인/직장 어린이집	0.0	0.0	2.6	7.7	12.8	25.6	51.3	100.0(39)	6.15(1.09)		
민간/가정 어린이집	3.9	0.0	2.6	1.3	11.7	28.6	51.9	100.0(77)	6.10(1.38)		2.151
국공립 유치원	0.0	0.0	0.0	2.7	9.3	20.0	68.0	100.0(75)	6.53(0.78)		
사립 유치원	0.0	1.3	4.0	4.0	8.0	28.0	54.7	100.0(75)	6.21(1.15)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매우 심각하다	계(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원장 총 경력												
5년 미만	0.0	0.0	0.0	0.0	11.6	23.2	65.2			100.0(69)	6.54(0.70)	
5-10년 미만	1.6	0.0	4.9	1.6	11.5	27.9	52.5			100.0(61)	6.15(1.25)	
10-15년 미만	3.1	0.0	6.3	0.0	7.8	23.4	59.4			100.0(64)	6.17(1.42)	1.377
15-20년 미만	0.0	2.6	0.0	5.1	2.6	28.2	61.5			100.0(39)	6.38(1.07)	
20년 이상	0.0	0.0	0.0	9.2	10.5	25.0	55.3			100.0(76)	6.26(0.98)	

주: 평균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1점)'~'매우 심각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일반국민들과 비슷한 정도로 심각하게(5.71점) 생각하고 있었다. 특성별로는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가 6.08점으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는 5.43점으로 덜 심각하게 생각하여 차이가 있었고, 교사 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 6.26점으로 가장 높아 경력이 15년 미만인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표 Ⅳ-1-4 저출산 문제 심각성 인식(교사)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매우 심각하다	계(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0.0	1.3	4.9	12.6	17.8	30.1	33.3			100.0(309)	5.71(1.26)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0.0	2.3	11.6	9.3	14.0	37.2	25.6			100.0(43)	5.49(1.40)	
법인/직장 어린이집	0.0	0.0	7.7	7.7	28.2	30.8	25.6			100.0(39)	5.59(1.19)	
민간/가정 어린이집	0.0	1.3	5.2	13.0	13.0	28.6	39.0			100.0(77)	5.79(1.30)	3.172*
국공립 유치원	0.0	1.3	1.3	5.3	14.7	34.7	42.7			100.0(75)	6.08(1.06)	
사립 유치원	0.0	1.3	2.7	24.0	22.7	22.7	26.7			100.0(75)	5.43(1.26)	
교사 총 경력												
5년 미만	0.0	1.4	4.3	12.9	17.1	27.1	37.1			100.0(70)	5.76(1.28)	
5-10년 미만	0.0	1.1	7.4	12.6	25.3	25.3	28.4			100.0(95)	5.52(1.29)	
10-15년 미만	0.0	2.7	5.4	13.5	14.9	39.2	24.3			100.0(74)	5.55(1.29)	2.778*
15-20년 미만	0.0	0.0	0.0	16.7	16.7	27.8	38.9			100.0(36)	5.89(1.12)	
20년 이상	0.0	0.0	2.9	5.9	5.9	32.4	52.9			100.0(34)	6.26(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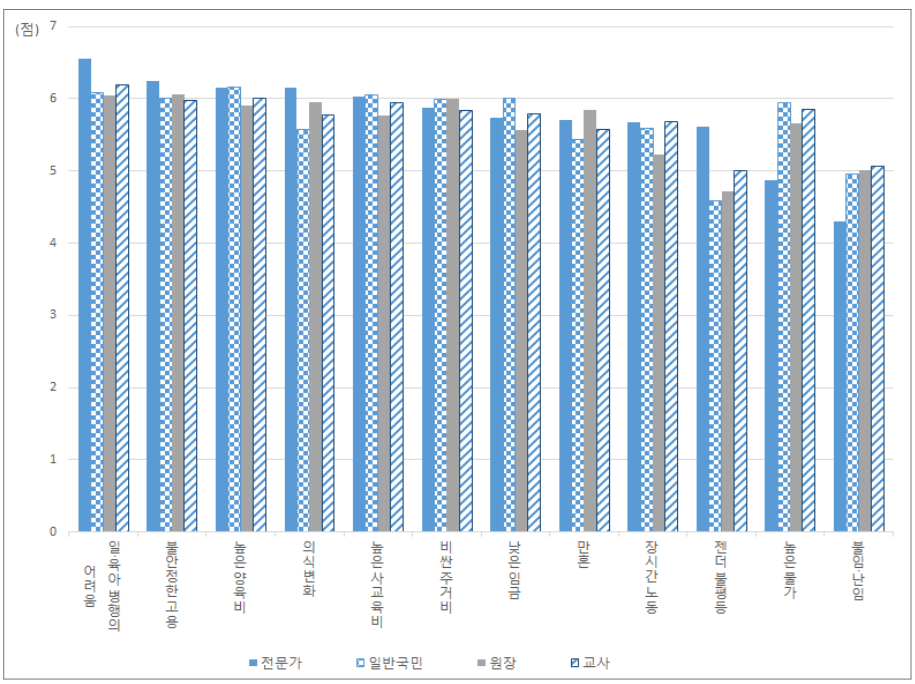
주: 평균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1점)'~'매우 심각하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 $p < .05$.

나.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12개 요인별로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네 집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공통적으로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불안정한 고용, 높은 양육비, 높은 사교육비로 나타났다. 한편 원인에 따라 집단간에 생각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보다 사회적인 요인들(불안정한 고용,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 젠더 불평등)의 영향력을, 국민들은 보다 경제적인 요인들(낮은 임금, 높은 물가)의 영향력을 더 크게 보고 있었다.

비혼 성인, 결혼 기간 1년 미만 성인, 영유아 부모, 초등자녀 부모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면담에서도 이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사회적인 요인보다는 양육비, 주택비 등 경제적 부담을 주로 언급하였다.

그림 Ⅳ-1-2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 비교



주: 점수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점)'~'매우 영향을 미친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집단별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있어서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6.55점), 불안정한 고용(6.24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보고 있었다. 전공분야별 의견을 살펴보면 세 분야 모두 공통적으로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보았고, 유아교육·보육 분야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 전문가들에 비해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보았다.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낮은 임금, 높은 사교육비, 장시간 노동, 젠더불평등의 영향을 더 크게 보았고, 노동·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높은 양육비의 영향을 더 크게 보았다.

표 Ⅳ-1-5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전문가)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유아교육·보육	사회복지	노동·경제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6.55	6.75	6.50	6.36
불안정한 고용	6.24	6.17	6.30	6.27
높은 양육비	6.15	5.92	6.20	6.36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	6.15	6.42	5.60	6.36
높은 사교육비	6.03	5.75	6.30	6.09
비싼 주거비	5.88	5.83	5.90	5.91
낮은 임금	5.73	5.67	6.20	5.36
만혼	5.70	5.33	6.00	5.82
장시간 노동	5.67	5.42	6.20	5.45
젠더 불평등	5.61	5.50	6.00	5.36
높은 물가	4.88	5.25	5.00	4.36
불임·난임	4.30	4.50	4.10	4.27
사례수	33	12	10	11

주: 점수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점)'~'매우 영향을 미친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일반국민들은 높은 양육비(6.16점),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6.08점), 높은 사교육비(6.06점)의 영향을 크게 보았다. 변인별 인식의 차이를 보면,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높은 사교육비의 영향을, 거주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비싼 주거비의 영향을, 여성인 경우 젠더 불평등과 일·육아 병행 어려움의 영향을, 3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낮은 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6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일반국민)

단위: 점, (명)

구분	높은 양육비	일·육아 병행 어려움	높은 사교육비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비싼 주거비	높은 물가	장시간 노동	의식 변화	만혼	불임/난임	젠더 불평등	사례수
전체	6.16	6.08	6.06	6.01	6.00	5.99	5.95	5.59	5.58	5.43	4.95	4.58	(1,500)
응답자 구분													
영아 부모	6.25	6.18	6.15	6.09	6.12	6.08	6.11	5.70	5.69	5.64	5.19	4.59	(300)
유아 부모	6.06	6.09	6.02	6.00	5.96	5.95	5.86	5.52	5.54	5.44	4.92	4.57	(300)
초등 저학년 부모	6.24	6.07	6.25	6.01	5.94	5.96	5.93	5.52	5.55	5.52	4.98	4.47	(400)
무자녀 성인	6.09	6.03	5.88	5.96	6.01	5.98	5.91	5.63	5.56	5.24	4.79	4.67	(500)
F	3.203*	1.361	9.217***	.832	1.793	.795	3.125*	1.668	1.186	6.856**	5.578**	1.105	
주택 소유형태													
자가	6.13	6.07	6.08	5.99	5.96	5.90	5.93	5.52	5.57	5.52	5.01	4.60	(755)
비자가	6.18	6.10	6.03	6.03	6.05	6.08	5.97	5.67	5.58	5.34	4.88	4.56	(745)
t	.825	.227	.717	.496	2.293	8.710**	.439	6.369*	.023	7.439**	3.261	.169	
응답자 성별													
남성	6.07	5.89	5.93	5.95	5.94	6.01	5.82	5.40	5.44	5.40	4.74	4.05	(767)
여성	6.25	6.29	6.19	6.07	6.07	5.96	6.08	5.79	5.72	5.47	5.16	5.13	(733)
t	10.549**	52.901***	20.852***	5.348*	5.234*	.756	22.268***	39.575***	22.960***	1.232	36.868***	181.80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18	6.01	5.96	6.06	6.13	5.98	6.00	5.67	5.56	5.32	4.86	4.65	(488)
300-400만원 미만	6.11	6.07	6.03	6.02	6.02	5.98	5.98	5.52	5.56	5.47	5.01	4.43	(279)
400-500만원 미만	6.14	6.17	6.11	5.90	5.95	6.02	5.81	5.57	5.62	5.44	4.98	4.61	(277)
500-700만원 미만	6.23	6.22	6.22	6.08	5.97	6.00	6.02	5.63	5.64	5.48	5.02	4.74	(303)
700만원 이상	6.04	5.92	6.03	5.87	5.73	5.95	5.84	5.44	5.50	5.63	4.93	4.25	(153)
F	1.060	3.021*	2.797*	2.106	4.531**	.116	2.197	1.423	.504	1.950	.920	3.061*	

주: 점수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점)'~'매우 영향을 미친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원장들은 불안정한 고용(6.06점),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6.05점), 비싼 주거비(6.00점)의 영향을 크게 보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원장은 공통적으로 비싼 주거비, 일·육아 병행 어려움, 불안정한 고용의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는 한편 국공립 유치원장은 높은 양육비와 사교육비를 더 크게 인식하여 차이가 있었다.

표 Ⅳ-1-7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원장)

단위: 점, 명

구분	불안정한 고용	일·육아 병행 어려움	비싼 주거비	의식 변화	높은 양육비	만혼	높은 사교육비	높은 물가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불임/난임	젠더 불평등	사례수
전체	6.06	6.05	6.00	5.95	5.91	5.85	5.77	5.66	5.57	5.23	5.01	4.72	309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6.14	6.21	6.30	6.05	5.79	5.77	5.51	5.74	5.51	5.19	5.28	4.93	43
법인/직장 어린이집	5.82	6.26	6.08	5.82	6.00	5.92	5.79	5.56	5.49	5.28	5.03	5.23	39
민간/가정 어린이집	6.03	5.77	6.10	5.84	5.64	5.88	5.79	5.65	5.70	5.06	4.94	4.48	77
국공립 유치원	6.21	6.16	5.93	6.16	6.28	5.87	6.21	5.64	5.68	5.43	4.95	4.68	75
사립 유치원	6.01	6.01	5.76	5.87	5.84	5.81	5.43	5.71	5.41	5.19	4.99	4.62	75
F	.881	1.953	1.616	1.211	3.020*	.131	4.510**	.140	.642	.740	.515	1.923	

주: 점수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점)'~'매우 영향을 미친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1$.

교사들은 저출산에 있어서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6.19점), 높은 양육비(6.01점), 불안정한 고용(5.97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보고 있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를 제외한 다른 유형 기관의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다. 소재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비싼 주거비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았다.

표 Ⅳ-1-8 저출산 원인별 영향력 인식(교사)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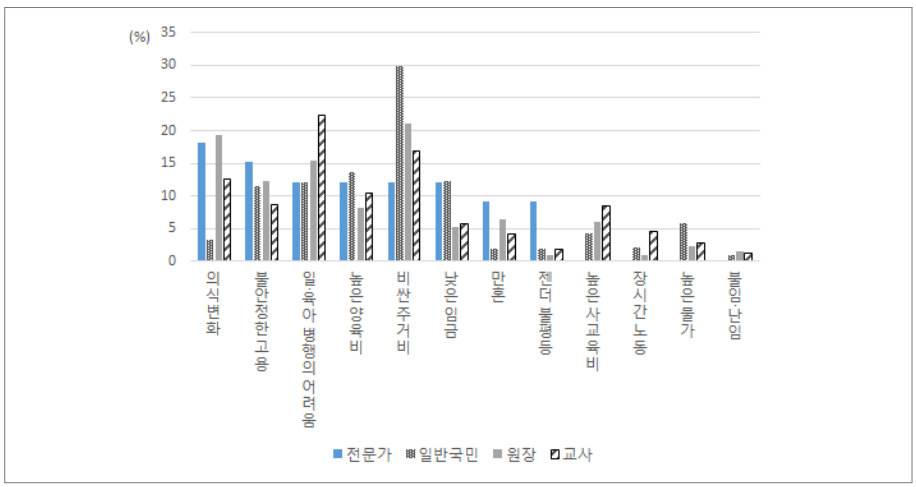
구분	일/육아 병행 어려움	높은 양육비	불안정한 고용	높은 사교육비	높은 물가	비싼 주거비	낮은 임금	의식 변화	장시간 노동	만혼	불임/난임	젠더 불평등	사례수
전체	6.19	6.01	5.97	5.94	5.85	5.84	5.79	5.77	5.68	5.57	5.07	5.00	309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6.23	5.84	5.91	5.56	5.98	5.98	5.77	5.77	5.79	5.63	5.14	4.86	43
법인/직장 어린이집	6.38	6.36	6.26	6.15	5.92	5.92	6.36	5.92	5.97	5.69	5.49	5.13	39
민간/가정 어린이집	5.86	5.73	5.91	5.95	5.81	5.81	5.66	5.45	5.51	5.45	4.88	4.95	77
국공립 유치원	6.43	6.13	6.08	6.09	5.79	5.79	5.76	6.07	5.72	5.80	5.28	5.20	75
사립 유치원	6.17	6.09	5.83	5.91	5.83	5.83	5.68	5.73	5.61	5.37	4.81	4.87	75
F	3.383*	3.015*	1.389	2.112	1.516	.263	2.841*	2.925*	1.026	1.272	2.762*	.693	
지역 규모													
대도시	6.32	6.07	6.01	5.95	6.01	6.01	5.82	5.13	5.80	5.70	5.13	5.00	135
중소도시	6.07	5.85	5.92	5.90	5.73	5.73	5.78	5.00	5.63	5.48	5.00	4.90	109
읍면	6.12	6.15	5.98	6.02	5.68	5.68	5.75	5.09	5.52	5.48	5.09	5.17	65
F	1.846	1.902	.262	.232	.412	2.737	.087	1.104	1.164	1.076	.295	.684	

주: 점수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점)'~'매우 영향을 미친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다. 저출산 대응책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에서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요인에 대하여 집단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1순위로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와 불안정한 고용을 선택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비싼 주거비를 교사는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선택하였다.

그림 Ⅳ-1-3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에 대한 인식 비교



전문가들의 분야별로 살펴보면 1순위로 유아교육·보육 분야는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와 일·육아 병행 어려움을, 사회복지분야는 불안정한 고용을, 노동·경제분야는 불안정한 고용, 비싼 주거비, 높은 양육비, 만혼을 선택하여 차이가 있었다. 1~5순위까지 선택한 응답을 분석해보면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불안정한 고용과 일·육아 병행 어려움의 해결을 시급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1-9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전문가)

단위: %(명)

구분	1순위				1+2+3+4+5순위			
	전체	유아교육·보육	사회복지	노동·경제	전체	유아교육·보육	사회복지	노동·경제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	18.2	33.3	10.0	9.1	63.6	83.3	40.0	63.6
불안정한 고용	15.2	0.0	30.0	18.2	75.8	58.3	90.0	81.8

구분	1순위				1+2+3+4+5순위			
	전체	유아교육·보육	사회복지	노동·경제	전체	유아교육·보육	사회복지	노동·경제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12.1	33.3	0.0	0.0	75.8	83.3	70.0	72.7
비싼 주거비	12.1	8.3	10.0	18.2	54.5	58.3	60.0	45.5
높은 양육비	12.1	0.0	20.0	18.2	48.5	41.7	40.0	63.6
낮은 임금	12.1	8.3	20.0	9.1	51.5	58.3	50.0	45.5
젠더 불평등	9.1	8.3	10.0	9.1	36.4	41.7	40.0	27.3
만혼	9.1	8.3	0.0	18.2	24.2	16.7	20.0	36.4
높은 사교육비	0.0	0.0	0.0	0.0	39.4	41.7	40.0	36.4
장시간 노동	0.0	0.0	0.0	0.0	24.2	8.3	40.0	27.3
높은 물가	0.0	0.0	0.0	0.0	3.0	0.0	10.0	0.0
불임·난임	0.0	0.0	0.0	0.0	3.0	8.3	0.0	0.0
계(사례수)	100.0(33)	100.0(12)	100.0(10)	100.0(11)	500.0(33)	500.0(12)	500.0(10)	500.0(11)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자녀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유무와 무관하게 모두 비싼 주거비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무자녀 성인의 경우 특히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유자녀 성인은 높은 양육비를 무자녀 성인은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선택하여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비싼 주거비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으나 그 다음 시급한 것으로 남성은 높은 양육비를 여성은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선택하였다.

비혼 성인, 결혼 기간 1년 미만 성인, 영유아 부모, 초등자녀 부모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면담에서도 비혼 성인들은 신혼부부 주택마련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한편 영유아와 초등 자녀가 있는 성인들은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을 할 수 있는 제도(근로시간단축,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제공, 산후돌보미 무상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시간제일자리 증가 등), 사회적 분위기(아버지 양육 인정, 긴급보육 발생시 배려 등), 보육·교육기관 확충 등을 요구하였다.

> 주변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거든요. 일단 신혼부부한테 2년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군인. 경찰 남편 친구들 부러운 게, 경찰 아파트나 군인 아파트 주잖아요. 나중에 보증금 받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 가지고 나와서 집을 얻고 그러거든요. 그런게 부럽더라구요. 근데 그게 공무원들에만 돌아가니까 자꾸 공무원만 되려고 하죠. 그러다보니 공부만 하고. 그러면 또 출산이 늦어지고, 그냥 한 2-3년 정도만. 5년 까지는 바라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그 안에서 같이 신혼 즐기면서 맞벌이 하고, 돈 모아서 나중에 나와서 애기 낳고 자기가 원하는 집 근처로 이사갈 수 있으니. (비혼성인 면담 자료, 2018.7.4.)

표 Ⅳ-1-10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일반국민)

단위: %(명)

구분	1순위					1+2+3+4+5순위				
	전체	유자녀 성인	무자녀 성인	남성	여성	전체	유자녀 성인	무자녀 성인	남성	여성
비싼 주거비	29.9	27.7	34.4	34.8	24.8	69.0	66.5	74.0	71.8	66.0
높은 양육비	13.7	15.2	10.8	14.2	13.2	70.3	72.3	66.2	72.1	68.3
낮은 임금	12.3	12.7	11.6	12.0	12.7	58.1	58.1	58.2	61.8	54.3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12.1	11.7	12.8	7.2	17.2	55.4	55.3	55.6	47.1	64.1
불안정한 고용	11.5	11.3	11.8	12.4	10.5	51.3	50.0	54.0	55.9	46.5
높은 물가	5.9	6.0	5.8	6.0	5.9	49.6	48.4	52.0	48.5	50.8
높은 사교육비	4.3	5.9	1.2	4.4	4.2	42.0	49.2	27.6	44.5	39.4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	3.3	3.6	2.8	3.9	2.7	31.1	31.1	31.0	31.4	30.7
장시간 노동	2.1	2.2	1.8	1.8	2.3	27.9	26.0	31.6	27.0	28.8
만혼	1.9	2.2	1.4	1.8	2.0	23.7	25.3	20.6	23.9	23.6
젠더 불평등	1.9	1.0	3.8	0.8	3.1	10.7	8.0	16.0	7.4	14.1
불임·난임	0.9	0.5	1.8	0.7	1.2	10.9	9.8	13.2	8.6	13.4
계(사례수)	100.0 (1,500)	100.0 (1,000)	100.0 (500)	100.0 (767)	100.0 (733)	500.0 (1,500)	500.0 (1,000)	500.0 (500)	500.0 (767)	500.0 (733)
x^2 *(df)*		49.001(11)***		59.463(11)***						

*** $p < .001$.

원장들의 인식은 근무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장들은 의식 변화를 가장 시급하게 본 반면, 어린이집 원장들은 비싼 주거비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표 Ⅳ-1-11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원장)

단위: %(명)

구분	1순위						1+2+3+4+5순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국공립	사립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국공립	사립
비싼 주거비	21.0	30.2	20.5	29.9	9.3	18.7	53.7	53.5	56.4	68.8	42.7	48.0
의식 변화	19.4	11.6	10.3	16.9	22.7	28.0	60.2	65.1	59.0	50.6	58.7	69.3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15.5	16.3	17.9	11.7	22.7	10.7	66.7	69.8	66.7	59.7	73.3	65.3
불안정한 고용	12.3	7.0	17.9	14.3	14.7	8.0	52.8	53.5	46.2	54.5	53.3	53.3
높은 양육비	8.1	7.0	10.3	1.3	13.3	9.3	51.8	30.2	56.4	46.8	70.7	48.0
만혼	6.5	14.0	10.3	7.8	0.0	5.3	45.3	55.8	61.5	50.6	56.0	44.0
높은 사교육비	6.1	2.3	7.7	3.9	9.3	6.7	52.4	55.8	61.5	50.6	56.0	44.0

구분	1순위						1+2+3+4+5순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법인/직장	민간/가정	국공립	사립		국공립	법인/직장	민간/가정	국공립	사립
낮은 임금	5.2	2.3	0.0	7.8	6.7	5.3	33.3	32.6	25.6	36.4	34.7	33.3
높은 물가	2.3	0.0	2.6	1.3	1.3	5.3	33.3	30.2	33.3	44.2	21.3	36.0
불임/난임	1.6	14.0	10.3	7.8	0.0	5.3	13.3	25.6	15.4	7.8	0.7	13.3
젠더 불평등	1.0	0.0	2.6	2.6	0.0	0.0	14.6	9.3	20.5	18.2	14.7	10.7
장시간 노동	1.0	2.3	0.0	0.0	0.0	2.7	22.7	20.9	20.5	20.8	24.0	25.3
계(사례수)	100.0 (309)	100.0 (43)	100.0 (39)	100.0 (77)	100.0 (75)	100.0 (75)	500.0 (309)	500.0 (43)	500.0 (39)	500.0 (77)	500.0 (75)	500.0 (75)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교사들의 인식은 근무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은 비싼 주거비를 가장 시급하게 본 반면, 다른 유형 기관의 교사들은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가장 시급하게 인식하였다.

표 Ⅳ-1-12 저출산 극복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원인(교사)

단위: %(명)

구분	1순위						1+2+3+4+5순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법인/직장	민간/가정	국공립	사립		국공립	법인/직장	민간/가정	국공립	사립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22.3	34.9	23.1	16.9	14.7	28.0	72.2	79.1	69.2	66.2	76.0	72.0
비싼 주거비	16.8	16.3	10.3	27.3	12.0	14.7	51.8	53.5	41.0	62.3	42.7	54.7
의식 변화	12.6	7.0	5.1	14.3	16.0	14.7	43.7	48.8	25.6	41.6	48.0	48.0
높은 양육비	10.4	7.0	5.1	3.9	18.7	13.3	62.5	62.8	66.7	49.4	65.3	70.7
불안정한 고용	8.7	9.3	10.3	1.4	5.3	9.3	45.6	41.9	46.2	48.1	52.0	38.7
높은 사교육비	8.4	2.3	12.8	9.1	14.7	2.7	50.8	39.5	48.7	59.7	54.7	45.3
낮은 임금	5.8	9.3	15.4	5.2	2.7	2.7	41.4	30.2	51.3	48.1	34.7	42.7
장시간 노동	4.5	4.7	7.7	2.6	5.3	4.0	30.1	27.9	38.5	23.4	34.7	29.3
만혼	4.2	2.3	2.6	3.9	5.3	5.3	35.9	46.5	23.1	29.9	45.3	33.3
높은 물가	1.9	0.0	5.1	2.6	2.7	0.0	39.8	41.9	56.4	45.5	25.3	38.7
젠더 불평등	1.9	0.0	5.1	2.6	2.7	0.0	12.6	14.0	20.5	14.3	8.0	10.7
불임/난임	1.3	2.3	2.6	1.3	1.3	0.0	12.9	14.0	12.8	11.7	13.3	13.3
계(사례수)	100.0 (309)	100.0 (43)	100.0 (39)	100.0 (77)	100.0 (75)	100.0 (75)	500.0 (309)	500.0 (43)	500.0 (39)	500.0 (77)	500.0 (75)	500.0 (75)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2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일반국민들의 향후 결혼과 출산 계획 및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결혼 계획

25세 이상~39세 이하의 비혼 성인에게 결혼 계획을 알아본 결과, 결혼을 할 계획인 경우가 81.1%로 다수였지만 안할 계획인 경우도 17.4%가 있었다. 결혼을 할 계획이라고 한 경우, 그 시기는 좋은 배우자가 생기면(47.1%)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34.0%)보다 더 많았다. 세부특성별로는 35~39세 연령인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기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5~29세 연령인 경우, 소득이 300~500만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Ⅳ-2-1 향후 결혼 계획(비혼성인)

단위: %(명)

구분	결혼할 계획		결혼 안 할 계획	기타	계 (사례수)
	좋은 배우자가 생기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			
전체	47.1	34.0	17.4	1.5	100.0(403)
연령					
25-29세	40.1	41.5	17.0	1.4	100.0(147)
30-34세	47.8	37.2	13.3	1.8	100.0(113)
35-39세	53.8	23.8	21.0	1.4	100.0(143)
지역규모					
대도시	42.2	37.0	20.3	0.5	100.0(192)
중소도시	53.8	30.6	14.4	1.3	100.0(160)
읍면	45.1	33.3	15.7	5.9	100.0(51)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43.7	33.8	19.2	3.3	100.0(151)
200-300만원 미만	47.8	31.8	19.7	0.6	100.0(157)
300-500만원 미만	47.1	42.9	10.0	0.0	100.0(70)
500만원 이상	64.0	24.0	12.0	0.0	100.0(25)
주택 소유형태					
자가	41.4	41.4	14.9	2.3	100.0(87)
비자가	48.7	32.0	18.0	1.3	100.0(316)

구분	결혼할 계획		결혼 안 할 계획	기타	계 (사례수)
	좋은 배우자가 생기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6.8	28.9	34.2	0.0	100.0(38)
전문(2-3년)대 졸	42.6	39.7	16.2	1.5	100.0(68)
4년제 대졸	49.8	33.2	15.8	1.1	100.0(265)
대학원 이상	46.9	34.4	12.5	6.3	100.0(32)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나. 출산 계획

막내자녀가 영유아 또는 초등저학년인 성인,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성인, 비혼 성인들을 대상으로 향후 출산 계획을 조사하였다.

1) 막내 자녀가 영유아인 성인

먼저,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부모들은 계획 있음 30.9%, 계획 없음 53.8%, 잘 모르겠음 14.8%로 추가출산에 부정적인 경우가 68.6%로 많았다. 세부 변인별로 현재 자녀수가 1명인 경우보다 2명 이상인 경우, 막내자녀가 유아인 경우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표 Ⅳ-2-2 추가 출산 계획(영유아 부모)

단위: %(명)

구분	출산 계획 있음				입양 계획	출산 계획 없음	잘 모르겠음	계 (사례수)
	현재 임신중	1년이내 임신	2-3년이내 임신	3년이상 경과후 임신				
전체	3.0	9.3	14.8	3.8	0.3	53.8	14.8	100.0(600)
자녀수								
1명	5.1	14.8	20.5	4.5	0.3	36.9	17.8	100.0(331)
2명	0.4	3.0	7.7	3.0	0.4	73.2	12.3	100.0(235)
3명 이상	0.0	0.0	8.8	2.9	0.0	85.3	2.9	100.0(34)
막내자녀 연령								
영아	4.7	11.7	18.7	4.7	0.0	44.3	16.0	100.0(300)
유아	1.3	7.0	11.0	3.0	0.7	63.3	13.7	100.0(300)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막내 자녀가 영유아인 부모 중 추가 출산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가 3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27.2%, 육아가 힘들어서 14.1%,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14.1% 순으로 많았다. 현재 자녀가 1명인 경우,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이유를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어머니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이유로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Ⅳ-2-3 추가 출산 불투명 이유(영유아 부모)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사례수)
전체	31.6	27.2	14.1	14.1	10.7	1.7	0.7	100.0(412)
자녀수								
1명	37.6	14.4	17.1	16.0	11.6	1.7	1.7	100.0(181)
2명	29.4	33.3	12.4	13.9	9.5	1.5	0.0	100.0(201)
3명 이상	10.0	63.3	6.7	3.3	13.3	3.3	0.0	100.0(3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6.3	17.2	7.8	4.7	9.4	4.7	0.0	100.0(64)
300-400만원 미만	41.5	23.4	13.8	12.8	8.5	0.0	0.0	100.0(94)
400-500만원 미만	28.9	36.1	10.8	13.3	10.8	0.0	0.0	100.0(83)
500-700만원 미만	22.8	27.2	20.2	15.8	10.5	2.6	0.9	100.0(114)
700만원 이상	8.8	31.6	14.0	24.6	15.8	1.8	3.5	100.0(57)
주택 소유형태								
자가	27.7	28.1	15.7	14.5	12.0	1.6	0.4	100.0(249)
비자가	37.4	25.8	11.7	13.5	8.6	1.8	1.2	100.0(163)
모 학력								
고졸 이하	41.5	30.2	1.9	0.0	26.4	0.0	0.0	100.0(53)
전문(2-3년)대 졸	36.1	25.3	13.3	15.7	8.4	1.2	0.0	100.0(83)
4년제 대졸	30.2	27.2	17.4	14.9	7.2	2.6	0.4	100.0(235)
대학원 이상	17.1	26.8	12.2	24.4	14.6	0.0	4.9	100.0(41)
모 직업								
사무/관리/전문	24.7	24.2	16.5	20.1	11.3	1.5	1.5	100.0(194)
자영/판매/영업/서비스	35.0	27.5	5.0	22.5	7.5	2.5	0.0	100.0(40)
전업주부	38.3	30.5	13.8	5.4	10.8	1.2	0.0	100.0(167)
학생/무직/기타	36.4	27.3	9.1	9.1	9.1	9.1	0.0	100.0(11)

주: ①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②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③ 육아가 힘들어서, ④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⑤ 본인(또는 배우자, 또는 둘 다)의 나이가 많아서, ⑥ 본인(또는 배우자, 또는 둘 다)의 건강이 안 좋아서, ⑦ 기타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2) 막내 자녀가 초등저학년 성인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부모에게 추가 출산 계획을 물어본 결과, 계획 있음 9.9%, 계획 없음 79.0%, 잘모르겠음 11.0%로 추가출산에 부정적인 경우가 90.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현재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계획 없음이 79.4%, 84.5%로 더 높았으나 1명인 경우도 74.2%로 높은 편이다.

표 Ⅳ-2-4 추가 출산 계획(초등 저학년 부모)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 계획 있음				입양 계획	출산 계획 없음	잘 모르겠음	계 (사례수)
	현재 임신중	1년이내 임신	2-3년 이내 임신	3년이상 경과후 임신				
전체	0.8	1.8	4.5	2.8	0.3	79.0	11.0	100.0(400)
자녀수								
1명	1.1	0.0	4.5	3.4	1.1	74.2	15.7	100.0(89)
2명	0.4	2.0	4.7	3.2	0.0	79.4	10.3	100.0(253)
3명 이상	1.7	3.4	3.4	0.0	0.0	84.5	6.9	100.0(58)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부모 중 추가 출산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가 30.6%,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11.4%, 육아가 힘들어서 10.0%, 순으로 많았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이유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하였고,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어머니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이유로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영유아 부모들과 유사하였다.

표 Ⅳ-2-5 추가 출산 불투명 이유(초등 저학년 부모)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사례수)
전체	36.1	30.6	11.4	10.0	9.7	0.6	1.7	100.0(36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사례수)
자녀수								
1명	21.3	40.0	16.3	8.8	11.3	1.3	1.3	100.0(80)
2명	34.4	30.8	11.5	11.0	10.1	0.0	2.2	100.0(227)
3명 이상	66.0	15.1	3.8	7.5	5.7	1.9	0.0	100.0(5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0	62.0	4.0	4.0	10.0	0.0	6.0	100.0(50)
300-400만원 미만	39.0	40.2	6.1	9.8	3.7	0.0	1.2	100.0(82)
400-500만원 미만	35.6	35.6	10.3	8.0	10.3	0.0	0.0	100.0(87)
500-700만원 미만	40.6	13.9	15.8	13.9	12.9	2.0	1.0	100.0(101)
700만원 이상	47.5	2.5	22.5	12.5	12.5	0.0	2.5	100.0(40)
주택 소유형태								
자가	38.0	25.2	11.6	12.0	10.4	0.8	2.0	100.0(250)
비자가	31.8	42.7	10.9	5.5	8.2	0.0	0.9	100.0(110)
모 학력								
고졸 이하	22.2	53.3	4.4	11.1	8.9	0.0	0.0	100.0(45)
전문(2-3년)대 졸	31.2	38.7	10.8	7.5	10.8	1.1	0.0	100.0(93)
4년제 대졸	41.9	22.5	12.6	10.5	9.4	0.5	2.6	100.0(191)
대학원 이상	34.5	24.1	17.2	13.8	10.3	0.0	0.0	100.0(29)
모 취업여부								
취업모	31.5	28.3	19.6	8.7	10.3	1.6	0.0	100.0(184)
비취업모	40.8	33.3	2.9	11.5	9.2	1.1	1.1	100.0(174)

주: ①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②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③ 일 · 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④ 육아가 힘들어서, ⑤ 본인(또는 배우자, 또는 둘 다)의 나이가 많아서, ⑥ 본인(또는 배우자, 또는 둘 다)의 건강이 안 좋아서,⑦ 기타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3) 기혼·비혼 무자녀 성인

기혼 무자녀 성인 및 비혼 성인을 대상으로 향후 출산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산 계획 있음 43.2%, 계획 없음 29.0%, 잘 모르겠음 27.0% 순으로 나왔었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혼 무자녀 성인들은 출산 계획 있음이 74.2%, 계획 없음이 10.3%로 출산 의향이 매우 높지는 않았다. 비혼 성인 중에서 결혼할 계획이 있는 경우(혼인희망 비혼)도 출산 계획 있음은 44.0%에 그친다. 한편 결혼 계획이 없는(독신희망) 비혼 성인 중 18.4%가 출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결혼해야 출산할 수 있다는 문화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6 향후 출산 계획(무자녀 성인)

단위: %(명)

구분	현재 임신 중	임신·출산 계획있음	입양할 계획임	출산 계획없음	잘 모르겠음	계 (사례수)
전체	2.2	41.0	0.8	29.0	27.0	100.0(500)
성인 구분						
기혼 무자녀	11.3	62.9	1.0	10.3	14.4	100.0(97)
혼인희망 비혼	0.0	44.0	0.9	22.3	32.7	100.0(327)
독신희망 비혼	0.0	0.0	0.0	81.6	18.4	100.0(76)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자녀가 없는 성인 중 출산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가 42.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17.9%, 자녀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15.4%, 육아가 힘들어 보여서 12.9%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성인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가 4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33.3%, 본인 나이가 많아서 12.5% 순으로 높았다. 결혼 계획이 있는 비혼 성인의 경우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49.4%)였으나 그 다음 이유로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16.1%) 외에 육아가 힘들어 보여서(14.4%),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10.6%)가 유사하게 많았다. 한편 결혼 계획이 없는 비혼 성인의 경우는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30.3%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표 Ⅳ-2-7 출산 불투명 이유(무자녀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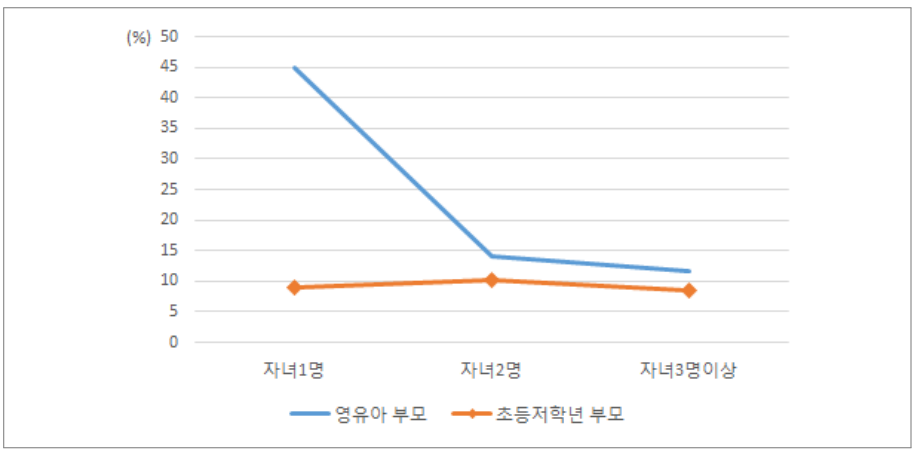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체	기혼 무자녀	혼인희망 비혼	독신희망 비혼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42.9	45.8	49.4	26.3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17.9	33.3	16.1	17.1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5.4	4.2	10.6	30.3
육아가 힘들어 보여서	12.9	0.0	14.4	13.2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	5.4	12.5	5.6	2.6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서	2.5	4.2	2.2	2.6
기타	3.2	0.0	1.7	7.9
계(사례수)	100.0(280)	100.0(24)	100.0(180)	100.0(76)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유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라 추가 출산 계획을 비교해보면, 막내 자녀가 초등저학년인 경우는 자녀수에 따라 출산계획의 차이가 없었으나, 영유아인 경우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즉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 영유아일 때 이들 가구의 특성에 맞게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이들의 추가 출산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림 Ⅳ-2-1 자녀수에 따른 추가 출산 계획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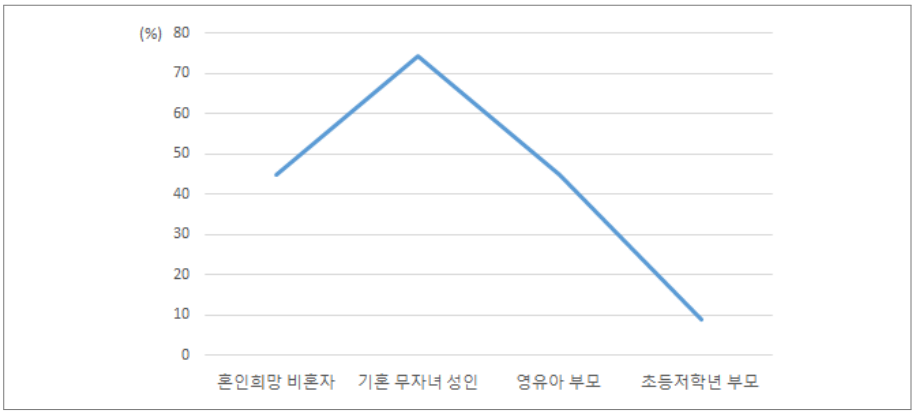


주: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다음으로 응답자의 생애주기별로 향후 출산 계획을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자녀수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혼한 성인의 경우 생애주기가 진행될수록 추가 출산 의도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결혼하였지만 자녀가 없는 성인보다 결혼계획이 있는 비혼 성인의 출산의도가 더 낮은 것으로 보아 향후 출산율 제고가 쉽지 않아 보인다.

비혼 성인, 결혼 기간 1년 미만 성인, 영유아 부모, 초등자녀 부모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면담에서도 결혼 기간 1년 미만 성인들이 계획하는 자녀수가 2~3명으로 비혼 성인(1~2명) 보다 더 많았다. 또한 영유아부모, 초등자녀 부모로 갈수록 더욱 추가 출산 계획이 없음이 확고해졌다.

그림 Ⅳ-2-2 생애주기에 따른 향후 출산 계획 비교



주: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영유아 가구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실태

본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미취학 자녀가 다니는 기관 유형 및 이용시간, 등하원 시간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 기관 유형 및 이용시간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가구의 자녀가 다니는 기관 유형을 조사하였다.

표 Ⅳ-3-1 영유아 재원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학교·영어학원	미이용	계(수)
	국립	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2.8	2.0	4.0	18.5	12.5	3.3	4.2	24.3	6.8	2.7	0.3	1.2	17.3	100.0(600)
지역 규모														
대도시	2.0	3.6	5.6	20.6	15.7	1.6	2.8	21.8	6.0	2.0	0.0	1.6	16.5	100.0(248)
중소도시	3.0	1.1	2.6	17.5	10.1	3.7	5.2	28.0	7.1	2.6	0.7	1.1	17.2	100.0(268)
읍면	4.8	0.0	3.6	15.5	10.7	7.1	4.8	20.2	8.3	4.8	0.0	0.0	20.2	100.0(84)
x^2 *(df)*	32.7(24)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학교·영어학원	미이용	계(수)
	국립	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9	1.0	2.9	12.4	12.4	3.8	3.8	21.9	8.6	1.9	1.0	1.0	27.6	100.0(105)
300-400만원 미만	2.9	1.5	2.9	14.0	13.2	5.1	2.2	24.3	4.4	2.2	0.0	1.5	25.7	100.0(136)
400-500만원 미만	0.8	3.1	4.7	21.1	12.5	2.3	7.0	18.8	10.2	2.3	0.8	0.0	16.4	100.0(128)
500-700만원 미만	3.9	2.0	4.6	22.4	17.1	3.3	3.3	27.6	4.6	2.0	0.0	0.7	8.6	100.0(152)
700만원 이상	5.1	2.5	5.1	22.8	2.5	1.3	5.1	30.4	7.6	6.3	0.0	3.8	7.6	100.0(79)
x^2 *(df)*	75.5(48)**													

** $p < .01$.

기관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 17.3%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놀이학교/영어학원 등을 다닌다. 기관을 다니는 영유아 중 어린이집은 54.1%, 유치원 27.3%이고, 소수이지만 1.2%가 놀이학교/영어학원에 다닌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이 24.3%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국공립 12.5%, 가정 6.8% 나머지는 5% 미만이다. 유치원은 사립이 18.5%, 나머지 8.8%는 국공립이다.

이를 지역규모별로 보면, 도시지역일수록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에 다니는 아동이 많고, 읍면지역일수록 미이용 아동이 많다. 어린이집의 경우, 대도시는 국공립이 많고, 중소도시는 민간, 읍면지역일수록 사회복지법인이 많다. 유치원은 도시지역일수록 사립이 많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을 다니는 아동이 많고, 반대로 소득이 적을수록 미이용 아동이 많아서 300만원 미만 가구는 27.6%에 달한다. 어린이집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유치원은 소득이 많을수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높다. 300만원 미만 12.4%에서 700만원 이상 22.8%까지 증가한다.

다음 〈표 Ⅳ-3-2〉는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의 등하원 시각을 조사한 것이다. 먼저 등원시각을 보면, 전체적으로 오전 9시에서 9시 29분 사이가 36.9%로 다빈도이다. 다음으로 오전 9시 30분에서 9시 59분이 22.0%,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59분 17.3%, 오전 8시에서 8시29분 12.9% 순이다. 10시 이후도 8.3%나 된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영아는 오전 9시에서 9시 29분 사이가 41.0%로 많고,

오전 9시 30분에서 9시 59분 20.5%, 오전 8시 30분에서 8시 59분, 오전 10시 이후, 오전 8시에서 8시 29분 사이가 각각 10% 대이다. 유아도 오전 9시에서 9시 29분 사이가 34.1%로 가장 많고, 오전 9시 30분에서 9시 59분과 오전 8시 30분에서 8시 59분 사이가 각각 23.0%, 20.3%, 오전 8시에서 8시 29분 사이가 14.2% 순이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 유형별로도 각각 오전 9시에서 9시 29분이 가장 많다. 유치원은 오전 8시 30분에서 8시 59분이 26.8%로 높으나 어린이집과 놀이학교영어학원이 오전 9시 30분에서 9시 59분으로 각각 24.6%, 28.6%로 많이 등원한다.

표 Ⅳ-3-2 재원 기관 등하원 시간 및 이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전체	자녀연령			이용기관			
		영아	유아	χ^2 (df)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학원	
등원시간								
08:00이전	2.6	3.0	2.4		3.0	2.5	0.0	
08:00-08:29	12.9	11.0	14.2		14.6	12.0	14.3	
08:30-08:59	17.3	13.0	20.3	10.9(5)	26.8	12.9	0.0	25.9(10)**
09:00-09:29	36.9	41.0	34.1		35.4	37.2	57.1	
09:30-09:59	22.0	20.5	23.0		16.5	24.6	28.6	
10:00이후	8.3	11.5	6.1		3.7	10.8	0.0	
계(수)	100.0(496)	100.0(200)	100.0(296)		100.0(164)	100.0(325)	100.0(7)	
하원시간								
14:00이전	2.8	3.0	2.7		4.3	2.2	0.0	
14:00-14:59	6.7	2.0	9.8		14.6	2.2	28.6	
15:00-15:59	21.6	24.0	19.9		21.3	21.2	42.9	
16:00-16:59	35.7	38.0	34.1	23.4(6)**	28.7	39.4	28.6	48.9(12)***
17:00-17:59	18.3	13.0	22.0		22.6	16.6	0.0	
18:00-18:59	11.9	16.0	9.1		6.1	15.1	0.0	
19:00이후	3.0	4.0	2.4		2.4	3.4	0.	
계(수)	100.0(496)	10.0(200)	100.0(296)		100.0(164)	100.0(325)	100.0(7)	
이용시간								
평균(표준편차)	435.7(99.3)	439.5(104.8)	433.1(95.5)		425.6(102.7)	442.2(97.6)	366.4(36.6)	

** $p < .01$, *** $p < .001$

한편, 하원시각은 전체적으로 오후 4시대가 35.7%로 높고, 다음으로 오후 3시대는 21.6%, 오후 5시 대는 18.3%, 오후 6시 대 11.9% 순이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는 오후 4시 대가 38.0%, 오후 3시 대 24.0%, 오후 6시

대와 오후 5시 대가 각각 16.0%, 13.0% 순이다. 유아도 오후 4시 대가 34.1%로 다빈도이고, 오후 5시 대 22.0%, 오후 3시 대 19.9%로 영아가 유아보다 늦게 하원하는 아동이 많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별로 보면, 유치원은 오후 3시, 오후 4시, 오후 5시대가 각각 20%로 이 시간대에 수렴하고, 어린이집은 오후 4시 대가 39.4%로 많고, 다음으로 오후 3시 대가 21.2%, 오후 5시 대 16.6%, 오후 6시 대 15.1%이다. 놀이학교/영어학원은 오후 3시 대에 42.9%로 절반 정도가 하원하고, 나머지는 2시와 4시 대에 각각 28.6%가 하원한다.

등원시각과 하원시간을 이용하여 이용시간을 산출하면 평균 7시간 16분 정도이다. 영유아별로는 영아는 7시간 20분 정도이고, 유아는 7시간 13분으로 영아가 조금 더 길다. 이용기관 별로는 어린이집 7시간 22분, 유치원이 7시간 6분, 놀이학교영어학원이 6시간 6분 순이다.

영유아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놀이학교/영어학원 등을 다니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기관을 보내기에 아직 어려서가 60.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부모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14.4%, 주변에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어서 12.5%, 비용 부담이 5.8% 순이다.

표 Ⅳ-3-3 기관 비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기관을 보내기에 아직 어려서	60.6
부모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14.4
주변에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어서	12.5
비용이 부담되어서	5.8
기타	6.7
계(사례수)	100.0(104)

나. 비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또는 놀이학교/영어학원 등 일일 4~5시간 이상의 반일제 기관을 다니는 경우, 특별활동프로그램 및 방과후특성화활동 비용을 제외한 수업료, 행사비, 차량비 등의 수익자 부담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조사하였다.

〈표 Ⅳ-3-4〉와 같이, 기관에 비용을 내는 경우는 73.6%이고, 이 경우 월 평균 56,429원이다. 기관에 비용을 내는 경우, 자녀 연령이 유아이거나 놀이학교/영어학원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낸다는 비율이 높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내는 비용은 유아가 83,434원이고 영아가 16,463원으로 유아가 월등히 많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증가하여 300만원 미만은 46,118원 정도이나, 700만원 이상은 64,575원이다. 이용 기관별로는 놀이학교/영어학원이 187,143원, 유치원 96,200원, 어린이집 33,545원이다.

표 Ⅳ-3-4 재원 기관 이용비용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비용

단위: %(명), 원

구분	기관 이용비용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비용			
	안냄	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안냄	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6.4	73.6	100.0(496)	56,429(78,938)	8.9	91.1	100.0(496)	65,939(64,596)
응답자 구분								
영아 부모	49.5	50.5	100.0(200)	16,463(23,316)	8.5	91.5	100.0(200)	44,994(37,847)
유아 부모	10.8	90.2	100.0(296)	83,434(90,963)	9.1	90.9	100.0(296)	80,091(74,41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2.9	67.1	100.0(76)	46,118(69,519)	14.5	85.5	100.0(76)	57,487(59,249)
300-400만원 미만	33.7	66.3	100.0(101)	47,500(62,696)	10.9	80.1	100.0(101)	62,272(58,772)
400-500만원 미만	26.2	73.8	100.0(107)	59,704(88,945)	3.7	96.3	100.0(107)	67,007(58,412)
500-700만원 미만	20.1	80.9	100.0(139)	61,757(82,107)	9.4	90.6	100.0(139)	70,941(73,444)
700만원 이상	21.9	79.1	100.0(73)	64,575(86,113)	6.8	93.2	100.0(73)	68,722(68,695)
이용기관								
유치원	7.9	92.1	100.0(164)	96,200(93,572)	11.0	89.0	100.0(164)	77,475(72,365)
어린이집	36.3	63.7	100.0(325)	33,545(49,985)	8.0	92.0	100.0(325)	58,307(53,893)
영어학원	0.0	100.0	100.0(7)	187,143(223,063)	0.0	100.0	100.0(7)	150,000(173,494)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활동비)의 경우, 91.1%가 비용을 내고 소수만 내지 않는다. 영유아 모두 90% 이상이 비용을 내며, 놀이학교/영어학원은 100%, 어린이집 92.0%, 유치원 89.0%가 비용을 내며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경향성이 일정하지 않지만 4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가구가 그 이하보다 낸다는 비율이 높다.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활동비)을 내는 경우 아동 1인당 월평균 65,939원을 낸다. 유아가 80,091원, 영아 44,994원으로 유아가 내는 비용이 많다. 이용기관별로는 놀이학교영어학원이 150,000원, 유치원 77,475원, 어린이집 58,307원 순이다.

다. 만족도

〈표 Ⅳ-3-5〉는 영유아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원장, 교사, 급간식, 환경, 교육과정, 비용, 교통 등 7가지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기관 만족도는 교통이 7점 만점에 평균 5.3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사 평균 5.29점, 교육과정 평균 5.17점, 원장 평균 5.10점, 환경 평균 5.06점 순이다. 비용이 4.52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 유형별 만족도를 보면, 유치원은 교통이 7점 만점에 평균 5.37점으로 가장 높고, 교육과정 평균 5.21점, 교사 평균 5.18점, 환경 평균 5.15점, 원장 평균 5.09점 순이며 나머지는 5점 이하다. 어린이집은 교사가 7점 만점에 평균 5.3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 평균 5.28점, 교육과정 평균 5.14점, 급간식과 환경이 각각 평균 5.01점, 나머지는 5점 미만이다. 마지막으로 놀이학교/영어학원은 교사, 환경, 교육과정이 각각 7점 만점에 평균 5.57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다음으로 원장 평균 5.29점, 급간식 평균 5.14점 순이다.

표 Ⅳ-3-5 재원 기관 만족도 개요

단위: 점, (명)

구분	원장	교사	급간식	환경	교육과정	비용	교통	(수)
전체	5.10	5.29	4.98	5.06	5.17	4.52	5.30	(496)
유치원	5.09	5.18	4.91	5.15	5.21	4.49	5.37	(164)
어린이집	5.11	5.34	5.01	5.01	5.14	4.54	5.28	(325)
영어학원	5.29	5.57	5.14	5.57	5.57	4.57	4.86	(7)

주: 점수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1점)'~'매우 만족한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4 초등학교 저학년 가구 초등학교 이용 실태

본 절은 초등저학년 자녀의 등하교 시간과 재학시간, 방과후교실 및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가. 등하교 시간 및 재학시간

초등학생의 등원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8시 59분 사이가 55.3%로 절반을

차지하고, 오전 8시에서 8시 29분이 32.5%, 나머지는 10% 미만으로 오전 8시대에 대부분이 등원한다. 지역규모별로도 오전 8시 30분에서 8시 59분 사이에 절반 정도가 하원하나, 읍면지역은 30분 이른 오전 8시에서 8시 29분이 40.4%로 많고, 도시지역일수록 오전 8시 이전이 많다.

하교시간은 오후 1시 대가 39.8%, 오후 2시 대가 37.8%로 1시에서 3시 사이에 대부분이 하원한다. 오후 3시 대도 12.8%로 많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오후 1시대가 42.0%로 다빈도이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1시간 늦은 오후 2시대가 각각 44.2%, 40.4%로 많다.

등하원 시간으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산출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5시간 17분이다. 재학시간은 대도시 5시간 14분, 중소도시 5시간 15분, 읍면지역 5시간 35분으로 읍면지역일수록 길어진다.

표 Ⅳ-4-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및 재학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전체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x^2 (df)
등교시간					
08:00이전	2.8	3.1	2.8	1.8	7.6(6)
08:00-08:29	32.5	37.0	26.0	40.4	
08:30-08:59	55.3	52.5	59.7	49.1	
09:00이후	9.5	7.4	11.6	8.8	
계(수)	100.0(400)	100.0(162)	100.0(181)	10.0(57)	
하교시간					
13:00이전	9.8	14.2	8.3	1.8	16.5(6)*
13:00-13:59	39.8	42.0	38.1	38.6	
14:00-14:59	37.8	29.6	44.2	40.4	
15:00-15:59	12.8	14.2	9.4	19.3	
계(수)	100.0(400)	100.0(162)	100.0(181)	100.0(57)	
재학시간					
평균(표준편차)	317.2(53.5)	313.6(53.0)	314.8(53.5)	334.6(52.2)	3.6(2)*

* $p < .05$

나.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현황

1)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중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비율을 제 특성별로 알아보았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중 33.5%가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한다. 읍면지역이 40.4%로 도시지역보다 이용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나 소득이 많을수록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서 300~400만원 미만은 23.0%이나 700만원 이상은 41.9%에 달한다. 모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이 41.2%로 높고 고졸 이하가 18.4%로 낮다. 모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종이 50.3%로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자영/판매/영업/서비스가 40.4%, 학생/무직/기타도 31.8%로 어머니가 일이나 학업 등을 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4-2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	미이용	계(수)	x^2 (df)
전체	33.5	66.5	100.0(400)	
지역 규모				
대도시	35.2	64.8	100.0(162)	
중소도시	29.8	70.2	100.0(181)	2.5(2)
읍면	40.4	59.6	100.0(57)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5.0	65.0	100.0(60)	
300-400만원 미만	23.0	77.0	100.0(87)	
400-500만원 미만	34.7	65.3	100.0(95)	6.3(4)
500-700만원 미만	36.5	63.5	100.0(115)	
700만원 이상	41.9	58.1	100.0(43)	
모 학력				
고졸 이하	18.4	81.6	100.0(49)	
전문(2-3년)대 졸	41.2	58.8	100.0(102)	7.9(3)*
4년제 대졸	32.6	67.4	100.0(215)	
대학원 이상	34.4	65.6	100.0(32)	
모 직업				
사무/관리/전문	50.3	49.7	100.0(153)	
자영/판매/영업/서비스	40.4	59.6	100.0(57)	46.2(3)***
전업주부	15.1	84.9	100.0(166)	
학생/무직/기타	31.8	68.2	100.0(22)	

* $p < .05$, *** $p < .001$.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방과후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조사하였다.

방과후돌봄교실 시작시간은 오후 2시 대가 44.8%로 많고, 다음으로 오후 1시대 32.8%, 오후 3시 대 13.4%, 오후 1시 이전 9.0% 순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은 오후 2시대, 읍면지역은 오후 1시대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읍면지역일수록 1시대, 도시지역일수록 1시 이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오후 3시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도 읍면지역은 26.1%로 높다.

종료시간은 오후 4시대가 34.3%, 오후 3시대 29.1%, 오후 5시대와 오후 3시대가 각각 10.4%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오후 4시대에 종료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소도시는 오후 3시 대가 다빈도이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시간을 산출하면, 평균 2시간 35분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3시간 6분으로 가장 길고, 읍면지역 2시간 19분, 중소도시 2시간 9분 순이다.

표 Ⅳ-4-3 방과후 돌봄교실 시작·종료시간 및 이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전체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x^2 (df)
시작시간					
13:00이전	9.0	15.8	5.6	0.0	16.7(6)*
13:00-13:59	32.8	29.8	33.3	39.1	
14:00-14:59	44.8	36.8	57.4	34.8	
15:00이후	13.4	17.5	3.7	26.1	
계(수)	100.0(134)	100.0(57)	100.0(54)	100.0(23)	
종료시간					
15:00이전	10.4	5.3	14.8	13.0	17.9(10)
15:00-15:59	29.1	22.8	38.9	21.7	
16:00-16:59	34.3	33.3	29.6	47.8	
17:00-17:59	10.4	14.0	11.1	0.0	
18:00-18:59	8.2	12.3	1.9	13.0	
19:00이후	7.5	12.3	3.7	4.3	
계(수)	100.0(134)	100.0(57)	10.0(54)	100.0(23)	
이용시간					
평균(표준편차)	154.9(92.2)	185.9(110.2)	128.9(69.0)	138.7(67,4)	6.2(2)**

* $p < .05$, ** $p < .01$.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방과후 돌봄교실 우선 대상이 아니라서가 42.5%로 다빈도이고, 다음으로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18.4%,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3.9%,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서 8.3%, 나머지는 5% 내외이다.

가구소득별로는 700만원 미만 까지 방과후 돌봄교실이 우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가 다수를 차지한다. 300만원 미만은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가 28.2%로 높지만, 500~700만원 미만은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19.2%이다.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가 24.0%로 높고, 기타 이유도 12.0%로 높다.

표 Ⅳ-4-4 방과후 돌봄교실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가구소득				
		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700 만원 미만	700 만원 이상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아서	5.6	7.7	4.5	9.7	2.7	4.0
방과후 돌봄교실 우선대상이 아니어서	42.5	41.0	53.7	48.4	35.6	20.0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18.4	28.2	17.9	12.9	16.4	24.0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3.9	5.1	11.9	12.9	19.2	20.0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0.8	0.0	0.0	0.0	1.4	4.0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1	5.1	0.0	0.0	1.4	0.0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서	8.3	5.1	6.0	6.5	12.3	12.0
비용이 부담되어서	3.0	7.7	1.5	3.2	1.4	4.0
기타	6.4	0.0	4.5	6.5	9.6	12.0
계(수)	100.0(266)	100.0(39)	100.0(67)	100.0(62)	100.0(73)	100.0(25)
χ^2 *(df)*		42.8(32)				

〈표 Ⅳ-4-5〉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돌봐주는 성인을 조사한 것이다.

표 Ⅳ-4-5 방과후 자녀 돌봄 성인

단위: %(명)

구분	엄마	조부모	아빠	베이비 시터 (사설)	아이 돌보미	없음	기타	계(수)	χ^2 (df)
전체	69.5	13.5	2.6	1.5	0.4	9.0	3.4	100.0(266)	
지역 규모									
대도시	70.5	19.0	0.0	1.9	0.0	6.7	1.9	100.0(105)	
중소도시	66.1	12.6	3.9	1.6	0.8	11.0	3.9	100.0(127)	17.0(12)
읍면	79.4	0.0	5.9	0.0	0.0	8.8	5.9	100.0(3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4.4	5.1	5.1	0.0	0.0	12.8	2.6	100.0(39)	
300-400만원 미만	92.5	3.0	1.5	0.0	0.0	1.5	1.5	100.0(67)	
400-500만원 미만	59.7	8.1	4.8	1.6	0.0	17.7	8.1	100.0(62)	63.5(24)***
500-700만원 미만	60.3	27.4	0.0	1.4	1.4	8.2	1.4	100.0(73)	
700만원 이상	52.0	28.0	4.0	8.0	0.0	4.0	4.0	100.0(25)	
모 직업									
사무/관리/전문	31.6	36.8	2.6	3.9	1.3	18.4	5.3	100.0(76)	
자영/판매/영업/서비스	50.0	17.6	8.8	2.9	0.0	14.7	5.9	100.0(36)	120.1(18)***
전업주부	94.3	1.4	0.0	0.0	0.0	2.8	1.4	100.0(141)	
학생/무직/기타	73.3	0.0	13.3	0.0	0.0	6.7	6.7	100.0(15)	

*** $p < .001$.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으로 엄마가 69.5%로 다수를 차지한다. 조부모도 13.5%, 아빠 2.6%, 베이비 시터 1.5%, 기타 3.4% 순이다. 없는 경우도 9.0%로 많다.

지역규모별로도 엄마가 다빈도이나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이 더 높다. 조부모는 대도시가 19.0%, 중소도시 12.6%로 높다. 없다는 비율은 중소도시가 11.0%로 읍면지역 8.8%, 대도시 6.7%보다 높다.

가구소득별로도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나,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다.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대는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 모 직업에 따라서는 전업주부는 엄마가 돌본다는 비율이 94.3%로 높다. 사무/관리/전문직은 조부모가 36.8%로 높다.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사무/관리/전문직이나 자영/판매/영업/서비스가 10~20%로 높다.

2) 비용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내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비용을 안 낸다는 비율은 20.1%이고 나머지는 아동 1인당 월평균 55,436원을 낸다. 구간별로는 1~5만원이 34.3%로 다수를 차지하고, 5~10만원 20.1%, 10~15만원 12.7%, 15만원 이상 12.7% 순이다.

표 Ⅳ-4-6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비용

단위: %(명), 원

구분	안냄	1-5 만원 미만	5-10 만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 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20.1	34.3	20.1	12.7	12.7	100.0(134)	55,436(56,509)	
지역 규모								
대도시	15.8	42.1	17.5	15.8	8.8	100.0(57)	52,702(52,071)	
중소도시	18.5	31.5	20.4	13.0	16.7	100.0(54)	62,396(62,146)	.8
읍면	34.8	21.7	26.1	4.3	13.0	100.0(23)	45,870(53,527)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3.8	33.3	14.3	14.3	14.3	100.0(21)	55,571(57,514)	
300-400만원 미만	30.0	30.0	20.0	5.0	15.0	100.0(20)	47,950(58,218)	
400-500만원 미만	15.2	48.5	15.2	12.1	9.1	100.0(33)	50,436(52,444)	1.2
500-700만원 미만	19.0	38.1	21.4	9.5	11.9	100.0(42)	51,548(53,778)	
700만원 이상	16.7	5.6	33.3	27.8	16.7	100.0(18)	81,833(65,282)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비용을 안내는 경우가 많다. 도시지역일수록 1~5만원과 10~15만원, 읍면지역일수록 5~10만원을 내는 비율이 높다. 내는 비용은 중소도시가 아동 1인당 월평균 62,396원으로 가장 많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400만원 미만이 20~30% 대로 높다. 비용을 내는 경우는 700만원 이상은 5~10만원 미만과 10~15만원 미만이 각각 20~30% 사이로 높다. 내는 비용은 700만원 이상이 월평균 81,833원으로 가장 많다.

3) 만족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도를 교사, 급간식, 환경, 프로그램, 비용, 운영시간 6가지 분야로 알아보았다.

교사가 7점 척도로 평균 5.1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평균 5.06점, 환경 평균 5.04점, 비용 평균 5.00점 순이다. 급간식과 운영시간이 5점 미만으로 낮다.

지역규모별로는 비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읍면지역이 평균 5.70점, 중소도시 평균 5.04점, 대도시 평균 4.68점 순이다. 가구소득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모 학력별로 보면, 비용과 운영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비용은 학력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고졸 이하는 평균 6.22점이고, 대학원 이상은 평균 4.36점이다. 운영시간도 학력에 반비례하여 고졸 이하는 평균 5.67점인데 반해 대학원 이상은 평균 4.00점으로 낮다. 모 직업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표 Ⅳ-4-7 방과후 돌봄교실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교사	급간식	환경	프로그램	비용	운영시간	수
전체	5.17	4.97	5.04	5.06	5.00	4.91	(134)
지역 규모							
대도시	4.91	4.72	4.88	5.04	4.68	4.82	(57)
중소도시	5.26	5.24	5.17	5.06	5.04	4.89	(54)
읍면	5.61	4.96	5.17	5.13	5.70	5.17	(23)
F	2.6	2.4	1.1	.1	3.9*	.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19	4.86	5.24	4.95	4.62	5.24	(21)
300-400만원 미만	4.90	5.00	5.05	4.95	4.90	4.70	(20)
400-500만원 미만	4.94	4.70	4.70	4.94	4.85	4.73	(33)
500-700만원 미만	5.29	5.24	5.19	5.24	5.26	4.98	(42)
700만원 이상	5.61	4.94	5.11	5.11	5.22	4.94	(18)
F	1.1	.9	1.1	.5	.8	.6	
모 학력							
고졸 이하	6.22	5.44	5.67	5.89	6.22	5.67	(9)
전문(2-3년)대 졸	5.07	5.05	5.17	5.07	5.00	5.07	(42)
4년제 대졸	5.11	4.91	4.87	4.93	4.91	4.84	(70)
대학원 이상	4.91	4.55	5.00	5.00	4.36	4.00	(11)
F	2.2	.9	1.6	2.3	2.8*	3.0*	

구분	교사	급간식	환경	프로그램	비용	운영시간	수
모 직업							
사무/관리/전문	5.16	4.96	4.99	5.03	5.09	4.82	(77)
자영/판매/영업/서비스	4.96	4.96	4.96	5.04	4.74	4.91	(23)
전업주부	5.24	4.92	5.12	5.04	5.04	5.04	(25)
학생/무직/기타	5.57	5.14	5.43	5.29	4.43	5.29	(7)
F	.4	.1	.4	.1	.6	.4	

주: 점수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1점)'~'매우 만족한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4) 초등 저학년 돌봄정책 관련 의견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참여의 온종일 돌봄정책"의 저해요인을 조사하였다. 부모의 퇴근시간이 돌봄기관 운영시간과 맞지 않아서가 32.3%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18.3%, 하교 후 학원 이용 15.8%, 하교 후 지역사회 내 돌봄기관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안전문제 15.0% 순이다. 나머지는 10% 미만이다. 지역규모별로도 부모의 퇴근시간과 돌봄기관의 운영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다빈도이고, 읍면지역일수록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도시 지역일수록 하교 후 지역사회 내 돌봄기관으로 이동 시 안전문제를 저해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Ⅳ-4-8 온종일 돌봄정책 저해요인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부모의 늦은 퇴근시간(돌봄기관 운영시간과 맞지 않음)	32.3	35.2	28.2	36.8
지역사회 인프라(주민센터, 도서관 등) 부족	18.3	15.4	18.8	24.6
실제 이용 아동이 적어서(자녀는 하교 후 집에 가기를 원함)	9.8	9.9	9.4	10.5
하교 후 지역사회 내 돌봄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안전문제	15.0	17.9	15.5	5.3
하교 후 지역사회 내 돌봄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불편함	8.0	7.4	9.9	3.5
하교 후 주로 학원(사교육)을 가야 해서	15.8	13.0	18.2	15.8
기타	1.0	1.2	0.0	3.5
계(수)	100.0(400)	100.0(162)	100.0(181)	100.0(57)
x^2 *(df)*		17.7(12)		

〈표 Ⅳ-4-9〉는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표 Ⅳ-4-9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 의견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기타	계(수)	x^2 (df)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사교육을 줄일 수 있어서	아이가 힘들 수 있어서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			
전체	36.5	15.3	38.8	6.8	2.8	100.0(4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8.3	18.3	55.0	6.7	1.7	100.0(60)	
300-400만원 미만	35.6	12.6	41.4	6.9	3.4	100.0(87)	
400-500만원 미만	42.1	12.6	34.7	6.3	4.2	100.0(95)	20.5(16)
500-700만원 미만	38.3	16.5	35.7	8.7	0.9	100.0(115)	
700만원 이상	46.5	18.6	27.9	2.3	4.7	100.0(43)	
모 학력							
고졸 이하	24.5	20.4	49.0	6.1	0.0	100.0(49)	
전문(2-3년)대 졸	44.1	9.8	36.3	8.8	1.0	100.0(102)	22.4(12)*
4년제 대졸	34.9	18.6	37.2	5.1	4.2	100.0(215)	
대학원 이상	43.8	0.0	40.6	12.5	3.1	100.0(32)	
모 직업							
사무/관리/전문	45.8	11.1	34.0	6.5	2.6	100.0(153)	
자영/판매/영업/서비스	36.8	14.0	42.1	3.5	3.5	100.0(57)	14.9()
전업주부	27.7	18.7	43.4	7.8	2.4	100.0(166)	
학생/무직/기타	40.9	18.2	27.3	9.1	4.5	100.0(22)	

* $p < .05$.

찬성이 51.8%, 반대가 45.6%로 찬성이 다소 우세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일가정 양립 36.5%, 사교육 경감 15.3%를 꼽았고, 반대하는 경우는 아이가 힘들어서(38.8%)를 주로 꼽았다.

이를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으나 학력이나 모 직업과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찬성 이유로 일·가정양립은 700만원 이상 가구와 모 학력이 전문대졸이거나 모 직업이 사무/관리/전문직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5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생 가구 사교육 실태

본 절에서는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의 사교육 이용 현황과 사교육비의 가구 부담 정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하였다.

1) 사교육 참여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 중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는 29.9%로 1/3을 차지한다. 참여 시 개수는 평균 1.5개이다. 참여하지 사교육에 참여하는 가구 중 1개는 25.3%, 2개는 27.1%, 3개 11.2%, 4개 이상 6.5% 순이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영아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0.0%로 과반수 이상이다. 참여 시 개수는 1개 미만이다. 유아는 미참여 비율이 27.7%로 영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참여 시 개수는 평균 1.4개로 늘어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미참여 비율이 9.0%로 대부분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참여 시 개수는 평균 2개가 넘는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참여한다는 비율이 높고, 개수도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도시지역이 많다. 가구소득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높고, 참여 시 개수도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300만원 미만은 1.1개 정도이나 700만원 이상은 1.74개로 늘어난다. 모 학력별로도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학력이 낮을수록 참여한다는 비율이 높다. 모 직업별로는 직종에 상관없이 일하는 경우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교육 개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Ⅳ-5-1 사교육 수

단위: %(명), 개

구분	사교육 안함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29.9	25.3	27.1	11.2	6.5	100.0(1,000)	1.45(1.40)	
응답자 구분								
영아 부모	60.0	20.7	13.0	5.3	1.0	100.0(300)	0.68(1.04)	
유아 부모	27.7	33.3	23.7	10.0	5.3	100.0(300)	1.36(1.30)	106.5***
초등 저학년 부모	9.0	22.8	40.3	16.5	11.5	100.0(400)	2.09(1.39)	

구분	사교육 안함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지역 규모								
대도시	27.8	24.6	29.3	11.7	6.6	100.0(410)	1.52(1.44)	
중소도시	31.0	26.1	23.4	11.8	7.8	100.0(449)	1.45(1.42)	2.0
읍면	32.6	24.8	32.6	7.8	2.1	100.0(141)	1.25(1.1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3.6	23.6	18.8	8.5	5.5	100.0(165)	1.14(1.42)	
300-400만원 미만	36.3	22.0	25.6	12.6	3.6	100.0(223)	1.29(1.31)	
400-500만원 미만	28.7	24.7	26.9	10.8	9.0	100.0(223)	1.56(1.54)	4.8**
500-700만원 미만	18.7	30.7	33.3	12.4	4.9	100.0(267)	1.55(1.11)	
700만원 이상	26.2	23.0	27.9	10.7	12.3	100.0(122)	1.74(1.69)	
모 학력								
고졸 이하	27.0	28.7	31.3	11.3	1.7	100.0(115)	1.32(1.05)	
전문(2-3년)대 졸	31.6	26.0	26.8	9.5	6.1	100.0(231)	1.37(1.31)	1.1
4년제 대졸	28.1	25.4	26.9	12.4	7.2	100.0(558)	1.52(1.44)	
대학원 이상	40.4	18.1	24.5	8.5	8.5	100.0(94)	1.37(1.67)	
모 직업								
사무/관리/전문	27.4	26.3	27.9	10.9	7.5	100.0(441)	1.51(1.43)	
자영/판매/영업/서비스	22.8	27.2	30.7	14.0	5.3	100.0(114)	1.54(1.21)	1.2
전업주부	34.3	24.1	24.6	11.2	5.7	100.0(402)	1.36(1.42)	
학생/무직/기타	34.1	19.5	34.1	7.3	4.9	100.0(41)	1.29(1.17)	

** $p < .01$, *** $p < .001$.

2) 사교육 비용

〈표 Ⅳ-5-2〉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조사한 것이다. 월평균 10~20만원과 20~30만원이 각각 24.4%, 23.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50만원 16.5%, 50만원 이상 13.7%, 5~10만원 12.8%, 5만원 미만 9.4% 순이다. 월평균 비용은 235,487원이다.

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 비용을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자녀 연령이나 가구소득, 모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닐수록 사교육 비용이 유의미하게 높아서 영아는 169,544원에서 유아 200,228원, 초등학교 저학년 278,246원으로 늘어난다.

표 Ⅳ-5-2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명), 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9.4	12.8	24.4	23.1	16.5	13.7	100.0(701)	235,487(210,258)	
응답자 구분									
영아 부모	16.7	17.5	28.3	20.0	10.0	7.5	100.0(120)	169,544(156,143)	
유아 부모	10.1	12.4	30.4	24.9	12.9	9.2	100.0(217)	200,228(171,715)	17.2***
초등 저학년 부모	6.6	11.5	19.5	23.1	20.9	18.4	100.0(364)	278,246(236,006)	
지역규모									
대도시	10.8	12.8	22.0	22.6	16.2	15.5	100.0(296)	239,661(215,639)	
중소도시	7.7	13.2	26.1	22.6	15.8	14.5	100.0(310)	241,987(219,173)	1.5
읍면	10.5	11.6	26.3	26.3	20.0	5.3	100.0(95)	201,268(154,9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2.9	17.2	29.0	20.4	9.7	10.8	100.0(93)	197,620(205,538)	
300-400만원 미만	7.0	14.1	28.2	23.9	19.0	7.7	100.0(142)	207,746(155,257)	
400-500만원 미만	8.8	11.3	18.2	28.3	17.0	16.4	100.0(159)	254,247(202,317)	4.2**
500-700만원 미만	10.6	12.4	24.0	22.1	16.6	14.3	100.0(217)	227,728(181,764)	
700만원 이상	7.8	10.0	25.6	17.8	18.9	20.0	100.0(90)	303,947(323,666)	
모 학력									
고졸 이하	8.3	7.1	31.0	29.8	19.0	4.8	100.0(84)	205,202(143,111)	
전문(2-3년)대 졸	13.9	15.2	23.4	19.6	15.2	12.7	100.0(158)	212,967(191,266)	2.8*
4년제 대졸	8.0	13.2	24.4	22.7	16.2	15.5	100.0(401)	240,949(201,651)	
대학원 이상	8.9	12.5	16.1	26.8	19.6	16.1	100.0(56)	293,570(338,008)	
모 직업									
사무/관리/전문	9.7	10.9	22.2	24.4	15.3	17.5	100.0(320)	254,160(233,119)	
자영/판매/영업/서비스	12.5	11.4	21.6	20.5	19.3	14.8	100.0(88)	227,841(181,207)	1.8
전업주부	9.1	15.9	27.7	20.5	17.8	9.1	100.0(264)	214,573(190,420)	
학생/무직/기타	0.0	11.1	25.9	44.4	11.1	7.4	100.0(27)	219,173(121,233)	

* $p < .05$, ** $p < .01$, *** $p < .001$.

가구소득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300만원 미만이 20만원 미만 수준이고, 700만원 이상은 30만원대로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모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높아서 고졸 이하는 20만원 정도이나 대학원 이상은 30만원에 육박한다.

2) 사교육비 부담정도

사교육 비용의 가구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부담된다는 비율은 73.6%이고, 부담 정도를 7점 척도로 산출하면 평균 5.16점이다.

표 Ⅳ-5-3 사교육비의 가구 경제 부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					→	매우 부담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2.4	3.4	4.1	16.4	31.4	23.7		18.5	100.0(701)	5.16(1.41)	
응답자 구분											
영아 부모	5.8	5.0	7.5	18.3	27.5	16.7		19.2	100.0(120)	4.83(1.67)	
유아 부모	1.8	5.1	3.7	22.6	33.2	19.4		14.3	100.0(217)	4.95(1.38)	10.8***
초등 저학년 부모	1.6	1.9	3.3	12.1	31.6	28.6		20.9	100.0(364)	5.39(1.2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2	2.2	3.2	11.8	29.0	21.5		30.1	100.0(93)	5.48(1.41)	
300-400만원 미만	0.7	4.9	4.9	20.4	31.0	20.4		17.6	100.0(142)	5.08(1.37)	
400-500만원 미만	1.9	3.8	2.5	12.6	32.1	29.6		17.6	100.0(159)	5.28(1.34)	2.5*
500-700만원 미만	2.3	2.8	5.1	18.4	32.7	22.6		16.1	100.0(217)	5.09(1.37)	
700만원 이상	6.7	3.3	4.4	16.7	30.0	23.3		15.6	100.0(90)	4.92(1.61)	
모 학력											
고졸 이하	2.4	3.6	4.8	9.5	31.0	23.8		25.0	100.0(84)	5.35(1.46)	
전문(2-3년)대 졸	1.9	4.4	2.5	17.1	29.1	24.1		20.9	100.0(158)	5.23(1.42)	1.9
4년제 대졸	2.0	3.0	4.2	17.2	32.4	24.2		17.0	100.0(401)	5.15(1.35)	
대학원 이상	7.1	3.6	5.4	19.6	30.4	19.6		14.3	100.0(56)	4.79(1.63)	
모 직업											
사무/관리/전문	2.8	2.2	4.1	17.8	31.6	23.8		17.8	100.0(320)	5.16(1.39)	
자영/판매/영업/서비스	1.1	4.5	3.4	12.5	36.4	20.5		21.6	100.0(88)	5.26(1.37)	.2
전업주부	2.7	4.5	3.8	16.7	28.4	25.4		18.6	100.0(264)	5.14(1.46)	
학생/무직/기타	0.0	3.7	7.4	11.1	40.7	18.5		18.5	100.0(27)	5.19(1.30)	

주: 점수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1점)'~'매우 부담된다(7점)'로 평정하여 산출한 것임.
* $p < .05$, *** $p < .001$.

사교육비 부담 정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 연령이나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초등 저학년 부모들의 부담정도가 유의미하게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경향성이 일정하지 않지만 300만원 미만은 부담 정도가 7점 척도로 평균 5.48점으로 높고, 700만원 이상은 4.92점으로 낮다.

3) 사교육 관련 정책 의견

〈표 Ⅳ-5-4〉는 2018년 상반기에 논란을 일으켰던 유아 영어교육 금지 관련 의견을 알아본 것이다. 유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다. 반대하는 이유는 영어학원 이용 등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이유가 34.7%, 외국어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가 25.0%로 높다. 금지를 찬성 이유로는 모국어 습득이 더 중요하므로 27.3%, 영어교육 효과가 없어서가 11.8% 정도이었다.

표 Ⅳ-5-4 초등 저학년 이하 유아 영어교육 금지 의견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기타	계(수)	x^2 (df)
	영어교육은 효과가 없음	모국어(한글) 습득이 더 중요	사교육 참여로 사교육비가 증가	외국어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학습			
전체	11.8	27.3	34.7	25.0	1.2	100.0(1,000)	
응답자 구분							
영아 부모	12.7	27.7	32.0	27.0	0.7	100.0(300)	
유아 부모	11.0	27.3	35.0	24.7	2.0	100.0(300)	4.6(8)
초등 저학년 부모	11.8	27.0	36.5	23.8	1.0	100.0(400)	
지역 규모							
대도시	11.7	27.6	35.4	24.4	1.0	100.0(410)	
중소도시	10.0	27.2	35.2	26.3	1.3	100.0(449)	7.0(8)
읍면	17.7	27.0	31.2	22.7	1.4	100.0(14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2.7	30.9	29.7	26.1	0.6	100.0(165)	
300-400만원 미만	12.1	28.3	33.2	25.6	0.9	100.0(223)	
400-500만원 미만	12.1	26.9	33.6	26.5	0.9	100.0(223)	23.8(16)
500-700만원 미만	12.4	26.2	41.2	19.5	0.7	100.0(267)	
700만원 이상	8.2	23.8	32.0	32.0	4.1	100.0(122)	
모 학력							
고졸 이하	11.3	31.3	36.5	20.0	0.9	100.0(115)	
전문(2-3년)대졸	12.6	26.8	33.8	26.4	0.4	100.0(231)	5.8(12)
4년제 대졸	12.0	26.2	34.8	25.4	1.6	100.0(558)	
대학원 이상	8.5	29.8	35.1	25.5	1.1	100.0(94)	
모 직업							
사무/관리/전문	10.0	27.4	37.2	24.0	1.4	100.0(441)	
자영/판매/영업/서비스	18.4	21.1	32.5	26.3	1.8	100.0(114)	20.3(12)
전업주부	12.4	27.6	33.8	25.6	0.5	100.0(402)	
학생/무직/기타	4.9	39.0	24.4	26.8	4.9	100.0(41)	

유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의견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아도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자녀연령별로는 초등 저학년 자녀일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높고, 이유로는 사교육 참여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이유가 우세하다.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반대 의견이 많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모 학력이 높을수록, 모가 사무/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이유도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6 소결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해결 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정책수요자들의 진단이 다르게 나타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보다 사회적인 요인들(불안정한 고용,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 젠더 불평등)을, 국민들은 보다 경제적인 요인들(낮은 임금, 높은 물가)을 더 크게 보고 있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요인으로도 국민들은 사회적 요인들보다 비싼 주거비, 높은 양육비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자녀가 없는 경우 주거 문제 해결을 더 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비와 일·육아 병행 문제 해결을, 남성은 양육비 문제를 여성은 일·육아 병행 문제 해결을 더 시급하다고 보았다.

둘째, 결혼과 출산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경제적 기반 마련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며 이는 경제적 여건(소득, 주택소유 여부)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비혼 성인은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기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결혼 계획이 있는 경우도 소득이 300~500만원인 경우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추가 출산 의도는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1명이면서 영유아일 때 높았으며 생애주기가 진행될수록 출산의도는 하락하였다.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이유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하였고,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어머니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이유로 선택하였다.

셋째, 영유아 중 17.3%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놀이학교/영어학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로 기관을 보내기에 아직 어려서가 60.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부모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14.4%, 주변에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 없어서 12.5%, 비용 부담이 5.8% 순이었다. 기관 미이용 가구의 주양육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영아의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중 92.0%가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가 특별활동 참여 시 연령을 만 2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만 1세는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 대상 및 인프라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돌봄교실 미이용 이유로 방과후 돌봄교실 우선 대상이 아니라서가 42.5%로 다빈도이고, 다음으로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18.4%,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3.9%,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서 8.3%, 나머지는 5% 정도이었다. 또한 온종일 돌봄정책 저해 요인으로 부모의 퇴근시간이 돌봄기관 운영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32.3%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18.3%, 하교 후 학원 이용 15.8%, 하교 후 지역사회 내 돌봄기관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안전문제 15.0% 순이었다. 방과후 돌봄교실은 돌봄서비스가 필요가 초등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방과후 돌봄교실이 특성화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방과후돌봄교실 비용을 안낸다는 비율은 20.1%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비용을 내는 경우도 월평균 5만원 정도이고 15만원 이상도 12.7%를 차지하였다.

일곱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이나 초등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운영하되, 영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유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으며, 반대 이유로는 사교육 참여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가 34.7%, 외국어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25.0%로 높았다.

여덟째,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 차원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정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또는 그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로 높고, 다음으로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금액 지원이 29.7%로 아동 수당을 보편복지제도로서 전계층, 전연령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었다. 또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V

현 정부 육아정책 추진방안

1. 추진방향 및 전략
2. 추진방안

V. 현 정부 육아정책 추진방안

1 추진방향 및 전략

가. 육아정책 목표(기조)의 명료화

핀란드의 육아정책은 추상적이지 않다. 핀란드 육아정책의 목표는 “비용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통한 보편주의와 소득보전”이다. 반면, 우리 정부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련한 다부처 사업인 복합·혁신 핵심과제의 목표는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이다. 이 목표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핀란드처럼, 저출산 문제를 “어떠한 정책으로 풀어낼지” 이 내용을 명료화해서 목표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달성할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의 육아정책은 몇 년도까지 합계출산율 얼마를 올리겠다, 이용자수를 언제까지 얼마를 증가시키겠다 국공립기관을 언제까지 몇 개 확충하겠다는 식의 수치를 목표로 제시해 왔는데, 이는 평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겉으로 드러나 수치만 달성하면 목표가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은 정책평가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목표에 해당하는 하위 정책지표를 만들고, 이를 산식화해서 추진 여부, 달성 여부를 수치로 제시해 왔다. 목표했던 수치를 달성했다고 그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책수요자들은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정책평가자들은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수치를 제시하고 이를 정책입안자가 달성했다고 평가하면 평가를 위한 정책이지 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와 정책연구자들이 그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 평가해 오지 않았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책 목표 달성 여부는 그 정책 수요자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정책입안자와 정책연구자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삶의 질, 삶의 수준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를 분명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정책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육아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나. 육아정책 다양한 수요자들의 유목화(grouping)

육아정책 범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출산 시대에 육아정책 범위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범위를 확대하면 정책수요자들은 훨씬 다양해 진다. 다양한 만큼 요구하는 정책도 다르다. 따라서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남성과 여성, 유자녀와 무자녀, 맞벌이와 외벌이, 저소득 가정과 고소득 가정, 도시와 농어촌, 직업 유무, 기혼과 비혼, 자가와 비자가 등으로 육아정책 수요자들을 분류할 수 있다.

표 V-1-1 육아정책 수요자 분류틀(일반국민)

분류 준거		구분
성별		남성, 여성
결혼 여부		비혼(결혼 계획 유무), 기혼
배우자 여부		한부모 가정
자녀유무	유자녀	자녀수
		자녀 연령(영아, 유아, 초등학생 이상)
	무자녀	출산계획 유, 무 및 난임 등
직업		실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업모, 취업모,
소득		저소득/고소득 가구
주거 소유 여부		자가, 비자가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분류 준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조합의 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혼 여성 집단에서도 자녀 유무에 따라, 자녀수에 따라, 직업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주거 소유에 따라, 가구소득에 따라 필요로 하는 육아정책은 다르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무자녀보다는 유자녀 가구의 육아, 돌봄의 국가 책임시스템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 및 저소득 유자녀

가구는 비용 지원을 원한다면, 여성 및 고소득 유자녀 가구는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와 같은 제도 마련(서비스 지원)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도 입장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달랐다. 어린이집 내에서도, 유치원 내에서도 공사립에 따라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인식 차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보다는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차이가 훨씬 더 컸다. 국공립 유치원 40% 취원율 달성 및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정책은 특히, 그 차이가 컸다.

또한, 전문가, 일반국민, 그리고 원장·교사 집단 간의 차이도 있었다. 전문가는 저출산 대응책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제도 마련을 더 중요하게 본 반면, 일반국민은 비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컸다. 일반국민은 육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을 원하는 반면, 원장·교사는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부모, 가정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다. 유목화에 따라 기존 육아정책 재정비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종류가 부족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150조원 이상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초저출산 현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연구진이 면담한 학부모, 기혼, 비혼 정책수요자들은 자신이 직접 수혜받지 않으면 정부의 육아정책, 저출산 정책을 잘 알지 못했다. 인지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자격조건이 안 맞거나 거리가 멀어서(지역아동센터) 등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육아정책을 새로 개발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육아정책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정비한다. 이는 앞서 육아정책 목표의 명료화와 정책수요자들의 유목화 작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육아정책의 발굴보다는 기존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2 추진방안

가. 복합·혁신 육아정책 재조직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복합·혁신 핵심과제인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의 위계를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가, 일반국민, 원장·교사 모두 중목표, 세부목표, 핵심정책과제의 1순위가 동일하게 나왔다(표 V-2-1의 음영). 그런데 1순위로 나온 목표의 해당 목표가 모두 달랐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목표위계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과제가 동일 목표 내에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저출산 문제는 어느 특정한 몇 개 목표와 분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 다단한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목표위계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해당 과제의 조직을 다음과 같이 재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세부목표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은 중목표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의 세부목표 및 핵심정책과제로 이동하는 것이 내용상, 타당해 보인다.

표 V-2-1 복합·혁신 핵심과제(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원안

중목표	세부목표	핵심정책과제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주: 음영 부분은 각 응답에서 1순위로 나온 과제임.

표 V-2-2 복합·혁신 핵심과제(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개정안

중목표	세부목표	핵심정책과제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나. 선정한 육아정책 추진방안

1) 10대 복합·혁신 핵심정책과제

전문가 의견조사, 일반국민·원장·교사 설문조사 공통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 3개 과제가 상위 3위권에 꼽혔다. 정부는 10대 핵심정책과제 중에서 이들 3개 과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육아정책은 노동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주양육자)의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서 육아를 지원한다. 특히, 자녀가 초등 저학년인 부모(주양육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제도를 영아기에 주로 사용하는 정책으로 지원했다면, 점차 초등 저학년까지(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확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기업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및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정책도 현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육아정책이나, 정책고객들은 반대 의견이 약 45.6%로 적지 않았다. 늦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내지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기관에서 지낸다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다. 부모(주양육자)의 직업이 다양하므로 공공성 높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부모(주양육자)의 노동시간 단축정책도 병행한다. 우리나라 사교육열에 비추어볼 때, 방과후 돌봄서비스 중에서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방과후 영어프로그램을 금지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왔다. 방과후 돌봄교실(기관)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방과후 돌봄교실(기관)에서 아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주양육자)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 양쪽 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했을 때, 온종일 돌봄 정책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아기의 1자녀일 때 추가 출산 의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 및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영아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육아정책을 세밀하고 촘촘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기 보다는 정책고객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차등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정책과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가구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준으로 가구소득 외에도 자녀수를 기준으로 한다. 아동수당정책은 자녀수를 기준으로 둘째아부터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19년부터 전계층 지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자녀수는 지원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전계층에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했듯이, 정책수요자들이 처한 상황은 정책수요자 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지원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역대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의 효과가 이를 말해준다. 단순한 비용지원이 아니라 촘촘하게 세분화된 비용지원 정책 수립이 시급하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아동수당, 출산·양육 세제 지원 정책은 차등지원 정책의 좋은 사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등지원이 선별지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차등지원이란 보편지원을 하되, 여러 기준을 고려해서 좀 더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교육에 대한 열망이 컸다.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을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는

정책이 곧 육아정책이자 저출산 대응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취학 전의 유아교육·보육을 국공립 기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공립 기관 학급수를 확충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에 그치지 않고 유아교육·보육의 새로운 틀을 구상하는 등의 보다 큰 그림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생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건은 정책 변화의 촉발제가 될 것이다. 유아 1인당 월 22만원의 누리과정비는 애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월 30만원으로 증액하되, 본연의 목적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비의 명목을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변경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10대 복합·혁신 핵심정책과제의 추진방안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2-3 선정한 복합·혁신 핵심정책과제 추진방안

10대 복합·혁신 핵심정책과제	추진방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이 3개 정책은 육아정책의 우선 추진정책으로 선정함.** • 부모(주양육자)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육아시간을 확보토록 함. •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 정책과 병행해서 추진 *하교 연장 정책에 대해 찬성(51.6%) 〉 반대(45.6%) • 관련 법 조항 제정 및 보완 등 •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매년 실시 • 자영업자 부모 육아휴직급여 지원 • 영아 부모의 추가출산 의지가 높게 나옴. 따라서 영아 육아기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지원을 집중함.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 한부모 가구 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확대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 • 출산장려 정책으로 추진 제안;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 저소득 가구 우선으로 지원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 월 30만원으로 증액하되 누리과정비를 보조금으로 변경함. • 어린이집 지원 재원(財源)을 법적으로 명문화함.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발생으로 조기 추진 필요 • 공영형 보다는 국공립 확대로 추진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옴. • 그러나 운영학급 수를 늘리고, 이용 가구의 조건을 완화함(*우선대상이 아니어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초등돌봄은 사교육 완화 기제로 추진(학원 대체재 역할 수행)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 계획대로 추진함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국공립 기관 확대로 추진

2) 5대 유아교육·보육 정책

2대 유아교육정책은 결국,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수렴된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 해결 및 예방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정책을 조속히 추진한다. 앞으로 사인유치원 설립은 금지하고, 기존의 사인유치원을 법인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한다.

3대 보육정책 중 보육교사 관련 정책이 2개를 차지하며, 원장과 교사 설문조사에서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는 1, 2순위로 높게 나왔다.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는 동일한 트랙에서 양성되어야 한다. 즉, 근무하는 기관 유형(어린이집 vs 유치원)을 전제로 양성과정이 달랐다면 가르치는 아동의 연령과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양성과정을 재편해서 전문성을 강화한다.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정규 유아교사는 대학에서 동일한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동일한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영아 보육 또는 유아교사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교사는 학점제 졸업생으로 한다. 그래서 유아 한 학급 당 정규교사 1명, 보조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이러한 교사배치 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안착되어 있는 제도이다. 동일한 자격증,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는 동일한 처우를 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수가 저출산의 여파,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으로 감소하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적정보육료 지원은 이들 원장의 요구가 크다. 그동안 보육료 동결로 적정보육료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보육료 인상 자체보다는 보육료 사용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정보공시의 신뢰성 제고를 보육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원장이 정보공시를 직접 하고 있지만, 이를 회계전문가가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5대 유아교육·보육 정책과제의 추진방안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2-4 선정한 유아교육·보육 정책과제 추진방안

5대 유아교육·보육정책과제	추진방안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발생으로 조기 추진 필요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함 • 사인유치원 설립 금지 • 사인유치원의 법인화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요구가 높게 나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정 수준을 마련하되, 전문가에 의한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전문가가 직접 공시할 것을 법으로 제정함.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원장, 교사 모두 높게 나옴. 보육 정책 중 우선 정책으로 추진 • 양성과정부터 전문성을 고려함. • 정규교사는 학점제가 아닌 학과제 졸업생으로 배치하고 보조교사는 학점제 졸업생으로 배치함. • 한 학급에 2명 교사(정규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배치 필수화함.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완화 정책 일환으로 동일 조건의 유치원 교사 평균 급여 수준 보장

다. 중장기 육아연구 기반으로 육아정책 수립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아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지향하는 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수립한 육아정책은 정권 교체나 경제적 상황 등에 의해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난 13년 동안 수많은 육아정책이 나오고, 관련 연구들도 쏟아져 나왔지만,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지향점은 또렷하지 않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육아정책도 실제 수요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육아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맞는 지, 국민이 원하는 삶의 수준에 부응하는 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역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즉, 중장기 육아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나온 축적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육아정책을 수립, 점검, 수정, 보완(피드백) 등의 과정을 통해 정책이 안착되고, 진일보할 것이다.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패널 대상의 종단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안정적인 연구비가 지원해야 하겠다.

핀란드 사례처럼, 특정 지역(헬싱키시)에 출생한 아동의 코호트 연구, 종단연구도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강은나·이소영·오신휘·기재량(2015).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부(2017).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교육부 보도자료(2017. 12. 27).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a).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b).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무조정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pmo/inform/inform01_02a.jsp에서 2018. 6. 11. 인출).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김정숙·이경진·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유해미·김선화(2010). 2010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유해미·엄지원(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박종서(2017).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3-35.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선우덕·김현식·김대중·오신휘·안세아(2012).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이삼식·오영희·이윤경·최효진(2009). 200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이지혜(201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이지혜·김세진(201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이지혜·이소영·염주희(2013).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이지혜·최효진·박보미(2010).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정경희·신윤정·이소정·박세경·이윤경·박종서·장보현·최효진(2008).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정경희·황나미·윤석명·김수봉·이윤경·이소정·신화연·이지혜·김태헌·박신영·서문희·최숙희·정익중·이규용(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강은나·기재량·박성희·김정근·김태헌·이수욱·최재성(2016).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진·김지현·이민경(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2). 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 및 요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정도상(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이진화·박창현·윤지연(2015).「3-5세 누리과정」운영 및 이용 실태와 정책 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림·이재연·김영옥·안동현·박수연·김홍희(2007). 한국의 육아지표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7).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키노시타 에이즈·오오야 타카오(2012). 전략적 의사결정기법 AHP(권재현 역). 서울: 청람. (2007년 원저 발간)

Asai, Y., Kambayashi, R., & Yamaguchi, S. (2015). Childcare availability, household structure, and maternal employment.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38, 172-192.

Baizán, P. (2009). Regional child care availability and fertility decisions in Spain. Demographic Research, 21, 803-842.

Bauernschuster, S., Hener, T., & Rainer, H. (2013). Does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 Care Increase Birth Rates? Evidence from a Low-Fertility Country. Leibniz-Informationszentrum Wirtschaft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Conference Paper.

Bauernschuster, S., Hener, T., & Rainer, H. (2016). Children of a (Policy) Revolution: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Care and Its Effect on Fertility.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4(4), 975-1005.

Kaufman, G., & Bernhardt, E. (2012). His and Her Job: What Matters Most for Fertility Plans and Actual Childbearing?. Family Relations, 61(4), 686-697.

Kela(2018). Families and family benefits in Finland.

Luci-Greulich, A., & Thévenon, O. (2013). The Impact of Family Policy Packag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9(4), 387-416.

Matysiak, A., & Szalma, L. (2014). Effects of Parental Leave Policies on

Second Birth Risks and Women's Employment Entry. Population, 69(4), 599-636.

Mörk, E., Sjögren, A., & Svaleryd, H. (2013). Childcare costs and the demand for children—evidence from a nationwide reform.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6(1), 33-65.

Parr, N., & Guest, R. (2011). The contribution of increases in family benefits to Australia's early 21st-century fertility increase: An empirical analysis. Demographic Research, 25, 215-244.

Rindfuss, R. R., Guilkey, D. K., Morgan, S. P., & Kravdal, Ø. (2010). Child-Care Availability and Fertility in Norwa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4), 725-748.

〈신문기사〉

연합뉴스(2017. 7. 30. 기사). 올해 출생아 30만명 전망……심리적 저지선 무너진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9/0200000000AKR20170729052300017.HTML(2018. 3. 7. 인출)

〈참고 사이트〉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http://www.opm.go.kr/pmo/office/office02_03.jsp(2018. 6. 11. 인출)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main.html(2018. 6. 21. 인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2018. 3. 5. 인출)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http://pcpp.go.kr/planning/coIntroductionPage.do(2018. 6. 11.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2018. 3. 5. 인출)

Kela 홈페이지 https://www.kela.fi/(2018. 10. 27. 인출)

THL 홈페이지 https://thl.fi/en/web/thlfi-en(2018. 10. 29. 인출)

Abstract

2018~2022 Analyses and Projects on Childrearing Policy(I)

Lee Yunjin·Yang Misun·Kim Moonjeong

As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has been prolonged, previous governme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hildrearing policy, developed a lot of related policies, and invested budget; however, the policy effect was insufficient. Nevertheless, i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childrearing policies, it was evaluated that the goals were achieved. It means there were problems in monitoring, assessing, and analyzing childrearing policies. It also suggests that a different method is required to analyze and assess childrearing policies in future.

The current research is the first-year study of a five-year project (2018~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policies for continuous and in-depth analyses among childrearing policies propos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s national affairs, to analyze the opinions of policy consumers and the current state of policy enforcement, and to suggest methods for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selected policies.

The main research methods include expert opinion polls and surveys. The expert opinion survey using AHP was conducted in order to select the major childrearing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In addition, a total of 1,500 people, including 1,000 parents of infant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618 principals and teachers of childcare centers/kindergartens, and 500 unmarried and married adults without children, were surveyed.

As a result of expert opinion polls, 10 core projects on childrearing policies as well as two core policie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ree core policies on childcare were selected. Thus, the final 15 core policy project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surveys about the importance of 10 core policy projects with parents, principals and teachers, and married and unmarried adults, the top three projects were "securing funds for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introducing claims for reducing working hours", and "reducing working hours during a period of child rearing". In the survey with parents, adults with children compared to adults without children, and females compared to males scored higher on all core policy projec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biggest problem that hinders the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family is 'child rearing'(family with children), and the social structure that women are responsible for childreaing is still strong.

In the survey with principals and teachers, the importance of the same project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ir institution was national or private. For example, in the policy task of "achieving 40% enrollment rate of public kindergartens and public childcare centers", the score of principals and teachers in private centers was lower than that in public centers. Furthermore, a primary factor of low birth rate in our society was given to the housing problems for adults without children, the problems in child rearing expenses and the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family for adults with children, child rearing expenses for males, and the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family for females. Therefore,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hildrearing policies, low birth rate, and marriage/childbirth depending on their own situation.

The future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childrearing policies include clarifying the goals of childrearing policy, grouping various childrearing policy users, readjusting the existing childrearing policies according to grouping, and establishing childrearing policies based on mid-to long-term research. It is suggested that the promotion plans for the selected 10 core childrearing policies need to provide a differentiated policy depending on the needs of policy consumers such

as adjusting working hours to offer enough time for ECEC, providing additional benefits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supporting ECEC services for general households. In the five major policies on child education and child care, it is proposed to expand public centers and strengthen publicity for kindergartens, and for childcare centers,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and ensure proper treatment for them at the level of teachers in kindergartens.

Keyword: childrearing policies,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ies, core policies

부록

부록 1. 영유아부모 면담설문지
부록 2. 초등자녀부모 면담설문지
부록 3. 예비부모 면담설문지
부록 4. 비혼성인 면담설문지
부록 5. 원장 및 교사 면담설문지
부록 6. 전문가조사 설문지
부록 7. 일반국민조사 설문지
부록 8. 기관조사 설문지(원장 및 교사용)

부록 1. 영유아부모 면담설문지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일 시 : 2018년 ○월 ○일
장 소 :
면담참여자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주요 면담 내용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그동안 역대 정부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를 비롯해서 수많은 육아정책을 내놓 았습니다만, 초저출산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부의 육아정책이 효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께서는 올해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22만원 → 30만원) 등의 비용지원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4. 귀하께서는 **교육**(양육 포함), **노동**(고용안정화, 근로시간 단축), **복지**(아동수당,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세 분야 중에서 저출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5.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떤 면이 가장 힘드십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6. 7월부터 시행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정책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7. 현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응답자 일반 특성

1. 자녀와의 관계
   (1) 엄마 (2) 아빠 (3)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2. 귀하의 연령: 만 _____세

3. 귀하의 학력: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전문대학졸
   (3)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4) 대학원 이상

3. 동거가구 구성원수(본인포함) (명)

4. 직업: 본인:_____ 배우자:_____

5. 월 평균 가구소득: 월 _____만원(세전기준)

6. 자녀수: 총_____명

※자녀의 일반 특성(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큰 아이 기준으로 작성)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출생년도(연령): _____년 _____월

3. 출생순위: 총_____명 중 _____째(예: 자녀가 1명일 때, 총 1명 중 첫째)

4.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여부
   (1) 다니고 있다 ☞ 4-1 (2) 다니고 있지 않다

   4-1. 기관종류: _____(국공립, 민간, 사립 등)
   4-2. 기관 이용시작 시기: 만 _____세부터(생후 _____ 개월부터)

부록 2. 초등자녀부모 면담설문지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일 시 : 2018년 ○월 ○일
장 소 :
면담참여자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주요 면담 내용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그동안 역대 정부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를 비롯해서 수많은 육아정책을 내놓 았습니다만, 초저출산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부의 육아정책이 효과가 낮은 이유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께서는 **교육**(양육 포함), **노동**(고용안정화, 근로시간 단축), **복지**(아동수당,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세 분야 중에서 저출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떤 면이 가장 힘드십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5. 정부는 초등학교 돌봄 정책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아우르는 촘촘한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귀하는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5-1. 학교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지(이용하고 있는 지)
   5-2. 학교 외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지(이용하고 있는 지)

6. 현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정책(교육정책, 노동정책 등 포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자 일반 특성

1. 자녀와의 관계
   (1) 엄마 (2) 아빠 (3)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2. 귀하의 연령: 만 _____세

3. 귀하의 학력: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전문대학졸
   (3)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4) 대학원 이상

3. 동거가구 구성원수(본인포함) (명)

4. 직업: 본인:_____ 배우자:_____

5. 월 평균 가구소득: 월 _____만원(세전기준)

6. 자녀수: 총_____명

※자녀의 일반 특성(초등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큰 아이 기준으로 작성)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출생년도(연령): _____년(만 _____ 세)

3. 출생순위: 총_____명 중 _____째(예: 자녀가 1명일 때, 총 1명 중 첫째)

4. 현재 초등학교 _____ 학년

5.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여부 및 이용 여부

5-1.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①운영함 → 문 5-2. ②운영하지 않음
5-2.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①이용함 ②이용하지 않음

부록 3. 예비부모 면담설문지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일 시 : 2018년 2018년 ○월 ○일
장 소 :
면담참여자 : 예비부모

주요 면담 내용

1. 귀하는 우리나라 저출산(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그동안 역대 정부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만, 초저출산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정부의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도움을 받은 정책이 있습니까?

4. 귀하는 출산 계획이 있으십니까?

4-1.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희망하는 자녀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4-2.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무엇이 변하면 출산 계획이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5. 현 정부는 남녀의 법적 혼인형태의 가정 외의 동거, 동성애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허용하는 사회가 된다면, 결혼과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6.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노동시간 감소) 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7. 우리사회의 젠더불평등이 최근 미투운동으로 균열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남녀 관계가 수평적 평등한 관계로 정립되면, 결혼과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8. 현 정부에게 바라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응답자 일반 특성

1. 연령: 만 _____세

2. 결혼시기: _____년 ____ 월

3. 학력:
   ①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전문대학졸
   ③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④대학원 이상

4. 직업: 본인 _____ 배우자 _____

5. 현재 직업 고용상태:
   ①정규직 ②비정규직 ③기간제 근로자 ④일용직

6. 월 평균 가구소득: 월 _____만원(세전기준)

7. 현재 주택소유형태
   ①자가 ②전세 ☞ 보증금 _____원
   ③월세 ☞ 월세 _____원 보증금 _____원
   ④부모님 집

부록 4. 비혼성인 면담설문지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일 시 : 2018년 ○월 ○일
장 소 :
면담참여자 : 비혼성인

주요 면담 내용

1. 귀하는 우리나라 저출산(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그동안 역대 정부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만, 초저출산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결혼 계획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없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 귀하는 몇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희망하는 자녀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5. 현 정부는 남녀의 법적 혼인형태의 가정 외의 동거, 동성애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허용하는 사회가 된다면, 결혼과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6.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노동시간 감소) 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7. 우리사회의 젠더불평등이 최근 미투운동으로 균열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남녀 관계가 수평적 평등한 관계로 정립되면, 결혼과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8. 현 정부에게 바라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응답자 일반 특성

1. 연령: 만 _____세

2. 형제자매수(본인 포함): 총 _____명

3. 학력:
   ①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전문대학졸
   ③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④대학원 이상

4. 현재 직업: _____

5. 현재 직업 고용상태:
   ①정규직 ②비정규직 ③기간제 근로자 ④일용직

6. 월 평균 급여(소득): 월 _____만원(세전기준)

7. 현재 주거형태
   ①부모님과 동거
   ②부모님으로부터 독립 ☞ 월세 _____원

부록 5. 원장 및 교사 면담설문지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일 시 : 2018년 ○월 ○일
장 소 :
면담참여자 : 원장 및 교사

주요 면담 내용

1. 7월부터 시행한 보육교사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 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2.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버스 사건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CTV 설치가 아동학대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까?

4.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과제 도입 정책,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영유아 교사 자격 신설 정책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제3차 중장기보육)

5. 최근 어린이집 사건 관련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그동안 역대 정부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를 비롯해서 수많은 육아정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초저출산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부의 육아정책이 효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현 정부에게 바라는 보육정책(육아정책 포함)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응답자 일반 특성

1. 연령: 만 _____세

2. 최종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졸
③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④ 대학원 이상

3. 최종 전공:
① 유아교육학 ②보육학·아동학
③ 초중등교육학 ④사회복지학 ⑤ 기타

4. 최상위 자격증:
① 원장 ② 보육교사 1급 ③ 보육교사 2급 ④ 보육교사 3급
⑤ 유치원 정교사 1급 ⑥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소지한 경우, 모두 표시함.

5. 현직 경력: _____년 _____ 개월
*원장은 원장경력만, 교사는 교사경력만

6. 현 기관 경력: _____년 _____개월

7. 일일 근무시간:
출근 _____시 _____분 ~ 퇴근_____시 _____분

8. 현재 담당 반: 만_____세반 (보조교사 ①있다 ②없다)

부록 6. 전문가조사 설문지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 전문가 의견 조사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자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연구를 매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그 첫 번째 해입니다. 인구절벽이라 할 정도로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은 심각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저출산 대응을 포함해서 육아부담을 해소하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면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담당자 : 성과공유팀 전문연구원
김 문 정 (02-398-7719)

▣ 조사실시기관 : (주) 케이스탯리서치
▣ 담당자 : 연구1본부
임 창 모 차장 (02-6188-6021)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의 기본 인구통계 특성을 제외하면, 모두 정답이 없는 형태의,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1

설문의 앞 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제시된 문장을 읽고,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①, ②, ③ 중 그 정도에 해당하는 응답을, '심각하다'고 생각되시면 ⑤, ⑥, ⑦ 중 생각하시는 정도에 해당하는 응답을 하시면 되며, 만약 어느 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 되시면 ④에 응답 해주시면 됩니다.

〈보기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매우 심각하다						
1) 우리 사회 저출산 심각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표시하는 방법1

이후 대부분의 질문은 <u>두 가지의 정책 과제 중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형태로 구성</u>되어 있으며 응답하는 방식은 위 〈보기1〉과 동일합니다. 두 과제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방향의 척도 중에서 중요한 정도에 따라 응답 해주시면 됩니다.

〈보기2〉

평가 지표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평가 지표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④	③	②	①	②	③	④	성평등 문화 정착

Ⅰ. 먼저「우리사회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각성 정도」관련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매우 심각하다						
저출산 심각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각 항목별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매우 영향을 미친다						
(1) 비싼 주거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불안정한 고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낮은 임금(소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높은 물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젠더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높은 양육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높은 사교육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장시간 노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만혼(결혼연령이 늦어져서 출산도 적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불임·난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 1) 위의 문2에서 나열해드린 12개 **저출산 원인들 중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원인**을 중요한 순서대로 5개를 꼽아서 보기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① 비싼 주거비
② 불안정한 고용
③ 낮은 임금(소득)
④ 높은 물가
⑤ 젠더 불평등
⑥ 높은 양육비
⑦ 높은 사교육비
⑧ 장시간 노동
⑨ 만혼(결혼연령이 늦어져서 출산도 적음)
⑩ 불임·난임
⑪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
⑫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문3) 오늘날 우리나라 육아정책 추진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들 중에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도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아동의 행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부모의 일도, 삶도 즐겁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행복한 육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비용 걱정 없는 임신·출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공보육·교육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모든 아동과 가족의 평등한 지원 (편견 없는 다양한 가족 인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Ⅱ.「복합·혁신과제 : 교육, 노동, 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관련 질문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복합과제들 중에서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정책집행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저출산 대응정책도 4대 복합·혁신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되었습니다(**"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지금부터는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인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본 과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열람**하길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클릭하시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다루는 과제는 **자료의 154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4) 교육, 노동, 복지 3개 범주를 복합적 그리고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귀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 항	매우 적절하지 않다 ←→ 매우 적절하다						
복합·혁신과제 선정을 통한 정부 저출산 대응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1) 위의 문4에서처럼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과제는 아래와 같이 3개의 중목표, 8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목표	중목표	세부목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주거 공공성강화
		일·가정 양립 일상화
		성평등 문화 정착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 지금부터는 각 중목표, 세부목표 및 목표 내 구체적인 과제들 간의 중요도 파악을 위한 귀하의 의견을 여쭐 것입니다.
제시하는 두 가지 정책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방향의 척도 중에서 중요한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 **중요도 측정은 분석적 계층화 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여러 유관 학문의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할 것입니다. AHP는 **두 변수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 비교를 계속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여러 변수간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문5) 다음의 3개 중목표에 대해, 좌측과 우측 목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중목표	
1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3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중목표	←								→	중목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1.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1.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3.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2.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3.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문6) 다음의 8개 세부목표에 대해, 좌측과 우측 목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지표 : 8개 세부목표	
1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2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3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4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5	주거 공공성강화
6	일·가정 양립 일상화
7	성평등 문화 정착
8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세부목표	←								→	세부목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1.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2.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1.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3.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1.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4.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1.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5. 주거 공공성강화
1.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6. 일·가정 양립 일상화
1.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7. 성평등 문화 정착
1.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2.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3.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2.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4.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2.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5. 주거 공공성강화
2.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6. 일·가정 양립 일상화
2.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7. 성평등 문화 정착
2.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3.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4.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3.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5. 주거 공공성강화
3.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6. 일·가정 양립 일상화
3.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7. 성평등 문화 정착
3.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4.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5. 주거 공공성강화
4.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6. 일·가정 양립 일상화
4.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7. 성평등 문화 정착
4.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5. 주거 공공성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6. 일·가정 양립 일상화
5. 주거 공공성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7. 성평등 문화 정착
5. 주거 공공성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6.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7. 성평등 문화 정착
6.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7. 성평등 문화 정착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Ⅲ. 복합·혁신과제 중 세부 목표별 정책 과제들에 대한 중요도 부분입니다

문7)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 과제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이라는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입니다. 각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목표 1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세부목표1 :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정책과제	
①	배우자 출산휴가 단계적 확대(유급 3일→10일)
②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③	산모·신생아 (방문형)건강관리서비스 확대
④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
⑤	공공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배우자 출산휴가 단계적 확대(유급 3일→10일)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① 배우자 출산휴가 단계적 확대(유급 3일→10일)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산모·신생아 (방문형)건강관리서비스 확대
① 배우자 출산휴가 단계적 확대(유급 3일→10일)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
① 배우자 출산휴가 단계적 확대(유급 3일→10일)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공공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②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산모·신생아 (방문형)건강관리서비스 확대
②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
②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공공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③ 산모·신생아 (방문형)건강관리서비스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
③ 산모·신생아 (방문형)건강관리서비스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공공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④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공공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문8)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 과제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라는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입니다. 각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목표 1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세부목표2 :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정책과제	
①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②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③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④	아동재활병원 확충
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운영
⑥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⑦	미혼모 ‘출산-양육-자립’패키지 지원
⑧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⑨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①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①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아동재활병원 확충
①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운영
①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①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⑦ 미혼모 ‘출산-양육-자립’패키지 지원
①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⑧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①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⑨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②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②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아동재활병원 확충
②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운영
②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②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⑦ 미혼모 ‘출산-양육-자립’패키지 지원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②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⑧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②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⑨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③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아동재활병원 확충
③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운영
③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③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⑦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③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⑧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③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⑨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④ 아동재활병원 확충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운영
④ 아동재활병원 확충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④ 아동재활병원 확충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⑦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④ 아동재활병원 확충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⑧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④ 아동재활병원 확충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⑨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운영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운영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⑦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운영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⑧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운영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⑨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⑥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⑦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⑥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⑧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⑥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⑨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⑦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⑧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⑦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⑨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⑧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⑨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문9)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 과제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이라는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입니다. 각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목표 1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세부목표3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정책과제
①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②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③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④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①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①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②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②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③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문10)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 과제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입니다. 각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목표 2 : 결혼·출산을 꿈꿀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세부목표1 :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과제
①	청년구직 촉진 수당 신설
②	공공기간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민간 확산
③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차별 해소 포함 등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로드맵 (아래 평가지표에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로드맵으로 축약 제시함)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청년구직 촉진 수당 신설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공공기간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민간 확산
① 청년구직 촉진 수당 신설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로드맵
② 공공기간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민간 확산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로드맵

문11)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 과제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공공성 강화”라는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입니다. 각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목표 2 : 결혼·출산을 꿈꿀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세부목표2 : 주거 공공성 강화**	
정책과제	
①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②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③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④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신설
⑤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애 등 지원 강화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①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①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신설
①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애 등 지원 강화
②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②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신설
②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애 등 지원 강화
③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신설
③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애 등 지원 강화
④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신설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애 등 지원 강화

문12)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 과제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일상화”라는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입니다. 각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목표 2 : 결혼·출산을 꿈꿀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세부목표3 : 일·가정 양립 일상화**	
	정책과제
①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아래 평가지표에는 축약하여 제시함)
②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⑤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⑥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확대
⑦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①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①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①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확대
①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⑦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②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②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②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②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확대
②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⑦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확대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⑦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⑤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확대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⑦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⑤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확대
⑤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⑦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⑥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⑦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문13)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 과제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문화 정책”이라는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입니다. 각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목표 2 : 결혼·출산을 꿈꿀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세부목표4 : 성평등 문화 정책**	
정책과제	
①	학교 내 성평등 인권교육 강화
②	성평등 임금공시제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학교 내 성평등 인권교육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성평등 임금공시제

문14)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 과제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이라는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입니다. 각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목표 2 : 결혼·출산을 꿈꿀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세부목표5 :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정책과제	
①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②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③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①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
②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

Ⅳ.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정책과제 추가 선정을 위한 질문입니다

"교육, 노동, 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한 인구절벽 해소" 복합·혁신과제에서는 유아교육·보육의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과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의 추진과제들을 온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중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응답 방식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1. 유아교육 혁신방안 5개년 계획

문15)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아교육 혁신방안 - 목표 1)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보	
①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②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③	다문화유아(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④	특수유아에 대한 통합교육 확대 운영 (특수-일반유아 간 다름을 이해하는 통합교육)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①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다문화유아(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①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특수유아에 대한 통합교육 확대 운영
②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다문화유아(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②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특수유아에 대한 통합교육 확대 운영
③ 다문화유아(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특수유아에 대한 통합교육 확대 운영

문16)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아교육 혁신방안 – 목표 2)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①	국공립 유치원 단계적 확대
②	국공립 유치원 여건 개선 (학급과밀화,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 문제, 혼합연령반 등)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국공립 유치원 단계적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국공립 유치원 여건 개선

문17)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아교육 혁신방안 – 목표 3)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①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②	공공위탁을 통한 운영방식 다양화
③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활성화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공공위탁을 통한 운영방식 다양화
①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활성화
② 공공위탁을 통한 운영방식 다양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활성화

문18)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아교육 혁신방안 – 목표 4) 유아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	
①	놀이·유아 중심의 교육과정(누리과정) 혁신
②	유아와 현장이 중심이 되는 혁신유치원(공·사립 모두 포함) 확대 *혁신유치원: 구성원 간 참여와 소통, 개방과 협력, 공감과 지원으로 혁신교육문화를 만들어가는 유치원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놀이·유아 중심의 교육과정(누리과정) 혁신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유아와 현장이 중심이 되는 혁신유치원 확대

문19)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아교육 혁신방안 - 목표 5)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① ① 유아 중심으로 방과후과정 개편
② ② 공교육 혁신을 위한 건전한 유치원 운영 지원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유아 중심으로 방과후과정 개편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공교육 혁신을 위한 건전한 유치원 운영 지원

문20)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아교육 혁신방안 - 목표 6) 교육 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① 학부모안심인증제 도입·운영 *인증분야 : 건강·안전분야
② 학부모 유아교육 참여 활성화
③ 행정인력 지원을 통한 교원 업무경감
④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간접바우처(유치원)에서 직접바우처(학부모) 결제방식으로 변경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학부모안심인증제 도입·운영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학부모 유아교육 참여 활성화
① 학부모안심인증제 도입·운영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행정인력 지원을 통한 교원 업무경감
① 학부모안심인증제 도입·운영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② 학부모 유아교육 참여 활성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행정인력 지원을 통한 교원 업무경감
② 학부모 유아교육 참여 활성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③ 행정인력 지원을 통한 교원 업무경감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문21)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아교육 혁신방안 - 목표 7)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① 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② 국공립-사립 교원 간 임금격차 해소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국공립-사립 교원 간 임금격차 해소

문22) 지금까지 응답하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 유아교육 혁신방안 5개년 계획 ” 내의 7개 목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목표를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꼽아서 보기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보
②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③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④ 유아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
⑤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⑥ 교육 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⑦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문23)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1)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적 역할 확대
②	민간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등 질 관리체계 운영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2)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①	직장어린이립 직접 설치 확대 및 의무이행률 90%로 확대
②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적 역할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민간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등 질 관리체계 운영
① 직장어린이립 직접 설치 확대 및 의무이행률 90%로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문24)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3)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①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②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운영주체 참여 보장
③	어린이집의 관리 역량 강화
④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운영주체 참여 보장
①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어린이집의 관리 역량 강화
①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 강화
②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운영주체 참여 보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어린이집의 관리 역량 강화
②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운영주체 참여 보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 강화
③ 어린이집의 관리 역량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 강화

문25)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4)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①	어린이집 보육 지원 체계 개선 추진
②	부모 선택권 보장과 적정 보상체계 마련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5)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①	표준보육비용 재계측
②	적정 보육료 지원 및 부모부담 기준 정비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6) 보육과정 개선	
①	영유아 특성에 맞춰 표준보육과정 개선
②	특별활동 개선 및 운영 합리화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어린이집 보육 지원 체계 개선 추진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부모 선택권 보장과 적정 보상체계 마련
① 표준보육비용 재계측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적정 보육료 지원 및 부모부담 기준 정비
① 영유아 특성에 맞춰 표준보육과정 개선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특별활동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문26)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7)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①	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
②	보수교육 과정 내실화
③	체계적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종합관리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보수교육 과정 내실화
① 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체계적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종합관리
② 보수교육 과정 내실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체계적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종합관리

문27)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8)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①	보육교사의 적정 임금 지급 보장
②	보육교사 보조인력 지원 확대
③	교사 업무부담 경감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보육교사의 적정 임금 지급 보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보육교사 보조인력 지원 확대
① 보육교사의 적정 임금 지급 보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교사 업무부담 경감
② 보육교사 보조인력 지원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교사 업무부담 경감

문28)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9)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①	영유아 반 구성기준 개선
②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영유아 반 구성기준 개선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

문29)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10)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①	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②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 개선
③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④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여건 개선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 개선
① 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① 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여건 개선
②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 개선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③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②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 개선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여건 개선
③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④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여건 개선

문30) 아래 제시 해드리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좌측과 우측 과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11)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①	부모교육 및 양육정보 제공 확산
②	가정양육 서비스 확대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12)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①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②	시간제보육 지원기준 개선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목표 13) 취약보육 지원 개선	
①	취약보육 대상 재검토 및 실태조사
②	취약보육 특성별 보육지원 개선(다문화아동, 장애영유아)

정책과제	←								→	정책과제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① 부모교육 및 양육정보 제공 확산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가정양육 서비스 확대
①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시간제보육 지원기준 개선
① 취약보육 대상 재검토 및 실태조사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② 취약보육 특성별 보육지원 개선

문31) 지금까지 응답하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내의 13개 목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목표를 중요한 순서대로 5개를 꼽아서 보기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①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②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③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④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⑤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⑥ 보육과정 개선
⑦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⑧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⑨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⑩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⑪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⑫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⑬ 취약보육 지원 개선

마지막으로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응답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구분	내용
배경문항 1) 전공(최종학위 기준)	① 유아교육 ② 아동학(보육) ③ 사회복지학 ④ 교육학 ⑤ 의료·보건학 ⑥ 경제·경영학 ⑦ 행정학 ⑧ 사회학 ⑨ 기타 (자세히 :_____)
배경문항 2) 현 근무기관 유형	① 대학 ② 공공기관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정부출연기관 이외 연구원(연구소) ⑤ 기타 (자세히 :_____)
배경문항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배경문항 4) 자녀 여부	① 자녀 있음 ② 자녀 없음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7. 일반국민조사 설문지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 일반 국민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자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연구를 매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그 첫 번째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육아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초저출산 현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육아정책이 중요한 이 시기의 육아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및 자녀가 없는 성인(신혼부부, 비혼성인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육아정책의 만족도, 체감도, 개선점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담당자 : 성과공유팀 전문연구원
김 문 정 (02-398-7719)

▣ 조사실시기관 : (주) 케이스탯리서치
▣ 담당자 : 연구1본부
임 창 모 차장 (02-6188-6021)

먼저 설문조사의 진행을 위한 기본 질문입니다.

선문1) 귀하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 시/도 [ ] 시/군/구 [ ] 동/읍/면

☞ 동/읍/면 단위까지만 드롭다운 형태로 구현

선문2) 귀하는 현재 결혼 하셨습니까?

① 미혼/비혼 ☞ 선문4로

②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 선문3으로

③ 이혼·사별 ☞ 선문3으로

선문3) [선문2의 ②, ③ 응답자에게만] 현재 자녀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각각 몇 명 입니까? 해당되는 보기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유치원에 갈 나이가 안 된 어린 자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 명)

②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받는 자녀 (2012-2014년생 자녀) ([ ] 명)

③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 자녀 ([ ] 명)

④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자녀 ([ ] 명)

⑤ 중·고교생 자녀 ([ ] 명)

⑥ 성인 자녀 ([ ] 명)

⑦ 자녀 없음 ☞ 다른 보기와 중복선택 불가, 문4로 이동

☞ ④, ⑤, ⑥ 응답자 중 ①, ②, ③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 즉, 가장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응답자는 조사 종료

선문4) [선문2의 ①, 선문3의 ⑦ 응답자에게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셨으면 -1을,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으셨으면 -2를 하시면 만 나이가 됩니다.

만 [ ] 세 ☞ 만25세 미만, 만39세 초과인 경우 조사 종료

선문5) [선문3에서 ①, ②, ③ 포함 응답자에게만] 앞서 응답하신 자녀에 대한 기본 사항을 응답해주십시오.

☞ 선문3의 ①, ②, ③의 기타 응답(각 연령대별 자녀 수)의 합계 만큼 아래 응답란 오픈

(1) 응답 자녀	(2) 연령 구분 ☞ 문3의 ①, ②, ③을 드롭다운 형태로 선택 가능하도록 개발	(3) 출생년도	(4) 자녀 성별
① 첫째 자녀		□□□□ 년	① 남자 ② 여자
② 둘째 자녀		□□□□ 년	① 남자 ② 여자
③ 셋째 자녀		□□□□ 년	① 남자 ② 여자
④ 넷째 자녀		□□□□ 년	① 남자 ② 여자
⑤ 다섯째 자녀		□□□□ 년	① 남자 ② 여자
⑥ 여섯째 자녀		□□□□ 년	① 남자 ② 여자
⑦ 일곱째 자녀		□□□□ 년	① 남자 ② 여자

☞ Logic Guide

(1) 응답 자녀에 따라 (2) 선택 역전현상 불가
→ 첫째 자녀(손 위 자녀)의 (2) 연령 구분이 ①일 경우 둘째 자녀(손아래 자녀)는 무조건 ①이어야 함
→ 첫째 자녀(손 위 자녀)의 (2) 연령 구분이 ②일 경우 둘째 자녀(손아래 자녀)는 ① 또는 ②여야 함
→ 첫째 자녀(손 위 자녀)의 (2) 연령 구분이 ③일 경우 둘째 자녀(손아래 자녀)는 ①~③ 중 모두 가능

(1) 응답 자녀에 따라 (3) 역전현상 불가
→ 첫째 자녀(손 위 자녀)의 (3) 출생년도는 둘째 자녀(손아래 자녀)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선문6) [Hidden Question ☞ 응답자 미제시] 응답자 구분

① 영아 부모 ② 유아 부모 ③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

☞ 선문5 응답 결과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강제 지정 (조사 진행률 50%까지)

☞ 이후 실사 진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진행

④ 예비 부모 ☞ 선문2의 ① 또는 문3의 ⑦ 이면서 문4에서 적격 연령대(만25-39세) 응답자

선문7) [선문6의 ④ 응답자만]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Ⅰ. 저출산에 대한 체감 및 원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매우 심각하다						
저출산 심각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각 항목별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매우 영향을 미친다						
(1) 비싼 주거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불안정한 고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낮은 임금(소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높은 물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젠더 불평등(남녀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높은 양육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높은 사교육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장시간 노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만혼(결혼연령이 늦어져서 출산도 적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불임·난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 위의 문2에서 나열해드린 12개 저출산 원인들 중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원인**을 중요한 순서대로 5개를 꼽아서 보기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① 비싼 주거비
② 불안정한 고용
③ 낮은 임금(소득)
④ 높은 물가
⑤ 젠더 불평등
⑥ 높은 양육비
⑦ 높은 사교육비
⑧ 장시간 노동
⑨ 만혼(결혼연령이 늦어져서 출산도 적음)
⑩ 불임·난임
⑪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
⑫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Ⅱ.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육아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혁신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 장기화 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2개 정책들의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초 저출산 해결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매우 중요하다
(1)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 장기화 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4개 정책들의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초 저출산 해결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매우 중요하다
(1)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6) 장기화 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10개 정책들의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초 저출산 해결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매우 중요하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일·가정양립 재원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만0~5세 월10만원 아동수당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아래 설명을 해당 보기번호 응답 시 제시 되도록 구현(제시 방식은 프로그래머 재량에 따름)

③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란?
각 개인이 육아, 가족돌봄, 본인의 질병이나 장애, 교육이나 훈련, 점진적 은퇴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④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란?
현행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취학 전 3년) 1명에게 지원하는 월 22만원의 증액을 의미함.

⑧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이란?
올해부터 정부는 세제개선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 공평한 조세정책을 목표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함(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지급액 인상)

문7) 다음은 현 정부의 주요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입니다. 다음 2개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유아교육·보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매우 중요하다						
(1)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교사, 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다음은 미취학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큰 아이를 기준으로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파트 Ⅲ은 선문6의 ①, ② 로 분류된 응답자 대상으로 제시함

문8) 귀 자녀가 현재 조사 응답일 기준으로 다니고 있는 기관(반일제 이상)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국립 유치원 ☞ 문9로
② 공립단설 유치원 ☞ 문9로
③ 공립병설 유치원 ☞ 문9로
④ 사립 유치원 ☞ 문9로
⑤ 국공립 어린이집 ☞ 문9로
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문9로
⑦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문9로
⑧ 민간 어린이집 ☞ 문9로
⑨ 가정 어린이집 ☞ 문9로
⑩ 직장 어린이집 ☞ 문9로
⑪ 부모협동 어린이집 ☞ 문9로
⑫ 놀이학교 또는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 문9로
⑬ 기관에 다니고 있지 않음 ☞ 문13으로

☞ 아래 설명을 문항 아래에 배치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반일제'란?
일일 5시간 이상,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기관을 의미함

문9) 귀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의 등·하원 시간은 어떠합니까?
귀하께서 직접 등하원을 시키지 않아 정확히 알지 못하실 경우 아이의 등하원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가족, 지인, 보호자 등에게 확인하시어 가급적 정확한 시간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등원 시간 : [ ] 시 [ ] 분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 기준)

② 하원 시간 : [ ] 시 [ ] 분 (기관에서 나서는 시간 기준)

☞ 시간 응답은 24시 기준으로 드롭다운 형태로 제시 / 분 응답은 00부터 60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드롭다운 형태로 제시

☞ 24시 기준 응답이므로 하원 시간이 등원 시간보다 먼저일 수 없음

③ [응답자에게 제시하지 않음: 자동계산] 하루 평균 이용 시간 : [ ] 시간 [ ] 분

☞ ③은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 계산되도록 구현

문10) 귀 자녀의 방과 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귀하께서 직접 납부를 하지 않아 정확히 알지 못하실 경우 납부하시는 배우자 분 또는 담당 가족에게 확인하시어 가급적 정확히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별도로 내지 않고 다른 비용과 함께 묶어서 납부하실 경우 고지서 상의 명세를 확인하시어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만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내지 않고 3개월, 6개월 등 일정 기간 만큼을 한꺼번에 납부하시는 경우 월 평균 비용을 계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월 평균									원

☞ 위 응답란은 예시이며 응답자가 금액 단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는 형태로 구현 요망

문11) 귀 자녀의 방과 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일체(수업료, 행사비, 차량비 등)는 월 평균 얼마입니까? 귀하께서 직접 납부를 하지 않아 정확히 알지 못하실 경우 납부하시는 배우자 분 또는 담당 가족에게 확인하시어 가급적 정확히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납부하실 경우 고지서 상의 명세를 확인하시어 특별활동(특성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내지 않고 3개월, 6개월 등 일정 기간 만큼을 한꺼번에 납부하시는 경우 월 평균 비용을 계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월 평균									원

☞ 위 응답란은 예시이며 응답자가 금액 단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는 형태로 구현 요망

문12) 지금까지 응답하신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만족 정도를 아래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대해)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 - - - - - →					매우 만족한다
(1) 원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교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급·간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시설 등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교육 과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교통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3) [문8의 ⑬ 응답자만] 귀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보내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기관을 보내기에 아직 어려서
② 자녀가 장애 또는 질환이 있어서
③ 자녀가 적응을 잘 못해서(다녔다가 중단)
④ 부모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⑤ 집주변에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 없어서
⑥ 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시간이 안 맞아서
⑧ 기타 (자세히 :_____)

☞ 지금부터는 영유아 부모(선문6 분류 ①, ②) 모두 응답

문14) 귀 가정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0 - 5세 영유아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받고 계십니까?

① 받고 있다 ☞ 문16으로
② 받고 있지 않다 ☞ 문15로

문15) [문14의 ② 응답자만] 아동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신청절차가 복잡·귀찮아 신청하지 않아서
② 아동수당을 잘 몰라서(신청하는 것조차 알지 못함)
③ 고소득 가구라 대상이 안 되어서(가구소득 상위 10%에 속해서)
④ 자녀가 만6세에 접어들어 대상이 안 되어서(유치원에 다니는 중이나 9월 기준 자녀 월령이 72개월을 초과)
⑤ 기타 (자세히 : _____)

☞ 응답 후 문16으로

문16) 아동수당제도는 나라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저출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아동수당제도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다음 보기 중에서 1개를 선택 해주십시오.

※ 현재는 상위가구소득 10%는 제외.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 지급하기도 함.

①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금액 지원
② 지원대상 연령을 영유아에서 초등학생(또는 그 이상)까지 확대
③ 가구소득을 고려해서 차등지원(저소득 가구의 자녀에게 더 많이 지급)
④ 자녀의 출생순위별로 차등으로 지원(둘째아, 셋째아 순으로 수당이 많아짐)
⑤ 기타 (자세히 : _____)

문17) 귀 가구는 향후 더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쯤 임신하기를 희망 하십니까?

① 현재 임신 중 ☞ 문19로
② 1년 이내 임신 ☞ 문19로
③ 2~3년 이내 임신 ☞ 문19로
④ 3년 이상 경과한 후 임신 ☞ 문19로
⑤ 입양할 계획임 ☞ 문19로
⑥ 임신·출산 계획 없음 ☞ 문18로
⑦ 잘 모르겠음 ☞ 문18로

문18) [문17의 ⑥, ⑦ 응답자만] 자녀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 해주십시오.

① 육아가 힘들어서
②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③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④ 본인(또는 배우자, 또는 둘 다)의 나이가 많아서
⑤ 본인(또는 배우자, 또는 둘 다)의 건강이 안 좋아서
⑥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⑦ 기타 (자세히 :_____)

Ⅳ. 다음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더 어린 아이를 기준으로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파트 Ⅳ는 선문6의 ③ 으로 분류된 응답자 대상으로 제시함

문19) 귀하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현재 등 하교 시간은 어떠합니까? 요일마다 하교 시간이 다른 경우 가장 하교시간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응답 해주십시오. 만약 귀하께서 등하교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실 경우 아이의 등하교를 직접적으로 챙기는 가족, 지인, 보호자 등에게 확인하시어 가급적 정확한 시간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등교 시간 : [ ] 시 [ ] 분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 기준)

② 하교 시간 : [ ] 시 [ ] 분 (학교에서 나가는 시간 기준)

☞ 시간 응답은 24시 기준으로 드롭다운 형태로 제시 / 분 응답은 00부터 60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드롭다운 형태로 제시

☞ 24시 기준 응답이므로 하교 시간이 등교 시간보다 먼저일 수 없음

③ [응답자에게 제시하지 않음: 자동계산] 하루 평균 이용 시간 : [ ] 시간 [ ] 분

☞ ③은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 계산되도록 구현

문20) 해당 자녀의 돌봄을 위해 학교내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으십니까?

① 이용하고 있다 ☞ 문21로 ② 이용하지 않고 있다 ☞ 문25로

문21) [문20의 ① 응답자만] 현재 이용 중이신 방과후 돌봄교실의 이용 시간은 어떠합니까? 요일마다 하교 시간이 다른 경우 가장 하교 시간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응답 해주십시오. 만약 귀하께서 이용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실 경우 아이의 돌봄교실 이용을 직접적으로 챙기는 가족, 지인, 보호자 등에게 확인하시어 가급적 정확한 시간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 ] 시 [ ] 분부터

② [ ] 시 [ ] 분 까지 이용함

☞ 시간 응답은 24시 기준으로 드롭다운 형태로 제시 / 분 응답은 00부터 60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드롭다운 형태로 제시

☞ 24시 기준 응답이므로 ② 시간이 ① 시간보다 적을 수 없음

③ [응답자에게 제시하지 않음: 자동계산] 하루 평균 이용 시간 : [ ] 시간 [ ] 분

☞ ③은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 계산되도록 구현

문22) [문20의 ① 응답자만] 현재 이용 중이신 방과후 돌봄교실의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귀하께서 직접 납부를 하지 않아 정확히 알지 못하실 경우 납부하시는 배우자 분 또는 담당 가족에게 확인하시어 가급적 정확히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료, 교육급여로 충당 등 개인적으로 납부하시는 비용이 없는 경우 '0'으로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교실이 아닌, 학교 내에서 하는 초등 방과후 교실만 해당 됩니다.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월 평균									원

☞ 위 응답란은 예시이며 응답자가 금액 단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는 형태로 구현 요망

문23) [문20의 ① 응답자만] 귀 자녀가 이용 중인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 수준은 어떠합니까?

구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 - - - - - →					매우 만족한다
(1) 교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급·간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시설 등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운영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응답 후 문26으로

문24) [문20의 ② 응답자만] 귀하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일반적으로 돌봐주는 성인이 누구인가요?

① 아이의 엄마
② 아이의 아빠
③ 아이의 (친/외)조부모
④ 아이돌보미(정부지원인력)
⑤ 베이비시터(개인적으로 고용한 인력)
⑥ 기타 (자세히 :_____)
⑦ 없음

문25) [문20의 ② 응답자만] 방과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용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 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아서
② 방과후 돌봄교실 우선대상(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아니어서
③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④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⑤ 방과후 돌봄교실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⑦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서
⑧ 방과후 돌봄교실 비용이 부담되어서
⑨ 기타 (자세히 : _____)

☞ 지금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선문6 분류 ③) 부모 모두 응답

문26) 현 정부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해서 지역사회가 다 같이 참여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이 정책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을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 해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① 부모의 늦은 퇴근시간(돌봄기관 운영시간과 맞지 않음)
② 지역사회 인프라(주민센터, 도서관 등) 부족
③ 실제 이용 아동이 적어서(자녀는 하교 후 집에 가기를 원함)
④ 하교 후 지역사회 내 돌봄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안전문제
⑤ 하교 후 지역사회 내 돌봄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불편함
⑥ 하교 후 주로 학원(사교육)을 가야 해서
⑦ 기타 (자세히 :_____)

문27) 귀 가구는 향후 더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쯤 임신하기를 희망 하십니까?

① 현재 임신 중 ☞ 문29로　　② 1년 이내 임신 ☞ 문29로
③ 2~3년 이내 임신 ☞ 문29로　　④ 3년 이상 경과한 후 임신 ☞ 문29로
⑤ 입양할 계획임 ☞ 문29로　　⑥ 임신·출산 계획 없음 ☞ 문28로
⑦ 잘 모르겠음 ☞ 문28로

문28) [문27의 ⑥, ⑦ 응답자만] 자녀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 해주십시오.

① 육아가 힘들어서　　②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③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④ 본인(또는 배우자, 또는 둘 다)의 나이가 많아서
⑤ 본인(또는 배우자, 또는 둘 다)의 건강이 안 좋아서　　⑥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⑦ 기타 (자세히 :_____)

☞ 응답 후 문29로

문29) 정부는 지난 8월, 2024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가 빨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이 영유아기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찬성한다
② 늦은 하교는 아이 입장에서 힘들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③ 늦은 하교로 인해 사교육을 줄일 수 있어서 찬성한다
④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
⑤ 기타 (자세히 :_____)

Ⅴ.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의 사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앞서 응답하신 자녀를 기준으로 계속 응답 해주십시오.

☞ 본 파트 Ⅴ는 선문6의 ①, ②, ③ 으로 분류된 응답자 대상으로 제시함

문30) 귀 자녀가 하고 있는 사교육의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제외한 개수로 기재 해주십시오.

총 [ ] 개 ☞ 0개 = 문33으로 / 1개 이상 = 문 32로 이동

문31) [문30 응답이 1 이상인 응답자만] 귀 자녀가 하고 있는 사교육 비용은 모두 합하여 월 평균 얼마입니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은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 해주십시오.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월 평균									원

☞ 위 응답란은 예시이며 응답자가 금액 단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는 형태로 구현 요망

문32) [문30 응답이 1 이상인 응답자만] 앞서 응답하신 자녀의 사교육비가 귀 댁의 가구 경제에 얼마나 부담 되십니까?

문 항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매우 부담된다						
사교육비 가구경제 부담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3) 2018년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귀하는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대상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이 시기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은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를 찬성한다
② 이 시기에는 모국어(한글) 습득이 더 중요하므로 폐지를 찬성한다
③ (결국) 사교육(학원, 학습지)해야 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므로 폐지를 반대한다
④ 외국어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좋으므로 폐지를 반대한다
⑤ 기타 (자세히 :_____)

Ⅵ. 자녀가 없는 성인 대상의 질문입니다.

☞ 본 파트 Ⅵ는 선문6의 ④ 으로 분류된 응답자 대상으로 제시함

문34) 선문 2의 ①, ③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결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좋은 배우자가 생기면 할 계획이다 ②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에 할 계획이다
③ 결혼은 안 할 계획이다 ④ 기타 (자세히 :_____)

문35) 귀하는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현재 임신 중 ☞ 배문1로 ② 임신·출산 계획 있음 ☞ 문36으로
③ 입양할 계획임 ☞ 배문1로 ④ 임신·출산 계획 없음 ☞ 문37로
⑤ 잘 모르겠음 ☞ 문37로

문36) [선문2의 ②(기혼) 응답자이면서 문35의 ② 응답자에게만] 향후 언제쯤 임신하기를 희망하십니까?

① 1년 이내 임신 ② 2~3년 이내 임신
③ 3년 이상 경과한 후 임신
☞ 응답 후 배문1로

문37) [문35의 ④, ⑤ 응답자만] 자녀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 해주십시오.

① 육아가 힘들어 보여서 ②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③ 일·가정 양립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④ 본인의 나이가 많아서
⑤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서 ⑥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⑦ 기타 (자세히 :_____)

Ⅶ.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문1) [선문 6의 ①, ②, ③ 응답자에게만] 지금까지 응답하신 자녀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① 아빠 ② 엄마

배문2) [선문 6의 ①, ②, ③ 응답자에게만] 귀하와 귀 배우자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셨으면 -1을,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으셨으면 -2를 하시면 만 나이가 됩니다.

① 본인	② 배우자
만 ☐☐ 세	만 ☐☐ 세

☞ 선문 2 ③ 응답자인 경우(이혼/사별이면서 자녀가 있어서(선문6 ①~③) 조사대상에 포함된 경우 배우자 나이 질문은 미제시

배문3) 선문 6의 ①, ②, ③ 이면서 선문2 ②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선문 6의 ④ or 선문 6의 ①, ②, ③ 이면서 선문2 ③ 응답자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2-3년제)대 재학
③ 전문(2-3년제)대 졸업 ④ 4년제 대학 재학
⑤ 4년제 대학 졸업 ⑥ 대학원 이상

☞ 본인과 배우자로 물어볼 시 본인과 배우자 응답을 각각 받도록 응답방식 구현 / 본인만 물어볼 시 단수응답 구현

배문4) 선문 6의 ①, ②, ③ 이면서 선문2 ②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선문 6의 ④ or 선문 6의 ①, ②, ③ 이면서 선문2 ③ 응답자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전업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 본인과 배우자로 물어볼 시 본인과 배우자 응답을 각각 받도록 응답방식 구현 / 본인만 물어볼 시 단수응답 구현

배문5) 선문 6의 ①, ②, ③ 이면서 선문2 ② 응답자 귀 댁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선문 6의 ④ or 선문 6의 ①, ②, ③ 이면서 선문2 ③ 응답자 귀하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개인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⑤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⑦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⑧ 500만원 ~ 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배문6)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자가 ② 전세 (월세 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⑥ 무상 (관사, 사택 등)
⑦ 부모님 집 ⑦ 기타 (자세히 : _____)

☞ 보기 ⑦은 선문 6의 ④(미혼 성인)에게만 노출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8. 기관조사 설문지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교사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자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연구를 매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그 첫 번째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육아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초저출산 현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육아정책이 중요한 이 시기의 육아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님과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담당자 : 성과공유팀 전문연구원
김 문 정 (02-398-7719)

▣ 조사실시기관 : (주) 케이스탯리서치
▣ 담당자 : 연구1본부
임 창 모 차장 (02-6188-6021)

기본 조사관리 사항

선문1) [Hidden Question ☞ 응답자 미제시] 기관 구분 대분류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 리스트 정보로 자동 입력

선문2) [Hidden Question ☞ 응답자 미제시] 기관 구분 세부

① 국립 유치원 ② 공립단설 유치원 ③ 공립병설 유치원
④ 사립법인 유치원 ⑤ 사립사인 유치원 ⑥ 국공립 어린이집
⑦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⑧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⑨ 민간 어린이집
⑩ 가정 어린이집 ⑪ 직장 어린이집 ⑫ 부모협동 어린이집

☞ 리스트 정보로 자동 입력

선문3) [Hidden Question ☞ 응답자 미제시] 기관 소재지

[ ] 시/도 [ ] 시/군/구 [ ] 동/읍/면

☞ 리스트 정보로 자동 입력

선문4) 기관에서의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① 원장 ② 교사

Ⅰ. 저출산에 대한 체감 및 원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매우 심각하다						
저출산 심각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각 항목별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매우 영향을 미친다						
(1) 비싼 주거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불안정한 고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낮은 임금(소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높은 물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젠더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높은 양육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높은 사교육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장시간 노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만혼(결혼연령이 늦어져서 출산도 적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불임·난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 위의 문2에서 나열해드린 12개 저출산 원인들 중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원인을 중요한 순서대로 5개를 꼽아서 보기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① 비싼 주거비
② 불안정한 고용
③ 낮은 임금(소득)
④ 높은 물가
⑤ 젠더 불평등
⑥ 높은 양육비
⑦ 높은 사교육비
⑧ 장시간 노동
⑨ 만혼(결혼연령이 늦어져서 출산도 적음)
⑩ 불임·난임
⑪ 결혼관·자녀관 등 의식변화
⑫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Ⅱ. 다음은 현 정부의 중요한 육아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혁신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 장기화 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2개 정책들의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초 저출산 해결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매우 중요하다
(1)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 장기화 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4개 정책들의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초 저출산 해결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매우 중요하다
(1)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6) 장기화 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10개 정책들의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초 저출산 해결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매우 중요하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일·가정양립 재원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만0~5세 월10만원 아동수당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아래 설명을 해당 보기번호 응답 시 제시 되도록 구현(제시 방식은 프로그래머 재량에 따름)

③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란?
각 개인이 육아, 가족돌봄, 본인의 질병이나 장애, 교육이나 훈련, 점진적 은퇴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④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란?
현행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취학 전 3년) 1명에게 지원하는 월 22만원의 증액을 의미함.

⑧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이란?
올해부터 정부는 세제개선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 공평한 조세정책을 목표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함(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지급액 인상)

Ⅲ. 다음은 현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 다음은 현 정부의 주요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입니다. 다음 2개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유아교육·보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1)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교사, 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8) 우리나라 유아 교육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2개 정책들의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유아교육·보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1)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9) 우리나라 보육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4개 정책들의 중요도는 어떠합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보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1)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Ⅳ. 다음은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무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휴식시간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파트 Ⅳ는 선문1의 ① 기관 응답자(어린이집 원장, 교사) 대상으로 제시함

문10) 귀원에서는 현재(설문조사 응답 기준) 교사의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하고 계십니까?

① 근무 4시간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한다 ☞ 문12로
② 근무 8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한다 ☞ 문12로
③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보장하고 있다 ☞ 문12로
④ 보장하지 않고 있다 ☞ 문11로
⑤ 기타 (자세히:_____) ☞ 문11로

문11)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유아 발달 특성상 교사가 휴식할 수 없다
② 담당 반을 교사 혼자 보육을 하므로 교사가 휴식할 수 없다
③ 학부모들의 눈치가 보여 교사가 휴식할 수 없다
④ 기타 (자세히: _____)

문12)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다음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1가지만 선택 해주십시오.

① 유치원과 동일하게 기관운영시간을 변경한다(기본교육과정 + 방과후 과정)
② 보조교사 등 인력(인건비)을 대폭 지원한다
③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한다
④ 투담임제(두개 반을 한 반으로 합쳐서 2명의 교사가 같이 운영하는 방식)를 활성화한다
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행보다 작게 조정한다
⑥ 기타 (자세히:)

Ⅴ. 마지막으로 통계 분류를 위한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을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배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배문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셨으면 -1을,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으셨으면 -2를 하시면 만 나이가 됩니다.

만 [ ] 세

배문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졸 ② 2년제 전문대 졸 ③ 3년제 전문대 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졸

배문4) 선문1 ①(어린이집 원장/교사)용 문구 어린이집 교사자격증을 최초로 취득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선문1 ②(유치원 원장/교사)용 문구 유치원 교사자격증을 최초로 취득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① 보육교사교육원 ② 2년제 전문대 ③ 3년제 전문대
④ 4년제 대학 ⑤ 대학원

☞ 선문1 ②(유치원 원장/교사) 응답자는 보기①(보육교사 교육원) 미제시

배문5)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최상위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1) 유치원	(2) 어린이집

① 유치원 원장 ② 유치원 원감 ③ 유치원 수석교사
④ 유치원 정교사 1급 ⑤ 유치원 정교사 2급 ⑥ 어린이집 원장
⑦ 보육교사 1급 ⑧ 보육교사 2급 ⑨ 보육교사 3급

☞ (1) 유치원에는 보기 ①~⑤만 응답할 수 있음 / (2) 어린이집에는 보기 ⑥~⑨만 응답할 수 있음

☞ (1)과 (2) 중 하나에는 반드시 응답 되어야 함 / (1)과 (2) 모두에 응답 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배문6) 귀하의 총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원장님은 교사 시절의 경력을 제외한, '원장으로서의 경력'만을 기준으로 응답 해주십시오.
※ 선생님 역시 이전 경력과 상관 없이 교사로서의 경력만을 기준으로 응답 해주십시오.

총 [ ][ ] 년 [ ][ ] 개월

☞ 년은 0부터 60까지를 range로, 드롭다운 형태로 개발

☞ 개월은 0부터 12까지를 range로, 드롭다운 형태로 개발

배문7) [선문 4의 ① 응답자만] 귀 원의 개원 시간과 폐원 시간은 각각 어떠합니까?

① 문 여는 시간 : [ ] 시 [ ] 분

② 문 닫는 시간 : [ ] 시 [ ] 분

☞ 시간 응답은 24시 기준으로 드롭다운 형태로 제시 / 분 응답은 00부터 60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드롭다운 형태로 제시

☞ 24시 기준 응답이므로 문 닫는 시간이 문 여는 시간보다 먼저일 수 없음

③ [응답자에게 제시하지 않음: 자동계산] 하루 평균 운영 시간 : [ ] 시간 [ ] 분

☞ ③은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 계산되도록 구현

배문8) [선문 4의 ② 응답자만] 귀하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각각 어떠합니까?

※ 당직 등 특이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 해주십시오.

① 출근 시간 : [ ] 시 [ ] 분

② 퇴근 시간 : [ ] 시 [ ] 분

☞ 시간 응답은 24시 기준으로 드롭다운 형태로 제시 / 분 응답은 00부터 60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드롭다운 형태로 제시

☞ 24시 기준 응답이므로 문 닫는 시간이 문 여는 시간보다 먼저일 수 없음

③ [응답자에게 제시하지 않음: 자동계산] 하루 평균 근무 시간 : [ ] 시간 [ ] 분

☞ ③은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 계산되도록 구현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87 952848
ISBN 979-11-87952-84-8